

지방자치단체 공유경제 활용 방안

| 김상민 · 임태경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지방자치단체 공유경제 활용 방안

| 김상민 · 임태경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연구진

김 상 민 (부 연구 위원)

임 태 경 (부 연구 위원)

|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

지방자치단체 공유경제 활용 방안

발 행 일 : 2019년 12월 31일

발 행 인 : 윤태범

발 행 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 소 : (26464)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반곡동)

전 화 : 033-769-9999

판 매 처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02-394-0337

인 쇄 처 : 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I S B N : 978-89-7865-474-6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진의 견해로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는 있으나 무단전제나 복제는 금합니다.

서문

4차 산업혁명 등 최근의 기술발달과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모델 발달에 기반하여 등장한 공유도시 개념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인구, 사회적 변화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기존에 사적 부문에서 주로 활발히 논의되었던 공유경제 모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공부문에서도 공유경제 활용의 필요성 및 지원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유희 물질·인적자본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공유경제 개념의 확산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에 기반한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도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지자체 차원에서 공유경제를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에서 공유경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성과 세부적 전략마련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공유경제 정책 추진의 방향성과 세부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역의 현황 및 여건을 고려하고, 지역의 특성과 정책 우선순위에 기반하여 공유경제 정책을 도입하고자 할 때, 가능한 공유경제 정책 도입의 목적, 그리고 각 목적에 따른 단계별 세부 전략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정책 지원체계 구축 시 고려할 사항을 검토함으로써, 지자체 단위에서 성공적으로 공유경제 관련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연구결과의 도출을 위해 노력한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2019년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김태만

요약

제4차산업 혁명은 사람들의 행태 및 삶의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데, 이러한 4차산업 혁명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개념 중에 하나가 공유경제이다. 공유경제는 물건, 공간, 지식, 재능 등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를 소유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온라인을 기반으로 개인 간 교환, 공유, 대여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 사회적 경제 모델을 지칭한다. 기존의 영리경제와 달리 공유경제는 비가격적인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동안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은 플랫폼기반의 숙박(Airbnb), 차량(Uber) 공유 서비스 등에 초점을 두고 확산되어 왔으며, 타 분야 공유경제 활용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이에 최근에는 민간 소비 중심의 협의의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공유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및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유경제가 사회 전반에 불러올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한다면,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공유경제 활용 및 지원확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공유경제 활용 및 지원확대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은 도시 및 지역단위에서의 공유경제 활용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도 이어진다. 지역 내 유희 물적·인적자본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공유경제 개념의 확산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공유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실제로 지자체 단위에서 공유경제를 활용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이 대표적이다.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도 공유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유경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자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 선도 지자체의 성공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차별적인 정책(사업) 아이디어 발굴이 긴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공유경제 정책 추진의 방향성과 세부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특히 공유경제 개념의 도입 및 활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자체들이 고려할 수 있는 정책추진의 방향 및 단계별 전략, 추진체계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공유경제 정책이 실질적인 지역활성화 전략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우선 제1장에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리고 범위와 방법을 제시한다. 제2장에서는 공유경제와 공유도시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를, 그리고 제3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단위에서의 공유경제 정책 추진 현황을 검토하였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공유경제 활성화 전략의 법적 기반으로 공유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들 조례의 현황 및 내용, 그리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어 미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공유경제 정책동향과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지자체 차원에서 벤치마킹 가능하거나 유의미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공유경제 활용 선도지자체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서울, 부산, 대전 경우 비교적 일찍부터 공유경제 관련 정책을 지역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해 왔으며, 기초단위에서는 전주시가 최근 공유경제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이들 선도사례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유경제 관련 정책(사업)의 목적 및 내용, 그리고 정책 효과를 객관적·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공유경제 개념을 다양한 목적 실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선도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 다양한 유형화를 시도하고(예: 공유 목적(경제적/사회적/환경적), 자원제공 주체(공공자원/민간자원), 자원이용주체(공공분야/민간분야), 공유내용(공간/물품/지식 및 정보/기타) 등), 이를 통해 타 지자체가 공유경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유효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6장에서는 정책분석 및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경제 활용 정책 모델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공유경제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에 있어서는 ‘공유’ 개념 재인식에 기반한 공유도시(지역)로의 전환,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공유정책 방향의 설정, 공유경제에 있어 공공부문

의 역할 인식, 공유경제의 명암을 고려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참여주체간 협력 및 지역사회 합의를 통한 제도 구축 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공유경제 정책 모델 및 전략 수립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공익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목적과 방향성이 정립될 필요가 있으며, 안정적 정책 프레임 구성을 위해서는 정책목표(효과), 공유경제 구성요소, 혁신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유 정책 활용 목적에 따라서는 크게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으로 나누어 정책 목표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정책 목표에 따라 단계별 목표, 세부전략이 다르게 구성될 수 있으며, 각 유형별 세부전략 및 공통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유경제 관련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조례제정, 기본계획 수립, 정기적 실태 조사, 정책 지원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 지원체계 구축의 세부 전략으로는 행정 지원체계의 명확화, (가칭)공유제도개선자문단의 설립 및 운영, 공유경제 중간지원조직 설립(지정) 및 운영, (가칭)공유촉진위원회 설립 및 운영을 통한 민관 협력적 지원체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1. 연구범위	9
2. 연구방법	9
제2장 이론적 논의: 공유경제에서 공유도시로	11
제1절 공유경제의 개념 및 특성	13
1. 공유경제의 개념 및 배경	13
2. 공유경제의 특성과 유형	18
3. 공유경제의 기대효과 및 문제점	24
제2절 공유도시 및 지역활성화	27
1. 공유경제와 도시패러다임의 변화	27
2. 공유도시의 개념	29
3. 도시 및 지역에서의 공유경제 특징	31
4. 공유도시와 지역활성화	35
제3절 연구 분석틀	40
제3장 국내 공유경제 관련 정책 추진 동향	43
제1절 중앙정부의 공유경제 정책추진 동향	45
제2절 지방정부의 공유경제 정책추진 동향	54
1. 공유 관련 조례 분석	54

목 차

2. 공유 관련 동향 분석	60
제3절 시사점	67
제4장 해외 공유경제 정책 동향 및 사례	71
제1절 미국의 공유경제 정책 동향 및 사례	73
1. 공유경제 추진 배경 및 분야	73
2. 미국의 공유경제 관련 정책 추진 동향	76
3. 미국의 공유경제 정책 사례	81
제2절 일본의 공유경제 정책 동향 및 사례	99
1. 일본의 공유경제 추진배경 및 분야	99
2. 일본정부의 공유경제 관련 정책 추진 동향	107
3. 공유경제를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례	109
제3절 시사점	113
1. 정책의 효과 및 문제점	113
2. 쟁점 및 과제	114
제5장 공유경제 활용 선도 지자체 사례분석	117
제1절 서울특별시	119
1. 정책 추진 배경	119
2. 정책 분석	121
3. 사례특성: 정책효과 및 문제점	136
제2절 부산광역시	140
1. 정책 추진 배경	140
2. 정책 분석	143
3. 사례특성: 정책효과 및 문제점	156

제3절 대전광역시	160
1. 정책 추진 배경	160
2. 정책 분석	162
3. 사례특성: 정책효과 및 문제점	171
제4절 전주시	173
1. 정책 추진 배경	173
2. 정책 분석	174
3. 사례특성: 정책효과 및 문제점	181
제5절 사례분석 종합 및 시사점	184
1. 사례별 특성 비교	184
2. 사례 종합 특성 및 시사점	188
제6장 지방자치단체 공유경제 활용 정책 모델 및 전략	195
제1절 기본방향	197
1. ‘공유’ 개념 재인식에 기반한 공유도시(지역)로의 전환	197
2.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공유정책 방향 설정	198
3. 공유경제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 인식	199
4. 공유경제의 명암(明暗)을 고려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201
5. 참여 주체 간 협력 및 지역 사회 합의를 통한 제도 구축	202
제2절 공유경제 정책 모델 및 전략	203
1. 정책 목표의 설정 및 방향성 정립 모델	203
2. 정책 목표에 따른 유형화 및 세부 전략	205
제3절 법·제도적 기반구축	215
1. 조례 제정	215
2. 기본계획 수립	216



목 차

3. 정기적 실태조사	216
4. 정책 지원체계 구축	217
참고문헌	221
Abstract	226



표 목차

[표 2-1] 공유경제 유사 개념	14
[표 2-2]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적 접근	15
[표 2-3] 공유경제 필수요소	19
[표 2-4] 전통경제와 공유경제 비교	20
[표 2-5] 공유경제 작동체계 세 가지 유형	22
[표 2-6] 이용자원에 따른 공유경제 유형	23
[표 2-7] 플랫폼 시장구조에 따른 공유경제 유형	24
[표 2-8] 공유 패러다임	27
[표 2-9] 공공주체(지자체)의 공유경제 활용 예시	32
[표 2-10] 공유경제 참여의 목적	33
[표 2-11] 공유도시의 목적 및 쟁점	34
[표 2-12] 일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경제 활용 유형 및 예시	37
[표 2-13] 자원 활용 주체 및 제공주체에 따른 공유경제 유형 특성	41
[표 3-1]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46
[표 3-2] 주차공유사업 개선과제	47
[표 3-3] 숙박분야 활성화 방안	49
[표 3-4] 교통분야 활성화 방안	50
[표 3-5] 공간분야 활성화 방안	51
[표 3-6] 공유경제의 제도적 활성화 방안	52
[표 3-7] 공유 관련 조례 보유 현황(2019년 4월 기준)	54
[표 3-8] 연도별·지역별 조례 제정 현황	56
[표 3-9] 공유 관련 조례 소관부서 현황	56
[표 3-10] 지역별 공유 관련 조례 소관부서 현황	57
[표 3-11] 지원내용별 지자체 현황	59
[표 3-12] 계획 수립 관련 지자체 현황	59
[표 3-13] 공유경제 정보관리시스템 및 지원센터 관련 지자체 현황	60
[표 3-14] 공유 관련 조례의 누적 현황	61

표 목차

[표 3-15] 공유 관련 조례의 지역별 누적 현황	61
[표 3-16] 공유 조례의 확산 유형	62
[표 3-17] 공유 정책 도입 목적 및 추진 체계 비교(서울 vs. 부산)	63
[표 3-18] 공유 촉진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범위	63
[표 3-19]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의 기본원칙 및 지원내용	64
[표 3-20] 공유 계획 수립 정도에 따른 지자체 현황	65
[표 3-21] 공유경제 거점 확보 정도에 따른 지자체 현황	66
[표 3-22] 정책 추진 동향 시사점	69
[표 4-1] 「State Legislation for Transportation Network Companies (TNCs)」법 세부규정 사항	80
[표 4-2] 운송수단공유(Shared Mobility) 장려위한 미국 주·지방 정부의 정책사례	83
[표 4-3] 미국의 숙박공유 플랫폼	85
[표 4-4] 사회적관계추구형의 공간공유사례	87
[표 4-5] 미국에서 키친인큐베이터가 활성화 된 상위 10개 지역	90
[표 4-6] 데이터 공유 웹사이트 운영 중인 미국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	92
[표 4-7] 자원활용 측면에서의 물품공유(Sharing Goods)에 대한 미국의 정책사례 · 94	
[표 4-8] 자원활용 측면에서의 공간공유(Shared Space)에 대한 미국의 정책사례 · 97	
[표 4-9] 미국의 공유경제 정책사례 종합	98
[표 4-10] 자전거 공유서비스	102
[표 4-11] 화물 공유서비스	103
[표 4-12] 숙박공유 서비스에 대한 신규 법안 주요 내용	108
[표 4-13] 이용자 보호 사례 및 기대효과	108
[표 4-14] 일본 공유경제 정책사례 종합	112
[표 4-15] 해외(미국·일본) 공유경제 정책동향 및 사례 종합	116
[표 5-1] 연도별 '공유도시 서울' 정책 주요 내용	121
[표 5-2] 공유서울 1·2기 정책 목표 및 내용의 변화	122

[표 5-3] 제1·2기 공유도시 서울 정책 추진 방향 비교	123
[표 5-4] 공유서울 1기 주요 정책목표 및 세부 정책내용	125
[표 5-5] 공유서울 2기 주요 정책목표 및 세부 정책내용	127
[표 5-6] 2018년도 공유서울 정책 추진 목표 및 주요 과제	128
[표 5-7] 서울시 공유촉진 우선 추진 사업의 유형화	129
[표 5-8] 공유단체·기업 지정 요건: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 ·	131
[표 5-9] 서울시 공유기업·단체 지원 사업 추진 내역	132
[표 5-10] 부설주차장 포함 연도별 공유 주차면 수	133
[표 5-11] 자원활용형 공유 사업	134
[표 5-12] 공유서울 1·2기 정책 효과	137
[표 5-13]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관련 정책추진 배경	140
[표 5-14]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관련 히스토리	141
[표 5-15] 부산광역시 공유경제촉진조례 입법 현황	142
[표 5-16]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추진 분야 및 추진과제	143
[표 5-17] 부산광역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	144
[표 5-18]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기업 촉진지원 심사기준	145
[표 5-19] 부산광역시 공유형 도시재생 활성화 단계별 시책(안)	145
[표 5-20] 부산광역시 공유촉진 사업의 유형화	147
[표 5-21]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유희공간 활용현황(2019년 6월 기준)	153
[표 5-22] 부산광역시 공유 관련 조직	154
[표 5-23] 공유네트워크 정의	161
[표 5-24]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조례 내용	162
[표 5-25] 공동체 정책과 소관 공유경제 관련 사업 내역	163
[표 5-26] 주차공유 사업 내용	164
[표 5-27] 자전거 공유 사업내용	165
[표 5-28] 청년다락 사업 세부내용	166
[표 5-29] 대전시 2018년 공동체 활성화 주요 사업	167

표 목차

[표 5-30] 대전광역시 공유경제 사업의 유형화	168
[표 5-31] 사회적관계추구형 사업	169
[표 5-32]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사업	170
[표 5-33] 전주시 공유경제촉진조례 입법 현황	173
[표 5-34] 전주시 공유경제 단계별 정책목표	175
[표 5-35] 전주시 세부 정책 내용	175
[표 5-36] 전주시 공유경제촉진 시범사업의 유형화	177
[표 5-37] 사례분석 종합	186
[표 5-38] 유형별 자원활용 특성	190
[표 6-1] 공유도시(지역)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200
[표 6-2] 공유경제 정책 프레임 구성 요소	203
[표 6-3] 비즈니스형 단계별 전략	207
[표 6-4] 지역사회문제해결형 단계별 전략	208
[표 6-5] 사회적관계추구형 단계별 전략	209
[표 6-6] 자원활용형 단계별 전략	211
[표 6-7] 공유인식 확산 방안	214
[표 6-8] 조례의 주요 내용(안)	215
[표 6-9] 공유경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안)	216
[표 6-10] 실태조사 주요 내용(안)	217
[표 6-11] 공유경제 중간지원센터의 주요 역할(안)	219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흐름도	10
[그림 2-1] 공유경제와 유사한 개념	14
[그림 2-2]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18
[그림 2-3] 전통경제, 공유경제, 사회적경제 개념 비교	21
[그림 2-4] 사회, 제도, 공간의 변화	28
[그림 2-5] 도시 패러다임의 변화	29
[그림 2-6] 공유도시의 구성	30
[그림 2-7] 지역활성화를 위한 공유경제 적용 발전단계	39
[그림 2-8] 자원 제공주체 및 활용주체에 따른 유형화	40
[그림 2-9] 연구 분석틀	42
[그림 3-1]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48
[그림 3-2] 연도별·지역별 공유 관련 조례 제정 현황	55
[그림 3-3] 공유관련 조례의 정책 유형	58
[그림 4-1]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유경제 로드맵	74
[그림 4-2] 미국의 단기숙박공유(Short-Term Rental) 합법화(Legislation) 현황 ..	78
[그림 4-3] 미국의 「State Legislation for Transportation Network Companies (TNCs)」법 도입 현황 (2018년 기준)	79
[그림 4-4] 테스크레빗 사이언스익스체인지 공유플랫폼	86
[그림 4-5] 미네소타주의 「Fix_it Clinics」 프로그램	88
[그림 4-6] DATA.GOV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	91
[그림 4-7] 시카고 해럴드 워싱턴 공공도서관의 3D프린터기 공유서비스현장	93
[그림 4-8] Community Shared Solar Energy Program에 참여중인 주(States) ..	95
[그림 4-9] 일본의 공유경제 시장 규모 추이	99
[그림 4-10] 공유경제의 일본기업 사례	100
[그림 4-11] 메르카리의 공유경제 비즈니스	101
[그림 4-12] 스페이스 마켓 특징	104
[그림 4-13] 일본의 지식·재능 공유시장 전망	105

그림 목차

[그림 4-14] 애니타임즈 모델의 특징	106
[그림 4-15] 타임티켓 모델의 특징	106
[그림 4-16] 낯은 은행을 활용한 미술관(BankART1929)	110
[그림 5-1] ‘공유서울’ 추진 경과	120
[그림 5-2] 시기별 공유서울 정책 목표 변화	124
[그림 5-3] 공유서울 정책 추진체계	136
[그림 5-4] 공유경제 부산 홈페이지	141
[그림 5-5] 「부산청년 우리집」 셰어하우스 조성지 모습	146
[그림 5-6] 부산광역시형 공유주택 개념도	149
[그림 5-7] 「갈매기 키즈 도서관」 공유 플랫폼	151
[그림 5-8] 자원활용형 공유개념도	152
[그림 5-9] 부산시 공유경제 정책 추진체계	155
[그림 5-10] 공유네트워크(Sharing Network)	161
[그림 5-11] 대전 공유경제 추진체계	171
[그림 5-12] 전주시 공유경제 정책 추진체계	180
[그림 6-1] 지자체 공유경제 정책 수립 모델	204
[그림 6-2] 정책목표에 따른 유형화, 정책 대상 및 정책수단의 고려	205
[그림 6-3] 공유경제 통합플랫폼 운영 사례(서울시, 부산시)	213
[그림 6-4] 민-관 협력적 지원체계(안)	220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016년 1월에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서는 초연결·초지능·대융합의 시대로 들어가는 4차산업 혁명의 시작을 선포하였다. 이러한 4차산업 혁명은 도시 형태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행태 및 삶의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4차산업 혁명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떠오르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공유경제이다. 타임지(TIME)는 공유경제를 ‘세상을 바꾸는 10가지 아이디어’로 선정하여 그 발전 가능성을 강조하였으며, 포브스(Forbes)는 공유경제를 주목해야할 트렌드로 지정하고, 그 규모가 25%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기도 하였다.

공유경제는 물건, 공간, 지식, 재능 등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를 소유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온라인을 기반으로 개인간 교환, 공유, 대여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 사회적 경제 모델을 지칭한다. 기존의 영리경제가 가격을 통한 정보, 인센티브, 자원 배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공유경제는 “비가격적인 사회적 관계가 주요 역할”을 한다고 본다(Lessig, 2008).

최근 미국, 영국, 일본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유경제 개념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는 전 세계 공유경제 관련 산업 규모가 2015년 150억 달러 수준에서 2025년 3,350억 달러(한화 370조원)로 약 20배 이상 커질 것이라 전망 하였다(성영조 외, 2016). 이러한 공유경제 성장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는 사물인터넷(IT 기술의 발달과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 그리고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의 위축,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 공동체 및 능동적 소비자의 탄생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김은란 외, 2015)

문제인 정부도 관계부처 협동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2019. 1. 9.)하고,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및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을 명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숙박, 교통, 공간, 금융·지식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특히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기존 공유경제에 대한 초점은 주로 협력적 소비와 관련하여 P2P 또는 B2C 거래형태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모델에 치중된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그간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은 대표적 성공모델로 일컬어지는 플랫폼기반의 숙박(Airbnb), 차량(Uber) 공유 서비스 등에 한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타 분야 공유경제 활용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이에 최근에는 민간 소비 중심의 협의의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공유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및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공유경제가 사회 전반에 불러올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한다면, 민간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공유경제 활용 및 지원확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공유경제 활용 및 지원확대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은 도시 및 지역 단위에서의 공유경제 활용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도 이어진다. 지역 내 유희·물적·인적 자원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공유경제 개념의 확산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공유경제를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공유경제 개념은 유희 자원 활용을 통해 공급 측면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된다.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를 매개하는 공유경제 모델의 경우 로컬, 즉 지역적 차원의 네트워크 효과를 발생시키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학계 등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포함한 ‘新지역발전방안’ 등의 정책방안 도출이 이뤄지고 있어, ‘공유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함께 고려하는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된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여기에는 공유경제가 유희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통해 지역단위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역에서도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타난다. 공유경제는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배제에 직면한 현실 문제를 전통적 시장경제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hybrid) 경제로서 계속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조용준, 2018), 도시 및 지역 내 유희자원의 공유를 통한 협력적 소비는 불필요한 생산을 감소시켜 과잉생산 및 과잉소비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역 내 유희자원과 유희공간 등의 경제적·사회적 가치와 활용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지역사회 내에서의 새로운 관계형성 및 서로 다른 부문 간 협력에 기반한 공유활동 확산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상존한다. 즉 이러한 공유경제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효과는 지역사회의 주요 문제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 및 지역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의 공유경제 개념 도입 및 확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경우 인구고령화 및 저출산 등 사회 핵심적 이슈 해결을 위해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경제성장 역시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공유경제를 활용한 새로운 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공유도시이다. 여기서 공유도시란 인구감소 및 고령화, 환경오염 등 도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문제점을 공공서비스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유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도시를 의미하며, 일본 도시의 다양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유서비스의 활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도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으며, 공유경제를 활용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2012년 ‘공유도시 서울’을 정책목표로 내세우면서, ‘공유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지역단위에서 공유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일례로, 2019년 4월 기준 전국 68개 지자체에서 ‘공유경제 지원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공유(경제)를

촉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으로 읽힌다.

그런데 지자체별로 공유경제 관련 정책 목적 및 내용을 살펴보면, 세부 내용이 다르며, 정책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역시 상이하다. 예를 들어, 지자체 관련 소관부서를 살펴보면 지역경제 관련부서(민생경제과, 공정경제과,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등), 혁신·참여 관련 부서(사회혁신담당관, 참여혁신단), 도시재생 관련 부서(도시재생정책과) 등으로 공유경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원체계가 다양하며, 이러한 차이는 실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경제) 관련 정책(사업) 목적 및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공유도시를 시민사회, 기업, 공공부문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공유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로 정의하고 있으며, 시장직속 서울혁신담당관 내 공유도시팀을 조직하고 공유경제 관련 정책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반면 부산시의 경우 공유단체 및 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공유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전시의 경우에는 2014년부터 과잉소유·과소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네트워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데, 대전시의 공유경제 정책은 공유 활성화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및 사회관계망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이들 서울, 부산, 대전 등 선도 지자체 이외에 타 기초 지자체의 경우에도 공유경제 정책 도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만, 단순히 선도 지자체의 성공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차별적인 정책(사업) 아이디어 발굴이 긴요한 실정이다. 즉, 각 지자체마다 고유한 인구사회적, 환경적, 문화적 특성이 다르고, 해결해야할 지역 문제의 우선순위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예: 청년 일자리 창출 VS 지역 공동체 활성화), 이러한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유경제 정책 도입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최근 공유경제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상당부분이 공유경제의 이론적 개념 소개 및 국내외 동향 등에 치중하고 있으며, 실제 지자체 단위에서 공유경제 관련 정책의 수립 시 고려할 수 있는 정책 목표 및 전략의 설정,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는 것도 본 연구의 주요 배경이 되었다.

2. 연구목적

공유도시는 4차 산업혁명 등 최근의 기술발달과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모델 발달에 기반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인구, 사회적 변화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으로써 도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다(김시정, 2018). 즉, 저성장, 고령화 등으로 인한 구조적 변화 및 환경오염 등으로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응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그 이론적·정책적 논의의 확대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동수단 및 주거 공간의 공동 이용, 공동 취사 등 지리적 공동체 단위의 공유 활동이 증대됨으로써 고립이나 사회적 배제의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로 및 도시쇠퇴를 겪고 있는 지역에서의 생활환경 낙후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에 있어서도 공유 도시 모델이 새로운 관리방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일례로, 쇠퇴지역에서는 공유 활동을 통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한다. 한편 대도시 도심지역은 인구 과밀로 인해 환경오염 및 교통 문제가 심각함에도 높은 지가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데, 이러한 지역에서도 공유활동을 통한 유희자원 활용은 주요한 해결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각 지자체 차원에서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증대해 왔는데, 이는 지자체 단위에서의 공유경제 활용 필요성 뿐만 아니라, 그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지자체 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유경제 관련 정책의 목표와 수단은 무엇일까? 본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공유경제 정책 추진의 방향성과 세부 전략을 모색하는데 있다. 특히 지역의 현황 및 여건을 고려하고, 지역의 특성과 정책 우선순위에 기반하여 공유경제 정책을 도입하고자 할 때, 가능한 공유경제 정책 도입의 목적, 그리고 각 목적에 따른 세부 전략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정책 지원체계 구축 시 고려할 사항을 검토함으로써, 지자체 단위에서 성공적으로 공유경제 관련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공유경제와 공유도시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단위에서의 공유경제 정책 추진 현황을 검토한다. 특히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공유경제 활성화 전략의 법적 기반으로 공유경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들 조례의 현황 및 내용, 그리고 특성을 분석한다. 이어 미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공유경제 정책동향과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지자체 차원에서 벤치마킹 가능하거나 유의미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서울, 부산, 대전의 경우 비교적 일찍부터 공유경제 관련 정책을 지역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선도사례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유경제 관련 정책(사업)의 목적 및 내용, 그리고 정책 효과를 객관적·비교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특히 공유경제 개념을 다양한 목적 실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선도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 다양한 유형화를 시도하고(예: 공유 목적(경제적/사회적/환경적), 자원제공 주체(공공자원/민간자원), 자원이용주체(공공분야/민간분야), 공유내용(공간/물품/지식 및 정보/기타) 등), 이를 통해 타 지자체가 공유경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유효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는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의 여건 및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공유경제 정책 도입의 목적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정책 모델 및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정책 함의를 도출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공유경제 개념의 도입 및 활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자체들이 고려할 수 있는 정책추진의 방향 및 단계별 전략, 추진체계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공유경제 정책이 실질적인 지역활성화 전략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활성화 전략으로 활용가능한 공유경제 관련 정책의 추진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다. 따라서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포괄한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단위 공유경제 관련 정책동향을 파악의 일환으로 공유경제 관련 조례의 수, 내용, 그리고 특성을 분석하는데, 조례분석의 시간적 기준은 2019년 4월, 그리고 공간적 범위는 전국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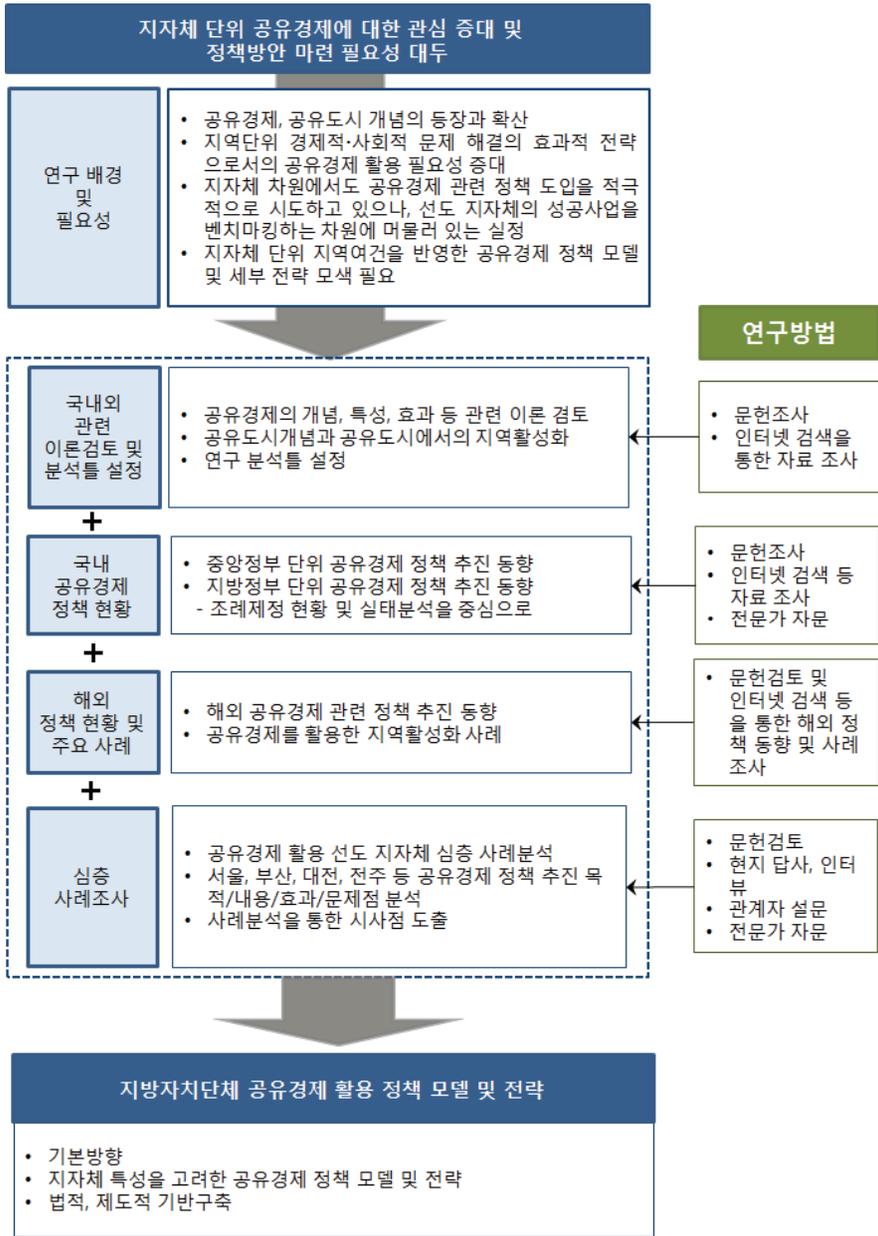
공유경제를 활용하고 있는 선도지자체 사례분석의 범위는 각 지역의 공유경제 관련 정책의 목적, 주요 내용, 특성 등을 본 연구의 분석틀에서 설정하는 주요 목적/자원 제공 및 이용 주체, 공유의 내용 등에 초점을 맞춘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조사, 사례조사, 그리고 주요 관계자 인터뷰 등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공유경제 및 공유도시 관련 국내외 이론을 검토하고, 연구분석틀을 설정한다. 문헌조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공유경제 관련 정책 분석에도 활용된다. 또한 활용가능한 문헌자료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미국과 일본의 공유경제 관련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주요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주요 시사점을 도출한다.

사례조사는 비교적 일찍부터 공유경제 관련 정책을 도입한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이상 광역단위), 그리고 기초단위 지자체(전주시)를 선정하여 각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정책(사업) 추진현황과 실태를 분석한다. 이는 현장 답사 및 주요 관계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측면에서의 공유 정책 효과 및 한계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시사점 및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또한 연구의 전 과정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유경제 정책 모델 수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그림 1-1] 연구흐름도



제2장



이론적 논의: 공유경제에서 공유도시로

- 제1절 공유경제의 개념 및 특성
- 제2절 공유도시 및 지역활성화
- 제3절 연구 분석틀

제1절 공유경제의 개념 및 특성

1. 공유경제의 개념 및 배경

1) 공유경제의 개념

공유경제는(Sharing Economy)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공유경제의 정의는 개인의 유희화된 자산을 개인만의 소유가 아닌 타인과 공유(교환-대여)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형의 자원뿐만 아니라 경험, 지식등과 같은 무형의 자원도 포함된다. 또한 공유경제는 온라인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개인간 거래(P2P)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공유경제는 온라인플랫폼(ICT)을 통해 유희화된 자원들을 여러 수요자가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협력적 소비행태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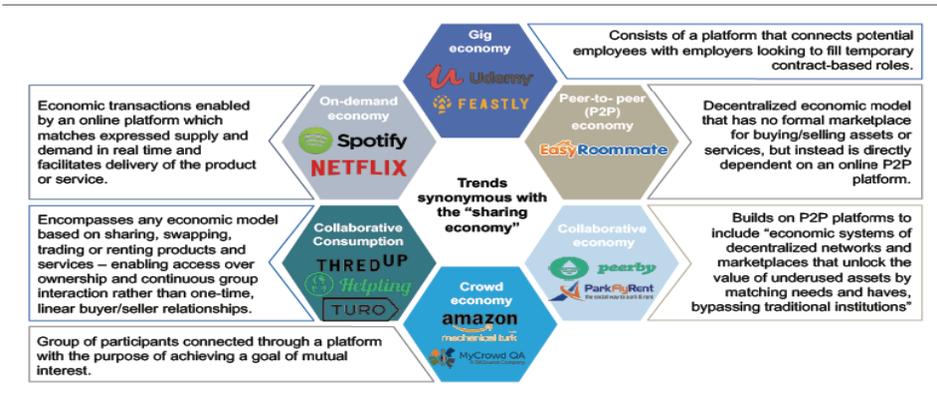
공유경제 개념을 처음 제시한 레식(Lessig)(2008)은 대부분의 인터넷 비즈니스가 가격 기반의 상업경제(Commercial Economy)와 사회적 관계가 중시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혼합 형태에 기반하여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다. 솔츠(Scholz)(2016)는 공유경제의 혜택이 지역사회와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를 통해 혜택을 공유하는 ‘플랫폼 기반의 협력주의(Platform Cooperativism)’에 기반한다고 이해한다. 보츠먼(2013)은 공유경제가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개인들이 소비, 생산, 교육, 금융 등의 분야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협동경제(Collaborative Economy)’로 보고 있다. 이처럼 공유경제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사회적 관계가 중시되는 네트워크 기반 자본주의’로 폭넓게 정의(한국정보화진흥원,

2018)할 수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공유경제의 기본 원칙은 “사람들의 소유(ownership)보다는 이용(utility) 가치와 혜택을 추구”하는 것으로 유·무형자원을 막론하고 낭비되고 버려지는 자원을 공유하는데 있다. 이는 유희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비용대비 효율적 소비를 위함이다(김점삼 외, 2014).

공유경제는 종종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거나, “협력경제(collaborative economy)”와 “P2P 경제(peer-to-peer economy)”, “퓌 경제(pig economy)”, “온디맨드 경제(on-demand economy)”, “군중경제(crowd economies)”와 같은 유사한 개념과 혼용(WEF, 2017)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림 2-1] 공유경제와 유사한 개념



자료: WEF(2017:8)

[표 2-1] 공유경제 유사 개념

개념	내용
접근경제 (Access Econom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과 서비스를 소유하기 보다는 상품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 (access)'에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
협력적소비 (Collaborative Consump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이 생기기 전에는 불가능했을 시장 행동, 즉 임대, 대출, 교환, 선물기증, 공유 등을 새롭게 정의하는 소비자 행동 시스템 • 일회성의 1차적 구매자/판매자 관계가 아니라 소유권 및 그룹 간 지속

개념	내용
	적인 상호 작용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면서 제품 및 서비스의 공유, 교환, 거래 또는 대여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적 모델을 모두 포괄
협동경제 (Collaborative Economy)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자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소유' 하는 사람을 바로 이어주며 거래가 성사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스템 P2P 플랫폼을 기반으로 '분산된 네트워크 및 마켓 플레이스의 경제적 시스템' 을 포괄, 전통 기관을 건너뛰고 필요한 이와 갖고 있는 이를 바로 연결하여 미사용 자산의 가치를 개선
온디맨드경제 (On-Demand Econom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즉각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며 사람이 상품과 서비스를 필요로 할시 바로 배달, 전달하는 시스템
피어경제 (Peer Economy)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간에 자산 교환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촉진함으로써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시스템 자산이나 서비스의 매매를 위한 공식 시장이 없는 분산형 경제 모델로서 온라인 P2P에 의존
긱경제 (Gig Econom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시 계약직을 고용하려는 고용주와 잠재 직원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구성
렌탈경제 (Rental Econom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을 소유하기보다는 수수료를 내고 빌리는 시스템
공유경제 (Sharing Economy)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 간 혹은 개인 간의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자산이나 서비스의 공유를 무료 혹은 수수료를 받고 촉진시키는 시스템

자료: Botsman and Rogers(2010); Pais and Provasi (2015); 박건철 외(2016); WEF(2017); 김시정(2018) 재인용

공유경제의 개념 정의를 시도하는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논의될 수 있다(김시정, 2018). 첫 번째는 공유경제 현상에 대해 거시적이고 시스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광의의 접근이며, 두 번째는 공유경제 활동을 구체적이고 세분화하고 공유경제의 수단적 측면 등 특정 공유경제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는 협의의 접근이다.

【표 2-2】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적 접근

연구자		정의
광의적 접근	Muñoz and Cohen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 내 유휴 활용 자원의 효율성과 최적화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개인과 조직 간의 상품 및 서비스 중개,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경제적 시스템
	Botsman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리적 자원에서 유형자원에까지 활용도가 낮은 자산을 기술에 기반하여 공유하고 이를 통한 금전적, 비금전적

연구자		정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 모델
	WEF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 또는 조직이 잉여 또는 유휴자산을 다양한 형태의 대금 지급이나 서비스를 통해 교환하는 조직화된 상호작용
협회의 접근	Benkler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 공유(sharing goods)는 시장을 통해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유 시스템 내에서 공유 될 수 있는 자원이나 상품을 의미 사회적 공유(social sharing)는 '약하게 연결된 참여자(weakly connected participants)' 간 자유로운 참여와 선물·기부를 토대로 형성되는 '대안적 생산 (alternative modality of production)'을 의미
	Belk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정한 공유(true sharing)는 시장 교환과 선물 제공 모두에서 강조되는 사적 소유를 대체하는 공유 의사 공유(pseudo-sharing)는 외형상 공유 형태를 띠지만 소비자와 공동생산자 간 잠재적 착취를 내포하는 공유로 위장한 비즈니스 관계
	Cockayne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 디맨드' 또는 '공유'경제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웹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를 서비스나 상품에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경제를 의미
	Frenken and Schor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휴자원에 일시적으로 접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제
	Ma Huateng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으로 구성된 대중이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타인과 자신의 유휴자원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활동

자료: Acquier *et al.*(2017); 김시정(2018) 재인용

2) 공유경제의 배경

공유경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사회·경제적인 측면으로는 전통경제(자본주의)에 대한 반성과 기술적 측면에서의 정보통신기술(ICT) 발달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20세기 자본주의 사회구조는 과잉생산과 불필요한 소비를 촉진시키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를 수년간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잉여 및 유휴재화의 발생, 저성장, 실업·취업난, 가계소득의 저하 등 경제적 침체를 심화시켰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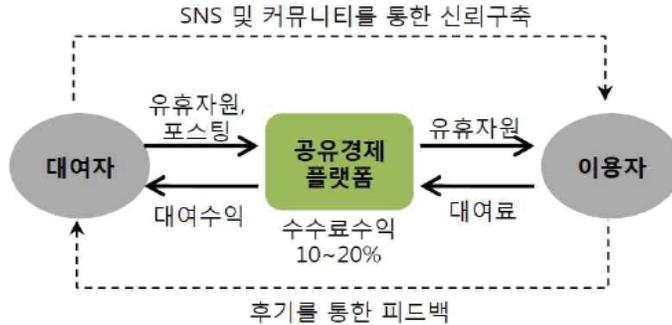
쟁적 소유나 과소비가 아닌, 비용을 줄이면서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전환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자신의 유희화된 자원을 소유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교환하거나 대여, 혹은 임대와 같은 협력적 소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합리적 소비문화가 확산되었다. 즉, 공유경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다(권애라, 2013; 송운강 외, 2018). 뿐만 아니라, 인구 노령화나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 역시 공유경제를 확대시켰다(김민정, 2016).

두 번째로 기술적 측면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은 공유경제를 더욱 확산시켰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발전시켰고, 사람들은 네트워크 내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공유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거래구조가 등장하였다. 소비자가 수동적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 스스로가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가 되고 그 안에서 개인 간 소통 및 참여를 통해 유희화된 자원을 공유하는 거래구조이다(권애라, 2013).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개인간 물품 거래나 대여나 타인에 대한 신뢰와 평판 조회 등에 있어 편리화시켜 다양한 공유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해준다(김점산 외, 2014). 이처럼 금융 위기 이후에 합리적 소비문화의 확산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한 소비를 확대시켰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3) 공유경제 메커니즘

공유경제는 “특정 서비스의 수요자와 해당 서비스를 창출하는 유희자산을 보유한 공급자 간 해당 유희자산을 이용한 시장거래를 ICT 플랫폼이 중개하는 경제(이수밀 외, 2015)”이다. 상품 및 서비스를 대여·이용하는 두 주체, 즉 대여자와 이용자를 양측으로 플랫폼을 통해 작동하는 구조이다.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대여자는 자신의 유희자원을 포스팅하고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유희자원을 일정금액(대여료)을 지불한 후 이를 이용한다. 대여자는 이를 통해 대여 수익을 얻게 된다. 공유플랫폼도 대여자와 이용자 간 거래가 성사되면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얻는다. 즉 공유경제는 이용자, 대여자, 공유경제(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윈-윈(win-win) 구조라는 특징이 있다.

[그림 2-2]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자료: 클라우드산업연구소, 2013, p.23.

2. 공유경제의 특성과 유형

1) 공유경제의 특성

(1) 공유경제의 필수 요소

Botsman(2010) 공유경제가 다른 개념과 구별되는 핵심 요소를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공유경제는 적정규모(critical mass)가 형성되어야 한다. 공유경제는 공유경제 이용자들이 지속가능한 거래가 가능하고 충분히 만족할만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적정 규모(critical mass)의 재화를 갖고 있어야 한다. 둘째, 여분의 자산과 재능(idling capacity)을 활용해야 한다. 자신 소유의 자산과 재능이 활용되지 않고 유휴 상태일 때, 유·무형의 자산과 개인의 능력을 공유한다. 여기에는 땅, 물건, 서비스, 공간 등 공유할 수 있는 개인 소유물들이 포함된다. 셋째, 공유자원에 대한 믿음(Belief in the Commons)이다. 공유경제를 활용하는 것이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의 확대시키고, 이는 공동체가 발전하게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타인 간의 신뢰(Trust between Strangers)가 형성이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공유경제는 플랫폼을 통해 시장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다. 때문에 거래 주체 간의 신뢰가 전제가 되어야 상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Botsman 외, 2010; 이장우 외, 2015; 김형균 외, 2013).

[표 2-3] 공유경제 필수요소

구분	주요내용
적정한 규모 (critical mass)	이용자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
여분의 자산 (idling capacity)	여분의 물건, 공간, 서비스 등 개인 소유의 유휴자산
공유재 믿음 (belief in the commos)	여럿이 공유하면 사용의 가치가 커진다는 공유재의 믿음
당사자 신뢰 (trust between stranger)	대여자와 이용자를 직접 연결하는 사회적 신뢰와 커뮤니티

자료: Botsman 외, 2010; 김형균 외, 2013; 황영모 외, 2015

그 밖의 또 다른 요소로는 첫째,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 (the use of digital technologies to match buyers and sellers)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온라인 시장은 “유휴용량(idle capacity)”을 실시간으로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산의 잠재적 사용자를 소유자와 역동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둘째, 유휴용량의 자본화(capitalizing on idle capacity)이다. 자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산 소유자는 유상 혹은 교환을 통해 여유분 용량의 자산을 활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신뢰검증(trust-verification)이다. 사람들은 공유의 이득을 누리면서도 거래 파트너가 상대방 검증 및 책임 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모델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신뢰검증에는 사용자와 플랫폼 그리고 사용자들 간에 이러한 신뢰를 수립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사용자 리뷰 등급, 제 3자 인증 및 책임 보험 등이 있다(World Economic Forum, 2017).

(2) 전통경제와 공유경제 비교

전통경제는 공급자의 이윤창출, 소비자의 재화의 소유, 가격적 요소가 근간을 이루는 반면, 공유경제는 이윤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는 사회적 가치의 극대화, 물품·서비스가 어느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닌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협력적 소비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공유경제에서는 ICT 플랫폼이 시장거래의 기반이 된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은 소셜네트워크의 활성화에 기여했고 사람들의 소비문화를 변화시켰다(성영조 외, 2016). 공유경제는 플랫폼을 통해 시장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 또는 영세 업체가 거래에 참여하기 쉽다는 이점이 있다(나승권 외, 2017).

한편 전통경제는 경쟁에 바탕을 두고 작동한다면 공유경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 하는데, 공유경제의 수요·공급·거래는 그 바탕에 상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으며, 전통경제는 대량생산된 물건을 싸게 팔아야 하므로 자원 고갈을 초래하지만, 공유경제는 이미 생산된 유휴자원을 재사용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자원 절약적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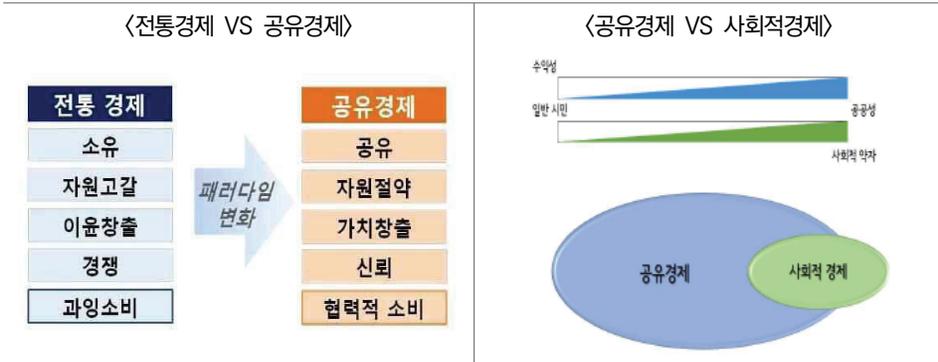
공유경제는 공공성뿐만 아니라 수익성을 추구하는 활동을 포괄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보다는 일반 대중들이 그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경제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평가(김은란 외, 2015:15)된다. 무엇보다 Airbnb(숙박공유)나 우버택시(차량공유)와 같이 국가적 경계를 넘어서는 다국적 플랫폼을 가진 공유기업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을 추구하는 특성을 강하게 보인다.

[표 2-4] 전통경제와 공유경제 비교

항목	전통경제	공유경제
형태	소유	공유
목표	이윤극대화	가치 극대화
목적	재화·용역의 소유권 이전	재화·용역의 이용권 이전
소비방식	개별적 소비	협업적 소비
자원사용	자원의 일방적 사용	자원의 순환적 이용
거래체계	시장 메커니즘	플랫폼 메커니즘
비용	고가	저가
중개자	중개자=공급자, 전문기업	중개자≠공급자, 플랫폼
작동원리	경쟁	신뢰
환경적측면	자원고갈	자원 절약

출처: 김형균 외(2013), 한국디자인진흥원(2014), 황영모(2015), 최길수(2015)를 토대로 수정 작성

[그림 2-3] 전통경제, 공유경제, 사회적경제 개념 비교



자료: 김형균·오재환(2013: 15)

자료: 김은란 외(2015: 15)

2) 공유경제의 유형분류

공유경제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 한편, 공유경제의 다양한 유형화를 통해 공유경제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작동체계에 따른 공유경제 유형화, 이용자원의 종류에 따른 유형화, 그리고 공유경제 플랫폼과 시장구조에 따른 유형화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작동체계에 따른 공유경제 유형화는 크게 ‘상품 서비스 시스템, 재분배 시장, 협력적 생활방식’ 등으로 구분된다(Bostman, 2011; 김형균 외, 2013; 고승윤, 2014; 황영모 외, 2015; 조용준, 2018). 첫째, 상품 서비스 시스템(Product Service System) 유형은 개인 또는 회사 소유의 상품을 필요한 이용자(수요자)에게 공유하거나 대여하는 방식이다. 즉, 이용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sell)가 아닌 대여(offer) 하는 방식이다. 상품이용에 따라 일정 금액의 대여료를 지불해야 한다. 상품 서비스 시스템은 상품을 판매하기보다는 필요할 때 마다 빌림으로써 상품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고, 다양한 상품을 공유함으로써 소유한 자원에 지속성을 더하고 실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제품서비스의 예로는 자동차 공유, 장난감 공유, 빨래방 등이 있다. 둘째, 재분배시스템(Redistributive System) 유형은 활용되지 않거나 버려지는 물건들을 교환해서 새롭게 이용가치를 만드는 형태이다. 즉, 소유자가 이용하지 않는 제품이나 서

비스를 수요자와 공유·교환하여 재화를 재분배 하는 것이다. 재화나 서비스를 필요한 곳에 재분배하여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재분배시스템의 예로는 비슷한 인터넷을 활용한 중고 물품의 교환(물물교환), 포인트로 사용으로 물품 구매, 이용하지 않는 물품의 맞교환, 재활용품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유형 등이 있다. 셋째, 협력적 생활방식(Collaborative Lifestyle)은 개인 혹은 업체가 갖고 있는 재화들을 서로 거래하는 것으로, 공동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물건이나 공간과 같은 유형 자산 뿐만 아니라 기술, 경험, 재능 등과 같은 무형자산까지 공유하는 유형이다. 협력적 생활방식은 물품의 거래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다양한 사회 연결망을 형성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협력적 소비를 촉진시킨다. 특히, 협력적 생활방식은 신뢰도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함께 공유하며 신뢰를 형성한다. 협력적 생활방식의 예로는 물품교환, 재능 및 기술공유, 주차장 공유, 사무실 공유, 크라우드 펀딩과 공유금융 등이 있다.

【표 2-5】 공유경제 작동체계 세 가지 유형

제공 서비스	거래방식	공유자원
상품 서비스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의 소비보다 상품의 이용을 통한 가치 및 실리적 이익에 집중하는 사용 중심의 방식 • 개인 또는 회사가 소유한 다양한 상품을 다른 주체와 공유하거나 대여하는 방식 	자동차, 바이크, 장난감, 도서
재분배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물교환, 현금이나 포인트로 물품 구매 • 이용되지 않는 재화나 중고품이 필요한 곳으로 재배치되는 형태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활용, 환경문제 최소화 등의 사회적 가치가 내포 	각종 의류, 무료 혹은 상품권 교환, 경매시장
협력적 생활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의 관심 있는 사람들이 물건, 공간 등의 유형자산과 기술, 시간, 경험 등의 무형자산을 공유하는 유형 • 유사한 생활방식은 협력적 소비를 촉진하는 상호 작용이 되어 새로운 사회 연결망을 형성 	공간, 구인·구직, 여행경험, 지식, 택시, 카풀, 크라우드 펀딩

자료: Bostman, 2011; 김형균 외, 2013; 경기개발연구원, 2014; 조용준, 2018

두 번째는 이용자원에 따른 유형화이다(권애라, 2013). 이용자원에는 유형자원과 무형자원이 있으며, 유형자원은 비소모 자원과 소모 자원으로 나눌 수 있다. 비소

모 자원은 이용을 하여도 소모되지 않는 재화나 부동산 등으로 대부분의 공유자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소모 자원은 식료품과 같이 상품이 소모되는 자원을 말한다. 무형자원은 지식·경험·시간 등 물리적 측정이 어려운 자원으로 SNS 발달에 따라 활성화 되고 있는 영역이다.

[표 2-6] 이용자원에 따른 공유경제 유형

구분	유형자원		무형자원
	비소모 자원	소모 자원	
형태	소모 안되는 자원	소모되는 자원	정보 및 서비스
특징	상시적 이용 목적	이용으로 가치 창출	관계를 통한 가치창출
사례	공간, 교통, 물품 등	소셜 다이닝 등	지식, 경험, 기산 등

자료: 황영모, 2015

한편 Petrini et al. (2017)은 플랫폼유형과 시장구조에 따른 공유경제의 유형화를 시도하는데, 공유경제의 특성에 따른 유형을 크게 ① 리디자인(redesign) 비즈니스, ② 새로운 비즈니스, ③ 이상적 공유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Petrini et al., 2017). 첫 번째 ‘리디자인 비즈니스’ 유형은 기존 산업의 혁신적 모델로서, 기업이 소유한 자원의 개인 간 공유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B2P모델이 주를 이룬다. ‘새로운 비즈니스’ 유형은 이전까지 시장 내에서 주로 활동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체들의 등장과 함께 촉진 되는데, 이들은 기존 산업체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P2P에 기반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적 공유’란 금융거래가 없는 순수한 의미의 공유모델로서, 자발적 참여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둔 공유경제 유형을 의미한다(Petrini et al. 2017). 이에 더하여 김시정(2018)은 ‘전통적 나눔’이라는 유형을 추가한다. 전통적 나눔이란 플랫폼 상의 거래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공유가 아니라, 전통적으로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확산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7】 플랫폼 시장구조에 따른 공유경제 유형

유형	특징
이상적인 공유	금융거래 없는 순수한 공유 모델로 개인의 자발적 참여,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이 특징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주체의 등장으로 인한 혁신적 모델로 P2P모델이 주로 활용됨
리디자인 비즈니스	B2P 모델 위주로 전통산업의 혁신적 모델
전통적 나눔	전통적 조직적 나눔 활동

자료: 김시정, 2018

3. 공유경제의 기대효과 및 문제점

1) 공유경제의 기대효과

(1) 사회적 후생 증가

공유경제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원거리 사용자간 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며, 공급자에게는 새로운 거래 및 홍보 수단을 제공하는 등 경제활성화의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유 플랫폼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전국,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유휴자산의 보유자와 수요자를 인터넷에 기반한 플랫폼을 통해 접속시키고, 표준화된 방식(유휴자산 홍보, 결제, 품질비교, 리뷰 방식 등)에 의해 거래를 중개한다. 이는 과거 시공간의 제약, 거래방식에 대한 무지, 불편함 등 여러 가지 거래비용으로 인해 불가능했던 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유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다. 수요자의 측면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시점, 원하는 장소에서 저렴한 가격에 유휴자산을 이용함에 따라 효용이 증가한다면, 공급자의 측면에서는 유휴자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므로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킨다. 플랫폼 운영자의 경우에도 수요자와 공급자를 중개하고 각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여 이익을 창출시킨다는 점에서 효용이 발생이 발생한다. 이는 유휴자산의 활용도를 높여 해당 자산의 시장가치를 증진시키고, 고부가가치 자산에 대한 자원투자를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성장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조용준, 2018; 한국개발연구원, 2015)

(2) 환경비용 저감

환경비용 저감 효과는 대표적으로 우버 등 교통공유의 기대효과로서 강조된다. 교통공유는 개인차량공유, 업체 차량 공유, 승차공유, 카풀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이들 교통공유는 차량을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사용함으로써 대기오염가스 배출량과 교통량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개인차량이나 업체차량의 공유, 승차공유의 경우 차량의 대당 활용률을 높이기 때문에 대당 환경비용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는 논의도 있다. 그러나 교통공유는 경제적 가치 1원을 창출하기 위해 투입되어야 할 환경자원의 양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교통공유의 구체적 형태에 상관없이 기대할 수 있는 효과이다. 즉 이들은 차량에 대한 관점을 소유(ownership)에서 사용(access)으로 바꿈에 따라 차량 매입수요를 감소시키고, 이에 따라 한정된 환경자원을 부가가치가 높은 자산 생산에 대체 투입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환경비용의 저감 및 환경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한다(한국개발연구원, 2015).

2) 공유경제의 쟁점

(1) 기존 사업과의 마찰

사회적 후생증가와 환경비용의 저감이라는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유경제는 다양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쟁점은 기존사업과의 마찰이다. 공유경제는 새로운 거래방식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형을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새로운 사업유형이 기존의 사업을 일부 대체함에 따라 기존 사업과의 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차량공유의 경우,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택시기사(기존공급자)와의 갈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교통공유뿐만 아니라 숙박공유의 경우에도 기존 사업자인 호텔, 민박 등과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공유경제의 작동방식이 신규 투자를 통해 생산물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업 및 전문서비스업의 쇠퇴, 일자리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물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이흥택 외, 2016)

(2) 거래상 위험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공유거래의 경우, 사전 지식이 없는 사용자 간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문제에 노출

될 우려가 있다.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은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는 두가지 형태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된다. 첫 번째 역선택의 문제는 거래하는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재로 인해 역방향으로의 선택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실망스러운 거래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다소 과장된 홍보로 인해 거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숙박이나 공간공유가 이에 해당한다. 온라인으로 예약 후, 실제로 이용하려고 했을 때 기존 홍보 내용보다 저품질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수요자의 측면에서 지불한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역선택의 결과를 초래한다. 두 번째 도덕적 해이는 공유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용자들의 행위를 예측할 수 없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 가능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공급자가 수요자의 행위를 감시할 수 없거나, 자산 사용 내용에 대해 세부적인 계약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수요자가 유희자산을 훼손하거나 남용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율규제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한국개발연구원, 2015)

(3) 제도 미비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대두되고 있는 또 하나의 쟁점은 관련 법제도의 미비문제이다. 공유거래 자체가 합법적인지 혹은 불법적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자와 공급자, 공유거래 플랫폼 등을 활용하는 거래의 당사자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지가 불분명하며, 이에 따른 법적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즉, 소유권, 접근권, 이용권이 혼재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무의 혼란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논의이다. 이와 함께 정부차원에서 공유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도 해결해야할 주요 이슈로 제기된다(김전산·지우석·강상준, 2014).

제2절 공유도시 및 지역활성화

1. 공유경제와 도시패러다임의 변화

공유경제 개념은 시민의 물리적 생활공간인 도시에서의 삶의 양식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기존의 도시개발이나 발전방식과는 매우 차별화되는 패러다임적 변화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McLaren and Agyeman은 ‘공유 패러다임 (sharing paradigm)’의 등장인 공유도시의 기반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말하는 공유 패러다임은 모든 자원 및 환경을 공유의 대상으로 보고 소비 및 생산 활동 측면을 넘어 단순한 이윤추구가 아닌 다양 한 동기에서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물리적 자원의 공유, 비즈니스·공공서비스 제공에서의 공유, 재능이나 활동 등을 포괄하는 비 정형적인 공유 활동 등을 포괄하며, 개인, 공동체·커뮤니티, 공공·정부단위 모두가 공유의 주요 주체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표 2-8] 공유 패러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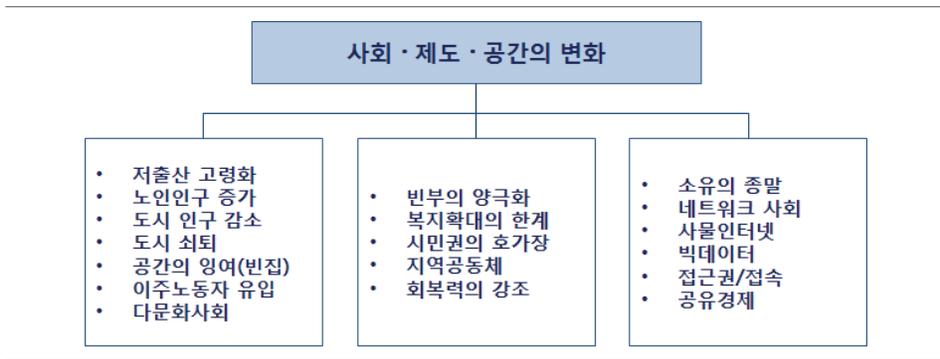
구분	물건	서비스	활동
개인	개인 간 물물교환, 대여, 선물	라이드셰어링, 카우치서핑	재능공유(Skill sharing)
공동체, 커뮤니티	차량공유, 공구대여조합 (club) 등	보육, credit unions, 시간은행 (time-banks), 크라우드펀딩 (crowd funding)	스포츠키뮤니티, 소셜미디어, 오픈소스소프트웨어
공공·정부	도서관, 공공자전거	헬스케어서비스, 대중교통	정치활동, 공공 공간에서의 활동

자료: McLaren and Agyeman(2015)

한편 이영범(2016)은 현재 도시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유는 잉여의 문제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면서, 이러한 잉여의 문제로 인한 공유개념의 확산은 도시공간 계획 및 정책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적 시도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전환하

면서 도시의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비경제활동 인구인 고령자들은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도시의 상당수 공간들이 잉여 혹은 유휴의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 이에 따라 더 이상 기존의 소유권(ownership)이 도시 내 공간을 주도하는 패러다임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대신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공유가 증장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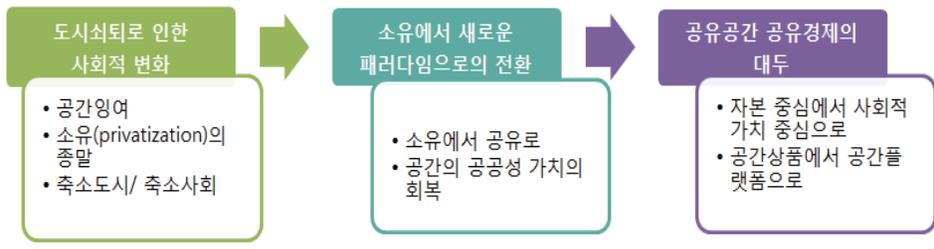
[그림 2-4] 사회, 제도, 공간의 변화



자료: 이영범(2016)의 논의를 토대로 구조화

공유는 빈집과 빈가게와 같은 유휴 및 잉여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기존의 개발 패러다임이 작동하지 않는 도시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해결책으로써, 사회적 변화에 기존의 제도화된 공간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라고 평가된다.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의 책 ‘소유의 종말’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정보화 사회와 소셜 네트워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원하는 정보를 직접 공유하면서(P2P), 재화나 서비스에 직접 접근하여 서로 교환하거나 공유하는 사회적 변화를 야기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공간의 사용권을 공유하거나 다중의 동시 다발적인 이용이라는 새로운 공간 패러다임을 열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공유공간 공유경제의 대두로 이어지는데, 특히 자본 중심에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의 전환, 그리고 공간상품에서 공간플랫폼으로의 변화를 의미함을 강조한다(이영범, 2016).

[그림 2-5] 도시 패러다임의 변화



자료: 이영범(2016:7)을 토대로 구조화

2. 공유도시의 개념

사람들 사이의 공유가 발생하는 한 가지 이론에 따르면(Volker & Plap, 2007), 공유와 소유 사이에는 역관계가 있음을 제시한다. 사람들은 물건을 개별적으로 구입할 수 없을 때만 공유에 참여하며, 개별적으로 소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산을 취득하면 공유를 줄이게 된다는 것이다. 자원이 부족할 때 공동체 내 사회적 네트워킹이 더 강화된다는 연구가 이를 강조한다(Marsh, 2010). 20세기 초반 선진국의 기술발전과 생산 증가는 개인 소비 및 소유율의 증가를 가져왔고, 자립을 지향하는 문화적 변화는 개별소유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부유한 공동체 내에서의 공유활동은 감소하였다(Agyeman *et al.*, 2013). 가정용 세탁기의 보급, 대중교통 대신 개인 차량의 소유 등이 이를 대표한다.

그러나 20년 전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공유의 추세 및 사고방식이 변화하기 시작하는데, P2P 사회적 네트워크의 확산, 환경 가치에 대한 인식의 증가, 그리고 세계적 경기 침체는 공동체 내에서의 공유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즉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보다 큰 사회적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 물품을 임대, 대여, 교환 또는 물물교환 하고자 하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확산시켰고, 이러한 공유 활동은 온라인 플랫폼과 함께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도시 공간은 물리적 교환이라는 공유활동을 촉진시키는 기반이 되었다고 강조한다(WEF,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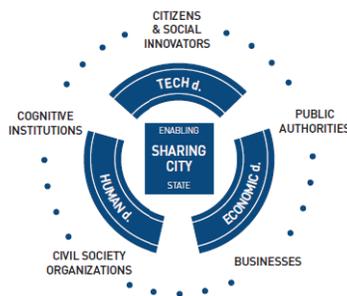
McLaren and Agyeman(2015)에 따르면 도시는 공유된 공간(shared space) 내에

서,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 및 교환활동(exchange)이라는 특징으로 구성 되는데, 이는 모든 종류의 자원, 경험, 지식 등이 공유될 수 있는 ‘공유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공유도시’는 경제적 자원뿐만 아니라 도시의 기술 및 기반시설 그리고 인적·사회적 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전인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역할이 기대된다.

특히 공유도시 논의는 개개인이 생활하는 공동체 내에서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을 증가 시키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사회참여 및 정치적 활동을 활성화하여 사회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양한 공유 활동의 과정 속에서 주민들 간의 공간적, 사회적 불균형 및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유도시는 보다 지속가능하고, 사람 중심적인 도시 모델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공유도시에서 첨단 디지털기술의 발전 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진정한 ‘스마트 시티(smart city)’는 기술로써 공유 활동을 원활 하게 하는 ‘공유도시’를 의미한다고 강조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해볼 때 공유도시란 공유경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도시 또는 지역이라는 물리적·공간적 관점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개념으로서, 도시 및 지역적 관점 에서 공유경제의 경제적·기술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가치의 측면까지 포괄 하여 접근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도시 및 지역의 발전 전략으로 공유경제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에 있어 공유경제의 활용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Agyeman *et al.*, 2013; Finck and Ranchordas, 2016; 김시정, 2018)

[그림 2-6] 공유도시의 구성



자료: Bernardi, Diamantini(2018)

3. 도시 및 지역에서의 공유경제 특징

1) 도시(지역) 단위 공유경제 참여자

(1) 민간주체

도시 및 지역단위에서는 광범위한 계층의 행위자들이 공유경제에 참여한다. 대표적으로 개인 사용자는 경제, 사회 또는 친환경적 이유로 P2P 또는 B2P 거래를 통해 공유에 참여하는데, P2P로는 Food Swaps(비영리), Turo(영리), B2P로는 Hackerspaces(비영리), Zipcar(영리) 등이 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지역) 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도 공유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이다. 이들은 주로 수익 창출과는 반대로 사회적 또는 환경적 이유를 목적으로 하며, 협동조합식 카 셰어링 회사, 웹 플랫폼 및 재고 전산화를 갖춘 협동조합식 도구 라이브러리, 공동주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특정 사명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업체 역시 공유경제의 주요한 주체로 활동하고 있는데, 비영리 도구 라이브러리, 비영리 카 셰어링 단체, 비영리 코하우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영리기업의 경우에는 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 디지털 기술(예: 플랫폼)의 도움을 받아 구매, 판매, 대여, 임대 또는 거래를 실행함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는데, 이들이 활용하는 플랫폼은 거래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나 플랫폼에서 수집한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후원이나 광고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한편 지역공동체라는 다소 큰 범위 역시 비영리 및 비공식 모델이지만 다양한 구조로 공유경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이해되기도 한다. 즉 지역 또는 마을 단위의 참여자들로 구성된 지역공동체는 대개 수익을 창출하기 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디지털 기술사용보다는 개인 간 연결 관계에 초점을 두며, 사회 또는 환경적 목표에 뚜렷한 중점을 둔다. 지역사회 물물교환, 수선 클리닉/ 수리 워크숍, 장난감 도서관, 종자 도서관, 식품 구매 동호회, 공동체 정원, 공동체 주방, 시간은행 등이 지역공동체 단위에서의 공유경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공공주체

공공분야 및 정부 역시 공유경제의 주요 주체로 기능한다. 이들은 공공 인프라를 사

용하여 다른 주체들과의 파트너십을 지원하거나 구축하고, 혁신적인 공유 방식을 장려한다. 대표적으로 서적이나 공공 공간 등의 공공 라이브러리(public library), 자전거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지자체, 공유 또는 공동 작업(ex. 공공 물물교환 주선)을 주관하는 공공 커뮤니티 센터, 공유경제 활동 주체를 우대하는 지자체 구매사업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특히 개별 민간 단위에서의 공유 활동과 마찬가지로 지방정부 단위에서 지자체 상품, 지자체 공간, 시민 자산, 시정 서비스, 그리고 지역 주민의 기술 및 재능활용 등에 있어 공유경제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 상품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장비, 기계류, 차량 및 기타 물품을 부서 간 또는 인근의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으며, 무니렌트(Munirent) 라는 지자체 내 혹은 지자체간 장비 공유를 돕는 회사의 사례도 존재한다. 또한 지자체 공간 및 시민 자산의 경우, 텃밭, 지하철, 시립학교, 병원 및 도서관, 도시 휴양시설과 같은 시민 편의 시설 또는 공간을 지자체 주도로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자체 내 유희 공간은 도시 농업, 팝업 상점, 주차 및 창업 허브를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및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시정 서비스의 공유 측면에서, 많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협약을 맺고 있는데, 이는 공유경제의 개념 출현 이전부터 존재해 오던 방식이기는 하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의 기술 및 재능 공유의 측면인데,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영역이나 사안에 있어 단기적 필요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주민의 기술, 재능 그리고 전문적 업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표 2-9] 공공주체(지자체)의 공유경제 활용 예시

공유내용	내용	사례
지자체 상품	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장비, 기계류, 차량 및 기타 물품을 부서 간 또는 인근의 지자체와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니렌트(Munirent): 지자체 내 혹은 지자체간 장비 공유 • 자산 사용 추적 플랫폼 마이턴(myTurn)
공간 및 시민 자산	텃밭, 지하철, 시립학교, 병원 및 도서관, 도시 휴양시설과 같은 시민편의 시설 또는 공간을 지자체 주도로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욕의 공동체용 공공토지 자산화: 596 에이커스(596 Acres)

공유내용	내용	사례
시정 서비스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협약 등	• 캐나다 앨버타 지방자치 단체 협력 체계
지역 주민의 기술 및 재능활용	특정 영역이나 사안에 있어 단기적 필요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주민의 기술, 재능 그리고 전문적 업무 경험을 공유	• 바르셀로나의 시간은행 프로젝트

자료: WEF(2017: 17-18)를 바탕으로 정리

2) 공유의 동인

도시 내 다양한 주체들이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동인 또는 목적은 크게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목적으로 구분 가능한데, 이는 사회인구학적 그룹, 사용자, 제공자 등 서로 다른 참여자 간에도 다양하다. 최근 암스텔담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숙박시설 공유는 경제적 이유가 동기로 작용하는 반면, 차량과 음식 공유는 사회적 동인에 따라 동기가 더 많이 부여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젊고 소득이나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사회적인 이유가 동기로 작용하는 반면, 젊은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원인이 공유경제에 참여하게 되는 동인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가 소유자나 제공 업체보다 더욱 경제적 동기에 이끌린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Bocker & Meelen, 2016).

[표 2-10] 공유경제 참여의 목적

목적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사용자 (us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 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소비패턴을 재검토 고가여서 소유할 수 없었던 우수한 품질의 제품에 접근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음이 맞는 새로운 관계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 이타적인 이유 교환에 대한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영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소비활동에 참여
제공자 (provid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휴 용량 또는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자본화하여 얻는 수익 유연한 근무 시간으로 자영업 또는 프리랜서 활동 기회 새로운 시장 제품 개발 시 고객 기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복적 거래를 위해 충성도 높은 고객 네트워크 구축 사용자 추천을 통해 거래량 증가 및 시장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의식을 제고하여 유휴 자산이 방치하는 것이 환경을 저해하는 행동을 인식

자료: WEF, 2017, p. 10.

3) 도시(지역)에서의 공유 방식 및 목적

WEF(2017)는 도시 및 지역에서의 공유방식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공유활동을 촉진하는 방식과 지역사회, 비영리단체 및 사회적 기업과 같은 비정부기구가 각각의 도시 및 지역의 여건과 문화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공유도시를 추진하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고 정의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적 상황에서는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공유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지역 내 각 부문과 참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에 적합한 공유활동 및 형태를 모색하는 경우가 상당수일 것으로 유추된다.

이때 공유도시의 목적은 크게 경제성과 사회문화적 발전 및 환경적 지속성으로 구분 가능하다. 경제적 측면에서 도시는 경제 성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공유를 활용하는 반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도시 내 공유경제에 대한 “협력적” 접근법을 통해 공동체와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참여적 거버넌스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둔다. 도시는 지역 개발에 대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지역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참신하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수집(crowdsourcing)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공공, 영리 및 비영리 부문을 시민들과 연계하고, 조직과 시민간에 기술, 전문지식, 자원을 공유하게 하여 단순한 경제적 의미를 넘어서 가치를 창출하며 도시 및 지역의 목표 달성을 지원할 수 있다.

[표 2-11] 공유도시의 목적 및 쟁점

항목	경제적	사회적·환경적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성장 강화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적 거버넌스 강화 시민참여 촉진 참신하고 혁신적 아이디어 발굴
쟁점 및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뢰와 명성 수립 공유 참여자 및 플랫폼의 안전과 보안의 위험성 사회 평등에 대한 효과가 불확실 ‘포용성’ 보다 ‘배제성’이 클 수 있다는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반시설 및 서비스 개선 관련 공유 선도예의 어려움 협력적 거버넌스 측면에서 책임성과 투명성의 문제

자료: WEF(2017)의 논의를 토대로 재구성

4. 공유도시와 지역활성화

1) 유희자본 활용 및 로컬 네트워크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감소 및 지역산업 및 경제 침체에 따른 활력감소의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 내 경제 활력 제고에 있어 공유경제가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논의도 대두된다. 특히 기존의 특정 기업 유치 및 인프라 건설에 초점을 맞추는 공공사업에 의존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은 지역 경제의 확대 재생산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경제 활력 제고를 유인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유희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이 도입될 필요가 있는데, 도시 내 공유경제 모델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로컬 네트워크 효과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연구원, 2018).

또한 공유경제는 유희 자본의 활용을 통해 공급의 측면뿐만 아니라 수요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대표적으로 순다라라잔은 공유경제 개념의 도입으로 다양화된 서비스가 기존 서비스를 대체하기 보다는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에어비엔비 서비스가 관광 분야에 있어 새로운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버와 같은 교통 공유 서비스는 도심 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도시 내 다양한 인적·물적 유희자원의 공유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도시라는 특정 공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공유 활동, 즉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를 직접 매개하여 활성화되는 도시 내 공유경제 모델은 지역 내 네트워크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된다. 즉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통해 전 세계가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글로벌 차원의 네트워크 확산 및 승자독식 시장이 형성된다는 기존의 우려에 반해, 특정 도시라는 물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공유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활성화된다는 점에서 지역 내 로컬 네트워크의 새로운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공공부문은 다양한 공유경제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바로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공

정적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해석된다. 즉 이같은 논의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 도출에 있어 공유경제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고려를 큰 비중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 또는 지역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유경제 모델 사례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 도시 문제해결을 통한 도시의 사회적 활력 증진

공유경제가 유휴자원의 효과적 이용을 통해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지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유효한 전략으로 활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역의 사회적·문화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의도 대두된다. 도시 또는 지역의 물리적 공간 내, 유휴자원의 공유를 통해 이루어지는 협력적 소비는 불필요한 생산을 감소시켜 과잉생산 및 과잉소비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유휴공간의 새로운 활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다른 부문간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공유활동 확산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경우 인구고령화, 저출산 등 사회의 핵심적 이슈 해결을 위해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일본의 인구고령화 및 저출산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경제성장 역시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다양한 방식으로 그 해결방식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되어 왔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공유경제를 활용한 새로운 발전 방향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유경제 중심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공유도시 개념이다.

이에 일본 도시의 다양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유서비스의 활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청년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지역 문제 해결 과제를 위해 고용주와 구직자를 직접 매칭하는 플랫폼인 클라우드 워크스(Cloud Works), 기술공유서비스의 일종인 랭커스(LANCERS), 개인의 지식, 기술, 경험, 장기 등을 판매하는 플랫폼인 코코나라(Coconala)등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서는

육아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들의 통학 및 통원을 대행하고, 위탁 육아 등을 지원하는 공유경제 플랫폼 애즈마마(AsMaMa) 운영하거나 육아도우미 매칭 플랫폼으로서 기능하는 키즈라인의 운영도 지원하고 있다.

즉 공유경제 영역이 도시 및 지역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도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 증진뿐만 아니라, 도시 내 다양한 관계와 활동의 활성화로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적·문화적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2-12] 일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경제 활용 유형 및 예시

행정서비스 유형	해결과제	공유서비스 예시
고용창출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Cloud Works(고용주와 구직자를 직접 매칭하는 플랫폼), LANCERS(기술공유서비스), Coconala(개인의 지식, 기술, 경험, 장기를 판매하는 플랫폼)
양성공동 참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	애니타임즈(일상기술 공유), 카스카지(가사대행, 가정부 매치)
사회복지	육아에 좋은 환경 조성	AsMama(아동 통학/통원, 위탁 육아 등의 공유경제 플랫폼), 키즈라인(육아도우미 매칭 플랫폼)
공공교통	과소지역에 대체 공공교통수단 창출	UBER(공유차량), COGICOGI(공유 자전거), Notteco(장거리 운전 공유)
관광진흥	관광 활성화에 따른 민박시설 수요 대처	Airbnb(민박), Homeaway(민박)
	관광가이드, 관광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Tabica(당일 관광체험), Huber(방일 외국인 여행자 대상 가이드 매치), TadaKu(외국인이 가르쳐주는 가정요리 교실)
공적 부동산 활용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 시설 공유	스페이스 마켓(유휴공간 공유), 노키사키(유휴공간 공유 및 주차장 일시 개방), 토메레타(공유주차장)
민간자산 활용	빈 집/점포/빌딩 등 민간부동산 공유	
교육	평생교육	Street-academy(교육자 매치 공간)
농림수산	농림, 수산자원을 활용한 그린 관광 개발	Tabica(당일 관광체험)

자료: 일본 공유경제협회(김장훈, 2018 재인용)

3) 지역활성화를 위한 공유경제 적용 발전단계

한국정보화진흥원(2018)은 도시 및 지역단위 경제적·사회적 활력 증진을 위한 공유경제의 적용이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제시한다.

첫 번째는 도입 단계로서, 이 단계는 공유경제 공통 플랫폼을 개발·배포하여 지역 내 공유경제의 도입 및 다변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공간공유 플랫폼, 지식공유 플랫폼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지역 내 유희 자원의 활용 및 공유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는 공유경제 적용이 본격화되는 표준화 단계이다. 이 시기에는 공통 플랫폼으로 촉발된 활발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일자리 플랫폼을 확산시키고, 디지털 지역 화폐를 도입함으로써 도시 및 지역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유를 촉진시키는 ‘공유도시’로의 도약을 전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성숙단계로서, 보다 안정적이고 성숙한 공유경제의 정착 및 지속성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확산되는 단계이다. 이 시기는 개별 공유경제 시범도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도시간 연계 및 네트워크에 기반한 순환경제 모델로 전환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일례로 스마트 시티 개념과의 연계를 통해 공유 의료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공유경제와 스마트시티와의 적극적 접합을 시도할 수 있다.

[그림 2-7] 지역활성화를 위한 공유경제 적용 발전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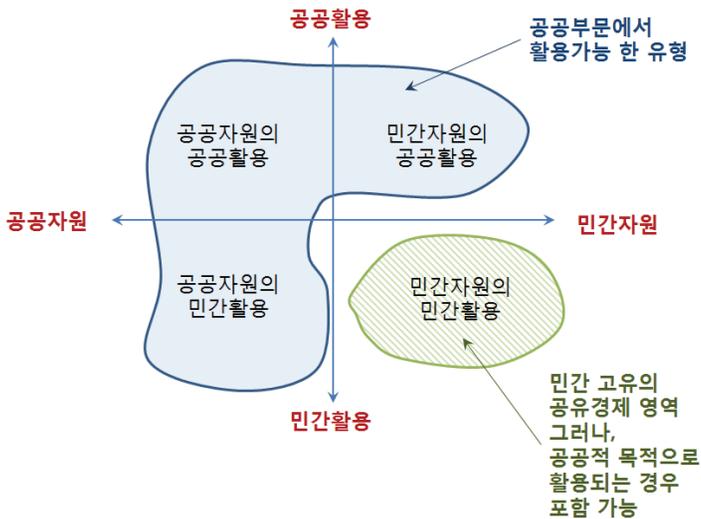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2018)

제3절 연구 분석틀

지자체 단위, 특히 공공부문이 활용가능한 공유경제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선행연구에 따르면, 공유경제 정책은 크게 공유자원의 제공주체와 활용주체를 기준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2-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성영조 외, 2015; 조용준, 2018). 4개의 영역 중 특히 민간자원을 민간 부문이 활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공유경제 영역으로서, 개인들 간의 사적 공유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인들 간의 공유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사회문제 해결의 목적을 위해 공유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공공적 목적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가능하며 이는 곧 공유경제 주요 정책 유형으로 포함 가능하다.

[그림 2-8] 자원 제공주체 및 활용주체에 따른 유형화



【표 2-13】 자원 활용 주체 및 제공주체에 따른 공유경제 유형 특성

활용 분야	공공자원	민간자원
민간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자원을 민간분야에 활용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무형 또는 유형의 자산 및 서비스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민간에 제공하는 형태 예: 공유자전거, 공유 대어, 공공기관 편의시설 제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자원을 민간분야에 활용(민간 간의 공유경제 활동) 공유거래의 목적 및 거래효과가 개인의 이익보다는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문제 해결형 공유경제 비즈니스'인 경우 예: 청년과 노인 간 주거공유를 통한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에 공공부문이 중개자로 나서는 형태
공공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자원을 공공분야 활용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비용 절감, 에너지 및 자원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공분야 간 보유자원을 상호 공유하는 형태 예: 행정정보 공유, 공무원의 경험 및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정부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대민 서비스 품질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자원을 공공분야에 활용 재난안전 대응, 범죄예방, 복지, 지역공동체 형성 등의 공익적 목적에서 민간자원을 공공에서 활용 비용절감 차원에서 활용빈도가 낮거나 운영비용이 높은 고가의 자산을 민간자원으로 대체 활용하는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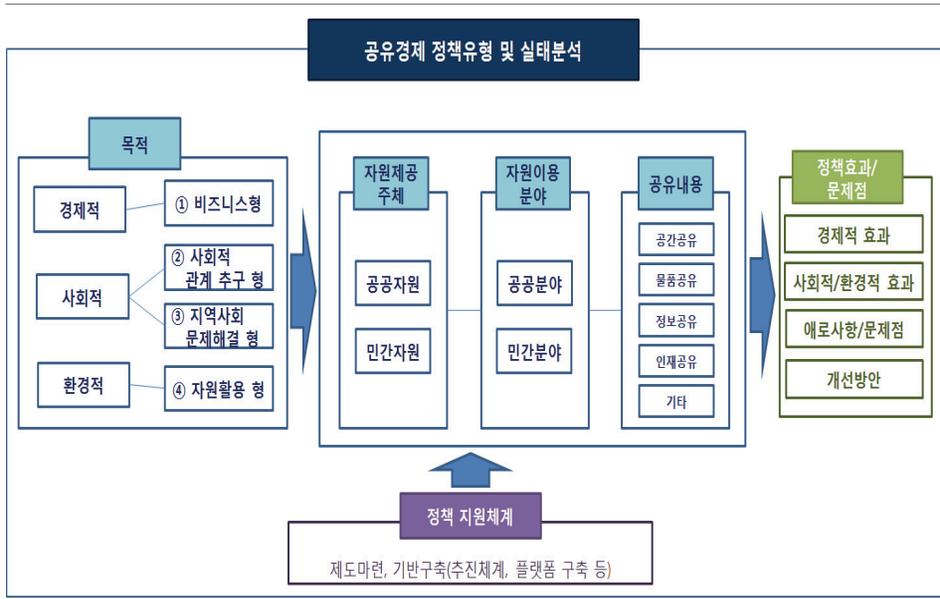
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2016), 조용준(2008, 21-22)을 바탕으로 재정리

이 외에도 공유경제 관련 정책 내용에 따른 유형화를 시도하는 연구들도 있다. 이들은 특히 공간공유(주거, 사무공간, 주차장, 공공시설, 유희공간), 물품공유, 지식 및 정보공유 등의 측면에서 공유경제 관련 정책 및 사업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김은란 외, 2015).

이에 더하여 공유의 목적에 따른 유형화도 가능한데, 이는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측면으로 대별될 수 있다. 우선 경제적 측면은 경제적 영리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형으로서, 공유활동을 통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증진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와 달리 사회적 측면은 사회적 가치 추구, 사회 문제점 해결, 사회적 관계형성, 상호 신뢰 기반, 공동체 연대, 공유 인식 확산 등 사회적·공공적 목적에 초점을 둔 공유경제 정책(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측면인데, 이는 자원의 재활용 및 자원의 소비 감소를 통해 환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유형으로서, 유한한 자원의 공동활용에 초점을 둔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분석틀을 설정한다([그림 2-9] 참조). 우선 지자체 단위에서 공유경제를 활용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을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측면으로 나누고, 사회적 측면은 다시 지역사회 문제해결형과 사회적 관계 형성 유형을 구분한다. 그리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정책(사업)을 자원제공 주체(공공자원/민간자원), 자원이용 주체(공공분야/민간분야), 그리고 공유내용(공간/물품/지식 및 정보/기타)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와 함께 해당 지자체의 정책 지원체계(추진체계, 플랫폼 구축)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과정은 각 유형별 자원이용 및 활용, 그리고 공유내용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지자체 단위에서 공유경제를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활용가능 한 공유경제 관련 정책 및 사업의 활용 방향 및 세부 전략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얻기 위함이다.

[그림 2-9] 연구 분석틀



제3장



국내 공유경제 관련 정책 추진 동향

- 제1절 중앙정부의 공유경제 정책추진 동향
- 제2절 지방정부의 공유경제 정책추진 동향
- 제3절 시사점

제1절 중앙정부의 공유경제 정책추진 동향

공유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정부는 2016년 2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공유경제를 서비스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 추진방향은 공유경제 특유의 자율규제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며, 관련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충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균형적인 접근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기타 공간·재능·분야 등은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을 포함하였다.

공유경제에서 정부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사업은 숙박 분야로, 숙박공유는 시장의 요구가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한 숙박공유서비스가 급성장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현행법상 거주 중인 주택을 숙박업 등록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공유민박법(가칭)’ 신설을 통해 국내에서도 숙박공유가 가능하도록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차량공유(카셰어링) 분야에서는 차량공유업체가 운전부적격자를 판별할 수 있도록 경찰청의 면허정보 제공범위를 확대(기존 면허보유여부에서 면허종류 및 면허정지여부 추가)하고 실시간으로 면허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차량공유업체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차량공유 확산 및 도심 내 교통 완화를 위해서 차량공유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차량공유 서비스(행복주택, 뉴스테이 등)를 적극 도입한다.

금융분야에서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도입·시행하여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자금조달 창구가 다양화 되어 자금조달 기회 확대를 기대하고자 하였다.

【표 3-1】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영역	세부내용
숙박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민박업(가칭)’을 신설하여 합법적인 제도권 영역에 포함 • 기존 민박업과의 형평성, 공유경제의 취지등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하에 등록토록하고, 영업일수(연간 120일 이내)를 제한 • 규제프리존(부산, 강원, 제주)에 우선 시범도입(규제프리존 특별법 반영)하여 추후 전국적 확대 추진
차량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 정보 제공 범위 확대 및 실시간 면허정보 조회시스템 구축 • 차량공유업체의 공유주차장 이용 허용 • 차량공유 확산을 위한 시범도시 지정
금융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도입 및 시행

자료: 2017년 무역투자진흥회의 내용 중 투자활성화 대책을 바탕으로 작성

2017년 발표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은 숙박공유, 차량공유, 금융공유의 측면이외에도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생활밀착형 산업투자 여건 개선 과제로 주차공유 분야를 선정하였다. 이는 그간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은 여전히 부족하여 주민갈등·상권침체·교통불편 등을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주차공간의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지속적인주차장 확보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난 이유는 시간대별로 주차수요가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인데, 주간(9~18시)에는 대부분의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은 잘 활용되지 못하고 유휴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한계도 동시에 노출되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차공유’ 즉, 공유주차장을 확대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관리체계 개선 및 불법주차 단속 등을 병행하여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계획을 세우게 된다.

세부실행계획으로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개선을 통해 공유주차장 확대,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주차공유’ 포함 및 주차장 통계 내실화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 단속 후속조치 매뉴얼 마련, 공익제보 활성화 등을 통해 건

전한 주차문화 확립이 포함되어 있다.

【표 3-2】 주차공유사업 개선과제

세부실행계획	내용
공유주차장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개선을 통해 공유주차장 확대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 유료 개방 허용 • 전일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주·야간 선택제로 전환 유도
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주차공유' 포함 • 주차장 통계 내실화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
단속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 후속조치 매뉴얼 마련, 공익제보 활성화 등을 통해 건전한 주차문화 확립 • 주간에는 주거지역 주차장을, 야간에는 상가지역 주차장을 공유하여 '주차수요의 시간대별 불일치' 해소

자료: 2017년 무역투자진흥회의 내용 중 투자활성화 대책을 바탕으로 작성

동년 7월,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100대 국정과제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여 공유경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2017년)하고 2018년에는 공유경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는 새로운 투자기회와 일자리 창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유경제를 제시하였다.

최근 2019년 1월, 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발표하였다.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전략은 크게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와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나누어진다. 공유경제 활성화 목표는 혁신적인 공유 플랫폼 등장의 촉진 및 활성화와 공유경제를 통한 경제의 효율성 제고이다. 세부 추진전략으로는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숙박, 교통, 공간, 금융·지식 등)와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세체계 정비, 공급자·소비자 보호, 공유경제기업 혁신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3-1]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출처: 관계부처합동, 2019,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먼저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을 살펴보면, 숙박공유는 세계적으로는 확산 중에 있으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제한적 허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는 농어촌지역에서 내·외국인 모두 숙박 공유가 허용되나 도시지역은 외국인 대상으로만 숙박공유가 가능하다. 이에 「관광진흥법」개정을 통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도시지역 내 주택의 빈 공간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도시민박업 허용을 추진하나 전문숙박업의 변질 방지를 위해 본인 거주중인 주택만을 등록 가능하게하고 연 180일 이내로 영업일수를 제한하였다. 또한 새로 도입하는 도시민박업과 기존 숙박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기존 업계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해 숙박공유 규제는 완화되고 공정경쟁을 위해 불법업소의 시장진입 금지, 플랫폼 기업의 관리책임을 강화했다.

【표 3-3】 숙박분야 활성화 방안

추진과제	세부내용
내국인대상 도시민박업 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 내, 내국인대상 도시민박업 허용 추진(180일 이내 영업일수 제한, 본인 거주중인 주택 등록 허용) • 지역 숙박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단력적 운영 허용 • 투숙객의 안전보장을 위해 서비스·안전·위생 기준 마련 및 범죄 전력자의 도시민박업자 등록 제한 검토
기존 숙박업계와 상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숙박업계 발전 지원 : 관광품질인증 일반·생활 숙박업소에 대해 관광기금 융자 등 지원, 우수 농어촌민박업 선정 및 홍보지원, 숙박업 종사근로자에 대한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부여, 소규모 숙박업체에 대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우대공제 적용 연장 및 공제한도 확대(500만원→1,000만원) • 공정한 경쟁질서 :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주기적인 정부합동 단속을 통한 불법 숙박업소 근절 및 건전한 숙박업 생태계 조성, 숙박 중개 플랫폼에 대한 불법 숙박업소 중개 금지 의무 및 민박업자 관련 자료제출 의무 부여 추진 • 상생협업체 가동 :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한 협의체급 운영, 숙박업계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기존 숙박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수집·개선 지속 추진

출처: 관계부처합동, 2019,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교통분야는 국내 서비스 허용범위가 불명확하고 서비스 특성에 맞는 규제·제도가 미비하여 공급자·소비자 모두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 또한 버스·렌터카 등 기존 교통수단에 O2O(online to offline)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新교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하여 이를 활용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통분야는 크게 카셰어링 활성화, 전세·노선버스 공유를 위한 교통 O2O서비스 활성화 그리고 승차공유의 사회적 대타협으로 제시되었다.

먼저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해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내에서 운영하는 카셰어링 차량의 배차·반납장소를 자율화하고 편도이용 활성화를 위해 타지역의 일시상주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무인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고지서 발송장소 변경허용 및 친환경차량인 수소차 카셰어링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가 그 방안이다. 교통 O2O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 허용, 한정 면허제도를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노선 운행시 행정·제도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주요 광역버스(M-Bus)에 온라인 좌석 예약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공유경제에서는 차량공유 문제를 둘러싸고 이해 당사자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승차공유는 국민편의 제고, 교통산업의 발전, 기존산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라는 기본 원칙하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방안과 함께 추진 한다는 계획이다.

【표 3-4】 교통분야 활성화 방안

추진과제	세부내용
카셰어링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내 배차·반납장소 자율화 • 타지역 일시상주기간 확대(1→3개월) • 고지서 발송장소 변경 허용 • 수소차 카셰어링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용 자동차 대여기간의 산정기준 명확화
O2O 서비스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 허용 • 한정면허 제도를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선 • 주요 광역버스에 온라인 좌석 예약제 확대
상생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편의 제고, 교통산업의 발전, 기존산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라는 기본 원칙하에 사회적 대타협 추진

출처: 관계부처합동, 2019,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금융·지식 등 기타분야를 보면 자금공유, 지식공유 등 다양한 분야의 자원공유를 확산하고 있다. P2P 대출 투자자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인하, P2P 대출 투자자보호 강화,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그리고 온라인 지식공유 플랫폼 K-MOOC를 통한 재능공급 촉진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과제체계 정비, 공급자·소비자 보호 그리고 공유경제 플랫폼 혁신 지원을 한다.

특히 최근에는 공유경제 관련 정책 내용 중 공간공유(주거, 사무공간, 주차장, 공공시설, 유희공간), 물품공유, 지식 및 정보공유 등과 같은 활성화방안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지식 및 정보공유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해 K-MOOK 강좌 개발 주체를 다양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대학 등의 우수강좌를 제공하고 토론, 퀴즈 등 양방향 학습 지원과 더불어 기존의 대학, 기업, 출연연 뿐만 아니라 민간 연구기관, 공익법인 등 등 강좌 개발 주체를 다양화한다. 또한 우수전문인력 참여를 유도하고 양질의 콘텐츠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유료서비스를 도입하고, 전문역량 개발을

위한 심화·직업교육 강좌 등을 확보하고 K-MOOK 이수결과의 학점 인정도 확대(‘19년 시행)한다.

공간 분야에서는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상환, 주거 등 공간 공유 활성화 및 유휴 공공 자원에 대한 개방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주차공간 공유 촉진을 위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공유하는 경우 요금 감면이나 추후 배정 시 우대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부여한다(서울시). 주거 공유를 위해서는 분쟁방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이는 주거 공유 시 입주자 보호를 위해 점유형태, 분쟁유형·빈도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의 중소기업이 공공기관 등의 해외사무소 유휴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 확인·예약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그리고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공간 등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공유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초·중·고교 생활체육시설 개방 촉진과 교육청이 보유한 미사용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표 3-5】 공간분야 활성화 방안

추진과제	세부내용
주차장공유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활성화
주거공유	분쟁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
공공자원 공유	공공자원의 개방·공유 확대 및 활용도 제고
창업공간 공유	청년창업 촉진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출처: 관계부처합동, 2019,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두 번째,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세체계의 정비, 공급자·소비자 보호, 공유경제기업 혁신지원의 측면에서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 과세체계 정비를 위해서는 간편 과세기준 마련, 공유경제 납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며, 공급자·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산재보험 확대, 산재보험 부과·징수체계 구축, 그리고 카셰어링 등 O2O 서비스 공급자가 별도의 신고 없이 전자상 거래가 가능하도록 신고의 무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유경제 플랫폼 혁신지원을 위해서는 공유경제기업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 세제지원, 기업이 공유·활용가능한 데이터 확대, 그리고 공유경제 조사 및 분석기반 등의 세부 방안을 마련하였다.

[표 3-6] 공유경제의 제도적 활성화 방안

추진과제		세부내용
과세체계 정비	간편 과세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수의 공급자가 소액의 소득 창출하는 점을 감안하여 납세편의와 행정비용 등을 감안한 간편 과세기준 마련 소득분류 불확실성 완화, 납세편의제고 등 납세협력비용 절감효과 기대
	공유경제납세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순응(compliance) 제고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공급자를 위한 공유경제 분야의 납세 가이드라인 제시
공급자/ 소비자 보호	산재보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한 범위도 질병·육아 등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 한정해서 허용 장기적으로 산재보험 대상을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다양한 종사형태가 포함된 '피보험자 개념으로 확대
	산재보험 부과·징수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관계가 모호하고 고정 사업장이 없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감안, 거래건별 산재보험 부과·징수체계 마련 노사정 협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에 착수하고 각계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건별 요율 체계 마련
	O2O 서비스 공급자의 신고의무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셰어링 등 O2O 서비스 공급자가 별도 신고 없이 전자상거래 가능하도록 신고의무 부담 완화 추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서비스 공급자의 환불·손해배상, 플랫폼 업체의 정보제공 의무 등은 존치
공유경제 플랫폼 혁신지원	공유경제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 세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유망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데이터·보완 등 ICT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업이 공유·활용 가능한 데이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가 보유한 국가중점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기업이 수비계 데이터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맵 공개 빅데이터를 생산·관리하는 전문센터 구축 및 주요 산업별 빅데이터 분석·유통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 지능형 서비스 활용도가 높은 분야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공유경제 조사·분석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한 체계적 현황파악을 통한 정책수립을 위해 O2O 시장동향·이용실태 조사 실시

자료: 관계부처합동, 2019,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즉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동향을 요약하면, 2016년 新서비스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공유경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관련 정책들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들이 이미 2014년부터 공유관련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지자체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지만 국내 공유경제 관련 법·제도는 미비하다는 한계점이 강하게 대두되었고, 이에 중앙정부의 공유경제 정책은 주로 시행과정에서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유경제 정책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체계적인 규제 체계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이는 중앙정부 단위에서 해야만 하는 역할이기도 하다. 다만 현재 중앙정부 단위 공유경제 정책은 숙박·차량·금융 등에 관한 법·제도적 방안에 국한되어 있을 뿐, 공간·물품·지식 및 정보공유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제도적 방안으로까지는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2절 지방정부의 공유경제 정책추진 동향

1. 공유 관련 조례 분석

1) 개요

본 연구는 지역단위 공유경제 정책 추진 현황 및 동향을 살펴보고자 관련 조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례는 지역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법적인 조치로서 지역민의 이해를 반영하고 지자체의 실행력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이다. 공유 관련 조례 분석은 법제처가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을 모두 이용하여 검색 시 누락되는 조례의 수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고, 조례 추출을 위한 검색어는 공유, 공유경제, 공유 활성화 등이 주요 단어로 설정되었다. 검색기간은 2019년 4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였으며 공유가 포함되어 있으나 본 연구와 관련이 없는 조례(예컨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는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2) 현황 및 내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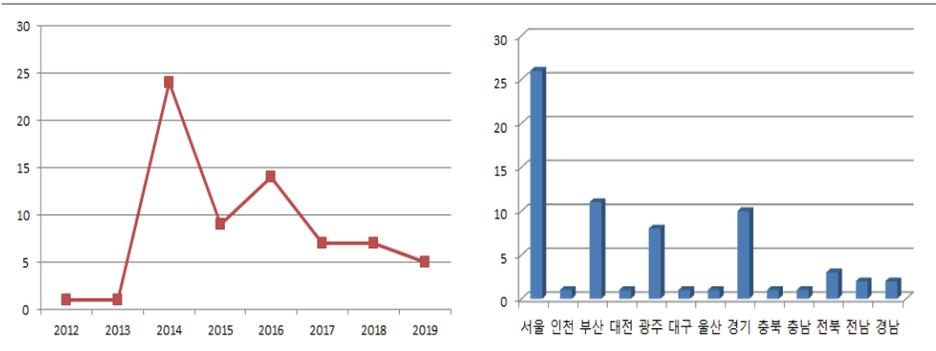
2019년 4월 현재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공유 관련 조례 분석 결과, 총 68건의 조례가 검색되었다. 먼저, 지자체별 조례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광역지자체는 10곳, 기초지자체는 58곳이 이에 해당하였다. 특히, 기초지자체 내 조례 대부분은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시와 구 지역에서 제정되어 과반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에 해당하는 군 지역의 조례 보유 현황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표 3-7】 공유 관련 조례 보유 현황(2019년 4월 기준)

지역		조례 수(건)	비중(%)
광역	본청	10	14.7
	시	13	19.1
기초	군	3	4.4
	구	42	61.8
전체		68	100

2012년 서울시 공유 촉진 조례를 시작으로 등장한 국내 공유 관련 조례는 2013년 광주시 공유 촉진 조례 1건에 이어 2014년 24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이후에도 제정 추이는 지속되어 최근 5년 사이 등장한 공유 관련 조례의 수는 42건에 이른다. 초반의 상승세를 이끈 지역은 단연 서울로 2014년 한해 20개의 서울시내 지역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2019년 분석 시점을 기준으로 세종, 강원, 경북, 제주를 제외한 지역 내 한 건 이상의 공유 관련 조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1건, 경기 10건, 광주 8건으로 후순위를 차지하였다.

[그림 3-2] 연도별·지역별 공유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주: 2019년 4월 기준

연도별 지역별 조례제정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공유 관련 조례의 급증은 서울과 부산,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2015년은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2016년은 부산, 경기 지역 내 소속 기초지자체들의 조례 제정이 잇따랐다. 수도권 및 지방 중추 도시를 중심으로 공유경제를 촉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분명한 가운데,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전남 여수시, 경남 거창군과 양산시 등은 인근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 빠른 공유경제 정책 도입을 시도한 곳이다.

한편, 공유(경제) 촉진 조례 외 별도의 관련 조례를 보유한 지자체로는 서울 은평구와 광주 동구, 광주 서구, 경기도청 등이 있다. 서울 은평구는 2014년 9월 ‘은평구 공유 촉진 조례’를 도입함에 있어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함께 제정하

였고, 광주 동구와 광주 서구는 2015년과 2016년 각각 공유 촉진 조례를 제정한 후 2019년 4월 물품공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추가 제정하였다. 또한 2014년 8월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는 2018년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분야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도모 중이다.

[표 3-8] 연도별·지역별 조례 제정 현황

연도별	지역	건수
2012년	서울본청	1
2013년	광주본청	1
2014년	서울강북, 서울광진, 서울도봉, 서울동대문, 서울성동, 서울성북, 서울용산, 서울종로, 서울강서, 서울구로, 서울금천, 서울노원, 서울동작, 서울마포, 서울서대문, 서울영등포, 서울은평(2), 서울강동, 서울관악, 부산본청, 부산해운대, 경기본청, 경기성남	24
2015년	서울양천, 대전본청, 광주동구, 광주광산, 광주북구, 부산남구, 부산북구, 전북전주, 경남거창	9
2016년	광주남구, 광주서구, 부산사상, 부산사하, 부산서, 부산영도, 부산중구, 부산기장, 경기수원, 경기구리, 경기시흥, 전북완주, 전남여수, 경남양산	14
2017년	서울중랑, 서울송파, 인천본청, 대구본청, 부산동래, 충남아산, 전북본청	7
2018년	서울중구, 경기본청, 경기광명, 경기안양, 경기평택, 충북충주, 전남본청	7
2019년	서울서초, 광주동구, 광주서구, 울산중구, 경기화성	5

주: 괄호 안의 수는 보유 조례 건수 / 2019년 4월 기준

[표 3-9] 공유 관련 조례 소관부서 현황

구분	자치행정	지역경제	혁신·참여	도시재생	기타
부서 수(개)	11	30	22	3	2
비중(%)	16.2	44.1	32.4	4.4	2.9

주: 기타는 농업정책과, 도시농업과 이상 2개임/ 2019년 4월 기준

공유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소관부서를 살펴본 결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과, 인구일자리과 등 다양하였다. 총 68개의 소관부서를 자치행정(자치행정과, 주민자치과 등), 지역경제(기획예산과, 경제진흥과, 일자리경제과 등), 혁신·참여(사회혁신담당관, 사회적경제과, 마을공동체과 등), 도시재생(도시전략과, 도시재생과 등) 등으로 임의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지역경제 관련 부서가 30개(44.1%)로 가장

많고 혁신·참여 부서가 22개(32.4%)로 뒤를 이었다.¹

지역별 공유 관련 조례 소관부서의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전북 지역은 혁신·참여 담당 부서가 상대적 강세를 보인 반면, 부산, 경기, 경남 등은 일자리경제과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제 담당 부서가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이는 지자체별 공유경제 도입 목적 및 필요 등에 따라 상이한 운영체계가 작동되는 결과로 해석된다.

[표 3-10] 지역별 공유 관련 조례 소관부서 현황

구분	자치행정	지역경제	혁신·참여	도시재생	기타
서울	5	11	9	1	0
인천	0	0	1	0	0
부산	2	8	1	0	0
대전	0	0	1	0	0
광주	3	1	2	2	0
대구	0	0	1	0	0
울산	0	1	0	0	0
경기	1	5	2	0	2
충북	0	1	0	0	0
충남	0	0	1	0	0
전북	0	0	3	0	0
전남	0	1	1	0	0
경남	0	2	0	0	0

주: 2019년 4월 기준

3) 내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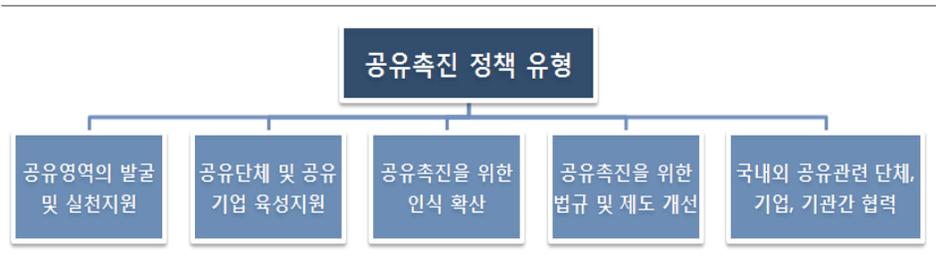
2019년 4월 기준 총 68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내용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유사한 구성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다만, 소수의 지자체에서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접근을 추진 중에 있었다.

먼저, 공유 관련 조례의 제정 목적은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¹ 단, 소관부서의 임의 구분에 있어 상세한 소관부서명이 제시된 경우 담당부서의 성격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예컨대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팀으로 표시된 경우나 기획예산과 구정비전팀으로 표시된 경우 각각 자치행정이나 지역경제가 아닌 혁신·참여로 분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었다. 여기서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에 공유 촉진 정책이란 크게 5가지로 공유 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등이었다.

[그림 3-3] 공유관련 조례의 정책 유형



지원내용에 있어 현 지자체의 공유 관련 조례는 공유경제의 촉진 또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공유촉진/활성화위원회 구성을 통한 보조금 지급 등이 주축을 형성한 가운데 서울 은평구, 광주 동구, 광주 서구 등처럼 별도의 공유 기관을 마련한 경우도 있었다.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을 언급한 경우도 있었으며 온라인 기반의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기반의 공유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등을 명시한 지자체도 있었다.

보다 상세한 지원내용별 지자체 현황을 살펴보면 공유촉진/활성화 위원회 구성 및 보조금 지급은 2019년 4월 기준 공유경제조례를 도입하고 있는 63곳의 지자체 전부가 포함하는 내용이다. 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으로 공유 활동가, 공유 단체 및 공유기업, 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나 필요한 지원 등은 이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표 3-11】 자원내용별 지자체 현황

구분	위원회 구성 및 보조금 지급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	공유경제 정보관리 시스템 설치 및 운영	공유경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자체 수(건)	63	17	10	16	18	22

한편, 공유 촉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이나 1년 단위의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실시 등을 추진하는 경우는 총 43건이 있었다.² 기본계획은 공유 촉진을 위한 시책 개발, 재원 조달, 제도 개선 등을 다루는 장기적·거시적 접근으로서 총 17곳의 지자체가 수립·시행 중이었고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수립하는 실질적 계획으로서 총 10곳의 지자체가 추진 중이었다. 이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나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공유 자원, 공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은 총 16곳이었다. 이처럼 공유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일부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현실화되는 가운데, 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태조사를 모두 시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기본계획만 수립하거나 실태조사만을 실시하는 등 관련 내용은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표 3-12】 계획 수립 관련 지자체 현황

구분 (건)	지자체 현황	
	광역	기초
기본계획 (17)	서울본청, 인천본청, 대전본청, 부산본청, 경기본청, 전북본청, 전남본청	울산중구, 부산서구, 경기성남, 경기수원, 경기안양, 경기평택, 경기화성, 충북아산, 전북전주, 경남양산
시행계획 (10)	서울본청, 인천본청, 대전본청, 부산본청, 전북본청	부산서구, 경기성남, 충남아산, 전북전주, 경남양산
실태조사 (16)	서울본청, 인천본청, 대구본청, 부산본청, 전남본청	경기성남, 경기수원, 경기안양, 경기구리, 경기시흥, 경기평택, 경기화성, 충남아산, 전북전주, 전남여수, 경남양산

² 단, 경기 평택시는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오프라인 공유 촉진을 위한 기반 구축에 노력 중이었다. 온라인 기반의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을 명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총 18곳으로 서울의 공유플랫폼, 경기의 공공오픈플랫폼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오프라인 거점으로서 공유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관련 내용 언급 횟수는 총 22건으로 파악되며 이 중 서울 은평구, 광주 동구, 광주 서구는 지역 내 물품 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별도의 조례가 제정·시행 중이었다.

【표 3-13】 공유경제 정보관리시스템 및 지원센터 관련 지자체 현황

구분 (건)	지자체 현황	
	광역	기초
공유경제 정보관리 시스템(18)	서울본청, 인천본청, 광주본청, 부산본청, 경기본청(2)	광주광산, 광주서구, 울산중구, 경기광명, 경기수원, 경기안양, 경기평택, 충북충주, 충남아산, 전북완주, 전북전주, 경남양산
공유경제 지원센터(22)	인천본청, 대전본청, 광주본청, 대구본청, 부산본청, 전남본청	서울성동, 서울은평, 광주동구, 광주북구, 광주서구, 울산중구, 경기성남, 경기수원, 경기안양, 경기구리, 경기시흥, 경기평택, 충남아산, 전북전주, 전남여수, 경남거창

주: 지자체 현황 내 괄호 속 숫자는 관련 조례 보유 수

2. 공유 관련 동향 분석

1) 공유경제의 조례 확산

(1) 조례의 양적 증대

본 연구의 조례분석 결과, 2012년 12월 서울시 공유 촉진 조례가 첫 등장한 이래 2019년 4월 현재까지 총 63곳의 지자체에서 68건의 공유 관련 조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관련 조례 제정의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한 해 평균 8.5개의 조례가 제정되었고, 시기적으로는 2014년과 2016년의 제정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표 3-14] 공유 관련 조례의 누적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누적수(건)	1	2	26	35	49	56	63	68

주: 2019년 4월 기준

특히, 국내 정책 도입 당시 서울과 서울 소속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되던 공유 조례는 이후 광주, 부산, 경기, 전북, 경남 등의 일부 지자체로 확산되었고 최근 3년간 공유 조례 확산은 더욱 전국화되어 인천, 대구, 전남, 울산, 충북 내 지역이 새로이 포함되었다. 즉, 지자체의 공유 관련 조례는 양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다만, 지역의 관심과 이해에 따라 정책 도입의 온도차가 존재하는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실시되던 공유 조례는 점점 전국화되는 경향이 있다.

[표 3-15] 공유 관련 조례의 지역별 누적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서울	1	1	21	22	22	24	25	26
인천	0	0	0	0	0	1	1	1
부산	0	0	2	4	10	11	11	11
대전	0	0	0	1	1	1	1	1
광주	0	1	1	4	6	6	6	8
대구	0	0	0	0	0	1	1	1
울산	0	0	0	0	0	0	0	1
경기	0	0	2	2	5	5	9	10
충북	0	0	0	0	0	0	1	1
충남	0	0	0	0	0	1	1	1
전북	0	0	0	1	2	3	3	3
전남	0	0	0	0	1	1	2	2
경남	0	0	0	1	2	2	2	2

주: 2019년 4월 기준

(2) 지역별 조례 확산 및 추진체계 상이

각 지자체의 조례 제정일을 기준으로 조례 확산 과정을 살펴본 결과, 일반적으로 공유경제 조례의 확산은 서울, 광주, 부산, 경기 등 광역 지자체의 정책 우선 도입에 따른 소속 기초지자체의 후발 참여가 주축을 이뤘다. 즉, 정책 도입의 하향식 접근이 강

한 편이었고,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및 지방 중추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이슈 선점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와 상이한 정책 도입 사례가 포착되었는데, 전북 완주군과 전주시, 전남 여수시는 각각의 소속 광역지자체인 전북도청과 전남도청의 공유정책을 도입한 2017년과 2018년 이전에 관련 조례를 선도적으로 제정·시행한 곳이었고, 울산 중구, 충북 충주시, 충남 아산시, 경남 거창군과 양산시는 소속 광역지자체의 법률적 조치가 여전히 부재한 상황에서 공유 정책을 우선 도입한 지역이었다. 지역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접근으로서의 공유정책이 상향 확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3-16] 공유 조례의 확산 유형

유형	광역	기초
하향식	서울(2012)	강북, 광진, 도봉, 동대문, 성동, 성북, 용산, 종로, 강서, 구로, 금천, 노원, 동작, 마포, 서대문, 영등포, 은평[2], 강동, 관악(이상 2014), 양천(2015), 중랑·송파(2017), 중구(2018), 서초(2019)
	인천(2017)	-
	대전(2015)	-
	광주(2013)	동구·광산구·북구(2015), 남구·서구(2016), 동구·서구(2019)
	대구(2017)	-
	부산(2014)	해운대(2014), 남구·북구(2015), 사상·사하·서구·영도·중구·기장군(2016), 동래(2017)
상향식	경기(2014)	성남(2014), 수원·구리·시흥(2016), 경기본청·광명·안양·평택(2018), 화성(2019)
	울산(미제정)	중구(2019)
	충북(미제정)	충주(2018)
	충남(미제정)	아산(2017)
	전북(2017)	전주(2015), 완주(2016)
	전남(2018)	여수(2016)
	경남(미제정)	거창(2015), 양산(2016)

주: 2019년 4월 기준하여 조례 제정일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간 시점 비교
괄호는 조례제정시점이며 은평[2]는 관련 조례수가 2개임을 의미

한편, 지역마다 정책 소관부서는 달리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마다 공유 개념을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상이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실제 서울시청의 경우

공유도시를 시민사회, 기업, 공공부문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공유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로 정의하고 서울혁신담당관 내 공유도시팀을 조직하여 정책 전반에 관심을 두는데 반해, 부산시청은 일자리경제실 사회적경제과를 중심으로 공유단체 및 기업육성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는 등 정책 추진 과정상 지역차가 존재한다. 향후 본격적인 공유 관련 정책 구현에 앞서 해당 운영추진 체계의 조정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7】 공유 정책 도입 목적 및 추진 체계 비교(서울 vs.부산)

지역	정책 도입 목적	추진체계
서울시	시민사회, 기업, 공공부문의 소통과 협업을 통한 공유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혁신담당관 내 공유도시 전담 •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공유경제 온라인 플랫폼(공유허브)
부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생경제과, 부산경제진흥원 중심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공유경제 시민허브

2) 공유경제의 범위 확대

(1) 공유경제의 사업범위 확대

대부분의 공유 관련 조례는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사회문제 해결을 직·간접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여기서 공유 촉진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는 크게 5가지로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분야의 전반을 아우른다.

【표 3-18】 공유 촉진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범위

구분	상세 내용
경제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복지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
문화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환경	과잉소비, 에너지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교통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주: 그 밖에 공유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도 사회문제로 포함함

출처: 구리시 공유촉진 조례 일부 내용 발췌

경기침체, 청년실업 등에서부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문화소외, 주차장 부족 등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사회문제 전반에 대한 문제해결사로서 공유경제에 대한 지자체의 기대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현재 물품이나 정보의 공유 수준에 머무는 소극적인 공유경제의 사업 범위는 다양한 범위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도 향후 적극적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공유 정책 확보는 지자체 공유 정책의 성공을 판가름할 핵심이 될 것이다. 지역이 경험하는 사회문제가 각기 다른 만큼 지역 맞춤형 공유 정책 도입은 공유경제에 대한 지자체의 높은 기대치에 부응할 유일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2) 공유경제의 공간적 범위 확장

소수의 사례이기는 하나 공유경제에 대한 공간적 범위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확대되는 지점 또한 포착되었다. 해당 조례는 바로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와 ‘경기 광명시 공유농업지원 조례’ 이상 2건이다.

[표 3-19]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의 기본원칙 및 지원내용

구분	내용
기본원칙	① 경기도 공유농업은 소비자와 농업인의 공동 참여와 연대에 기초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한다 ② 경기도 공유농업은 농업의 다양성 확보, 농촌 환경의 보전과 양극화 해소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③ 경기도 공유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이나 가공품 등은 상품화 및 시장유통을 지양하여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④ 경기도 공유농업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지원내용	①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지정 ② 공유농업네트워크 구축 ③ 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④ 공유농업의 활성화 교육 및 홍보

출처: 경기도 공유농업지원 조례 내용 중 발췌

2018년 3월과 9월 각각 제정된 이들 조례는 공유농업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관계 회복과 상호신뢰 증진을 통해 지역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경기도와 경기 광명시는 공유농

업 조례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 4가지 기본원칙을 상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공유농업 플랫폼 운영자 지정, 공유농업네트워크 구축, 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교육 등이 있다.

이제까지 다분히 도시 중심이었던 공유경제 구현이 도농교류 진작 및 농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표로 농촌 지역에 확대·실시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공유농업은 농촌이 더 이상 도시와의 대척점이 아닌 상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담당한다.

3) 공유경제의 공적 실현

(1) 공유경제 실현을 위한 계획적 접근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증가함에 따라 공유경제의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접근 또한 체계화되고 있다. 2019년 4월 기준 공유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자체는 총 20곳으로 광역 8곳, 기초 12곳이다.

[표 3-20] 공유 계획 수립 정도에 따른 지자체 현황

구분	지역	
	광역	기초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모두	서울, 인천, 부산	경기성남, 충남아산, 전북전주, 경남양산
기본·시행계획 수립 만	대전, 전북	부산서구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만	전남	경기수원, 경기안양, 경기평택, 경기화성
기본계획 수립 만	경기	울산중구
실태조사 실시 만	대구	경기구리, 경기시흥

조례분석을 통해 파악된 공유경제를 위한 계획적 접근은 크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실태조사 이상 3가지로 구분된다. 그 중 기본·시행계획은 물론 실태조사까지 모두 명시한 지자체 수는 총 7곳으로 서울, 인천, 부산 등 광역지자체 3곳을 비롯하여 경기 성남시, 충남 아산시, 전북 전주시, 경남 양산시 등 기초자치단체 4곳이 이에 해당한다. 본 조례분석 상 이 지역들은 타 지역에 비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노력

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대전·전북, 부산서구 등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만을, 대구와 경기구리, 경기시흥은 실태조사 실시만을 언급하는 등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체계화 수준은 달리 나타났다. 공유경제를 법제화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공유경제가 지역의 핵심정책으로 부상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러한 계획적 접근은 갈수록 증대하는 공유경제의 관심 및 기대와 비례하여 더욱 확대·강화될 것이다.

(2) 공유경제의 거점 확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구체적 실현 방안은 온라인 기반의 공유경제정보 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기반의 공유경제지원센터 이상 2가지다. 2019년 4월 기준 본 조례분석결과 온오프라인 공유경제 거점을 모두 명시한 지자체는 총 10곳으로 광역 3곳과 기초 7곳이었다.

[표 3-21] 공유경제 거점 확보 정도에 따른 지자체 현황

구분	지역	
	광역	기초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및 공유경제지원센터 운영·설치 모두	인천, 광주, 부산	광주서구, 울산중구, 경기수원, 경기안양, 경기평택, 충남아산, 전북전주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운영·설치 만	서울, 경기	광주광산, 충북충주, 전북완주, 경남양산
공유경제지원센터 운영·설치 만	대전, 대구, 전남	서울성동, 서울은평, 광주동구, 광주북구, 경기성남, 경기구리, 경기시흥, 전남여수, 경남거창

지역사정에 따라 지원 정책 유형 및 추진 속도에 차이가 있는 가운데, 현재 구현 중인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으로는 서울시 공유허브와 부산시 공유경제부산 등이 대표적이고, 공유지원센터로는 서울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와 광주 서구 물품공유센터 등이 있다. 공유경제가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가치창출활동이라는 점에서 향후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 운영은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며 각종 공유 활동의 물리적 거점이 될 지원센터 역시 상시 확대 운영될 여지가 크다.

제3절 시사점

공유경제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의 확산은 우리나라 중앙 및 지방정부 단위에서의 움직임 역시 가속화시켰다.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2016년 新서비스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 공유경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관련 정책들을 확대 추진해 왔다. 특히 2019년 초에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교통, 숙박, 공간, 금융·지식 등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과세, 참여자 보호, 기업 지원 등의 제도적 기반마련에 초점을 둘 것을 명시하였다. 특히 국내 공유경제 관련 법·제도가 미비하다는 한계점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중앙정부의 공유경제 정책은 주로 시행과정에서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현재 중앙정부의 공유경제 정책은 숙박·차량·금융 등에 관한 법·제도적 방안에 국한되어 있을 뿐, 공간·물품·지식 및 정보공유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제도적 방방으로까지는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가 큰 틀에서의 공유경제 관련 법적·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지자체 단위에서는 공유경제를 활용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좀 더 다각화 되어 있는 편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 움직임은 공유경제 관련 정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로서의 조례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수행한 조례분석 결과 지자체 단위 공유경제 관련 조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양적·질적 측면에서도 성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여 년의 짧은 기간 동안 공유경제 관련 조례 제정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한해 평균 8.5개의 조례가 제정되었고, 시기적으로는 2014-2016년 사이에 상대적으로 많은 조례가 제정되었다. 특히 초기에는 서울, 부산, 경기 지역의 중심으로 기초지자체들의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다가, 최근에는 전국화되면서 인천, 대구, 전남, 울산, 충북 지역의 기초지자체로 그 흐름이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경제 관련 정책도입 움직임에 있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수도권 및 지방 중추 도시를 중심으로 한 이슈 선점 경향과 하향식 정책 도입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지역의 필요에 따라 공유정책이 상향 확산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즉 초기에

는 서울, 광주, 부산, 경기 등 광역 지자체의 정책 우선 도입에 따른 소속 기초지자체의 후발 참여가 주축을 이루는 하향식 접근이 강한 편이었음에 반해, 전북 완주군, 전주시, 충북 청주시, 경남 거창군, 양산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광역단위에서의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공유정책을 우선 도입하는 등 상향적 확산도 포착된 것이다. 또한 이들 지자체의 공유경제 관련 소관부서가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마을공동체과, 인구일자리과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자체별 공유경제 도입의 목적 및 필요에 따라 상이한 운영체계가 작동되는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조례상 나타나는 각 지자체의 공유 촉진 정책을 살펴보면 공유 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등 크게 5가지로 대별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공유경제 사업 범위가 확대되거나, 공간적 범위 역시 도시에서 농촌으로 확대되는 현상도 나타났다. 무엇보다 공유경제의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접근 또한 체계화 되면서 공유 관련 기본계획, 시행계획,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지역도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 단위에서의 조례 제정 확산과 공유 촉진 정책의 다각화 양상은 이를 토대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의 필요와 요구의 발현이라 할 수 있으며, 단순히 조례 제정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정책의 방향성 설정 및 세부 추진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대두시킨다.

【표 3-22】 정책 추진 동향 시사점

구분	내용
중앙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틀에서의 공유경제 관련 법적·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 초점 •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과 과세, 참여자 보호, 기업 지원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 계획 수립(2019) • 특히 시행과정에서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 • 다만, 숙박·차량·금융 등에 관한 법·제도적 방안에 국한, 공간·물품·지식 및 정보 공유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제도적 방방으로까지는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지방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경제를 활용하여 지역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좀 더 다각화 • 최소한의 법적 근거로서의 조례제정의 전국적 확산(2014-2016), 양적·질적 측면에서도 성숙 • 정책 주요 내용: 정책 내용 발굴 및 실천 지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국내외 공유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등 크게 5가지로 대별 • 수도권 및 지방 중추도시를 중심으로 한 이슈 선점 경향과 하향식 정책 도입 움직임 두드러졌으나, 최근에는 지역의 필요에 따라 공유정책이 상향 확산하는 경향 • 지자체별 공유경제 도입의 목적 및 필요에 따라 상이한 운영체계가 작동 • 조례 제정 확산과 공유 촉진 정책의 다각화 양상 → 지역의 필요와 요구의 발현 →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유경제 정책의 방향성 설정 및 세부 추진전략 마련의 필요성 강조

제4장



해외 공유경제 정책 동향 및 사례

- 제1절 미국의 공유경제 정책 동향 및 사례
- 제2절 일본의 공유경제 정책 동향 및 사례
- 제3절 시사점

제1절 미국의 공유경제 정책 동향 및 사례

1. 공유경제 추진 배경 및 분야

1) 공유경제 추진 배경

미국에서 공유경제 개념은 캘리포니아 주를 시작으로 P2P(Peer to Peer) 모델을 전문적으로 개발 연구하는 스타트업(start-up) 기업에서 공유경제 플랫폼 기술을 상업화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미국이 전 세계 공유경제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미국의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186억 달러이며 2022년에는 402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2) 미국의 분야별 공유경제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 (Federal Trade Commission)는 공유경제의 개념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미국 주정부(state government)가 각주(states)의 상황과 실정에 맞게 공유경제 관련 규제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공유경제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총 7개 분야로 구분하여 공유경제 로드맵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공유경제 정책은 [그림 4-1]과 같이 ① 물품공유(Shared Goods), ② 음식공유(shared Food), ③ 에너지 공유(Shared Energy), ④ 커뮤니티공유(Community Sharing), ⑤ 데이터공유(Addressing Data Gaps), ⑥ 운송수단공유(Shared Mobility), ⑦ 공간공유(Shared Spaces) 총 7가지 분야 안에서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시정부의 주도하에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4-1]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유경제 로드맵



자료: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Sharing Economy (2015)³

공유경제에서 물품공유(Sharing Goods)은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주로 중고매매나 대여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웹 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한 공유경제 플랫폼 P2P의 거래형태로 발생되고 미국에서는 크레이그리스트(Craigslist)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물물교환의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공유경제에서 음식공유(Sharing Foods)는 주방용품이나 조리시설을 공유하거나 같이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공간을 공유하는 개념을 뜻한다. 미국의 클라우드 키친(Cloud Kitchens) 외식업체가 대표적인 예이며, 현재 외식업체의 신규 창업자들에게 인기이지만 하나의 공간에 하나의 사업자만을 인정하는 법안이 존재하는 주에서는 정부의 규제를 완화해 공유주방을 합법화 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에서의 에너지 공유(Shared Energy)는 주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는 빈민층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나 사물인터넷을 활용하여

³ <http://www.localgovsharingecon.com/>

개인간 에너지를 교환하는 개념으로써 개인들이 잉여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기증하거나 공유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개개인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특정 양의 전력을 구매하여 다른 이에게 기증할 수 있다. 현재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는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한 에너지 공유 사업이 실행중이다.

커뮤니티 셰어링(Community Sharing)은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주민들 간의 공유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운영된다. 지역주민들은 실생활에 유용한 개인의 재능이나 기술을 공유하고 지방정부는 개인과 개인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미국 내의 여러 지역사회에서는 「Fix-It Clinics」 프로그램을 통해 고장난 물품을 수리하는 기술을 지역주민들 간에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커뮤니티 단위에서 운영 중이다.

데이터공유(Addressing Data Gaps)는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통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간의 공공정보를 서로 개방하여 공유함으로써 정부 간 (부처 간) 소통과 협력 증진을 추구한다. 미국의 각 정부기관들은 서로의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 증진시키며 부처 간 데이터 사용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 있는 실정이다. 빅데이터를 공유 및 관리하는 차원에서 미국 연방정부는 2016년 「The Federal Big Data R&D Strategic Plan」을 제정·시행중이다.

교통공유(Shared Mobility)는 교통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운송수단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공유'로 바뀌면서 카셰어링(Carsharing), 라이드셰어링(Ridesharing)과 같은 개인 교통형 공유모빌리티서비스의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카셰어링(Carsharing)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공유플랫폼을 통해서 자동차를 예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대기환경 개선, 비용절감 등이 장점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미국에서는 카셰어링(Carsharing)의 리바운드 효과(Rebound Effect)에 주목하면서 카셰어링으로 인해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자동차들이 추가적으로 도로에 유입되어 더 복잡한 교통체증과 더 많은 에너지 소비를 유발시킨다는 관점이 논의 중에 있다.

공간공유(Shared Spaces)는 주택공유와 유희토지 공유분야로 나뉜다. 주택공유는 가족이나 친척 이외의 타인과의 계약을 토대로 주방, 화장실 주거 및 생활 관련 시설을 공유하며 같이 거주하는 개념을 뜻하며, 셰어하우스가 주택공유의 한 형태로 설명될 수 있다. 주택공유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민간업체의 예로 Airbnb를 들 수 있다. 공공

의 영역에서도 노인들을 위한 합동 주택(Co-Housing) 또는 공동체토지신탁제도(Community Land Trust)를 바탕으로 개발된 커뮤니티를 중심의 공간공유 공공사업이 실행중이다. 공동체토지신탁제도는 비영리 조직⁴이 땅을 영구적으로 소유 관리하면서 공동체가 만든 가치를 지역 내 저장·공유하는 개념으로 토지 가치를 지역 전체가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진다. 유희토지 공유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하여 교회, 결혼식과 같은 행사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워크숍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창작 공간, 목공예, DIY(Do It Yourself)등 일상용품을 만들 수 있는 도구를 빌려주고 교육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

2. 미국의 공유경제 관련 정책 추진 동향

1)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추진 동향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정된 공유경제 관련 기본법은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지만,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에서 발표된 자료 “Sharing’ Economy Issue Facing Platforms Participants & Regulators”⁵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정부는 공유경제 전반에 관련된 기본법(원칙&방향)을 제정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유경제가 확장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주(State)정부 및 시정부(City)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추진 동향

현재 미국에서의 공유경제에 관련된 정책은 연방정부보다는 주·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도 되고 있으며 숙박공유와 차량공유를 중심으로 규제 도입 및 법제화가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유희토지 및 유희물품을 활용한 물품공유, 에너지공유 및 홈셰어링을 통해 소외계층 및 노후계층의 복지 향상에 활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공공정책들이 추

4 지역기반의 사회적 기업을 뜻함

5 https://www.ftc.gov/system/files/documents/reports/sharing-economy-issues-facing-platforms-participants-regulators-federal-trade-commission-staff/p151200_ftc_staff_report_on_the_sharing_economy.pdf (검색일: 2019. 06. 09.)

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유경제에 대한 미국의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 동향은 도심지역의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대응체계가 마련 중이며 미국의 중·소도시에서는 공유경제를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아직까지 미흡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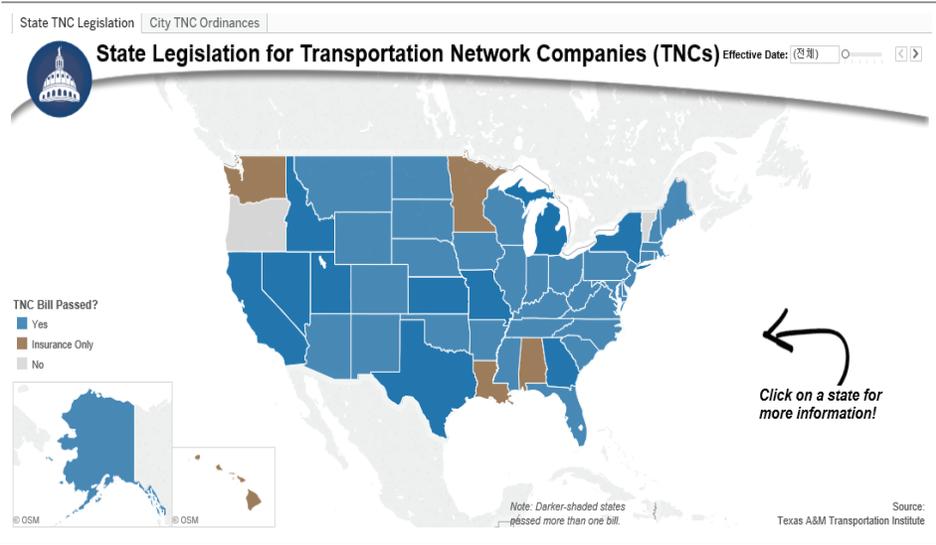
공유경제 유형에 따른 각 주·지방정부의 정책 추진 동향을 살펴보면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주택(공간)공유(Shared Space)에 대한 정책대응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인디애나(IN)가 「House Bill 1035」⁶를 토대로 단기공유숙박을 허가하는 정책을 합법화한 대표적인 주로 언급되며, “보안(Security)”, “안전(Safety)”에 초점을 두어 단기숙박공유가 가능한 기간을 지방정부별로 각각 상이하게 정하여 대응하고 있다. 아이오와주(IA), 오클라호마주(OK), 테네시주(TN), 조지아주(GA), 펜실베이니아주(PA), 뉴욕주(NY), 버몬트주(VT), 뉴저지주(NJ), 코네티컷주(CT), 메사추세츠주(MA)는 주정부 차원에서의 단기숙박공유의 합법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 중이며 우선적으로 지방정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일하게 네브래스카주(NE)에서는 단기숙박공유 합법화 승인이 의회에 의해 거부되었다. 이처럼 주정부 차원에서 일관된 정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공유숙박을 이용하는 게스트들은 단기숙박 임대 서비스가 해당지역에서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평이다(나승권·김은미·최은혜, 2017, p477). 또한 미국의 「Bloomberg Tax 2018 Survey」⁸ 연구결과에 따르면 총 25개의 주에서 단기숙박공유로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숙박시설 소유자로부터 의무부과 하도록 하는 세법을 합법화 하고 있으며 그 밖의 20개가 넘는 주에서는 단기공유숙박을 이용한 이용자가 사용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납부해야 하는 숙박세(logding tax)를 판매금액에 포함해서 징수하는 세법이 적용 중이다.

⁶ <http://iga.in.gov/legislative/2018/bills/house/1035> (검색일: 2019. 06. 09.)

⁷ 나승권·김은미·최은혜. (2017).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추진현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⁸ <http://www.ncsl.org/research/fiscal-policy/more-states-taking-action-on-short-term-rentals.aspx> (검색일: 2019. 06. 09.)

[그림 4-3] 미국의 「State Legislation for Transportation Network Companies (TNCs) 법 도입 현황 (2018년 기준)



자료: Texas A&M Transportation Institute (2019)

워싱턴(WA), 미네소타(MN), 알라바마(AL), 루이지애나주(LA)는 7개의 정책분야 중에서 공유자동차회사 운전자의 보험가입의 의무화에 관련된 사항만 법률로 제정하고 있다⁹. 워싱턴(WA), 미네소타(MN), 알라바마(AL), 루이지애나주(LA)는 「Assembly Bill 2293」상위법을 토대로 자동차 공유 업체의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있는 모든 기간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직접 보상해주거나 운전자로 하여금 개인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범위까지 별도로 보상해 주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⁹ <https://policy.tti.tamu.edu/technology/tnc-legislation/> (검색일: 2019. 06. 09.)

[표 4-1] 「State Legislation for Transportation Network Companies (TNCs)」
법 세부규정 사항

분야	세부규정 내용
허가 및 수수료	운송네트워크회사에 대한 정의
	운전면허증 요구사항
	행정비용
	운전자/자동차공유회사에게 부여된 요구사항
보험 및 재정적 책임	보험 요구사항
	운전자의 면허증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사항
	운전자의 보험 보장보위
	근로기준법
운전자 및 차종 요구사항	신청서류 작성 및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
	운전자의 신상정보 확인 사항
	차량 운행 중 음주 및 약물 복용 금지에 대한 사항
	운전기사들의 신상관리에 대한 사항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	안전교육에 대한 사항
	사전예약 없는 승차 금지에 대한 규정
	현금 지불 금지 규정
	운임요금 공개의무
	전자영수증 제공 의무 규정
	기사의 신상정보 제공 의무 규정
	트레이드 드레스(trade-dress) 표시 의무
	운행시간 제한 제도
	동적 가격전략 및 이용자 동의사항
비상상황 발생 시 동적 가격전략 사용	
소비자 보호	차별금지법
	개인정보 보호조치
	휠체어를 탄 장애인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데이터에 관한 보고사항	데이터 수집과 유지 관리
	차량운행기록에 대한 관리 요구
규제권한	데이터에 대한 추가 요구사항
	지방정부와 주정부 법 간의 충돌이 있을 경우 주법 우선시함
	공항에 관한 부여
	허가기관에 관한 부여

자료: Zmud, J., Goodin, G., Moran, M., Kalra, N., & Thorn, E. (2017). Advancing Automated and Connected Vehicles.

3. 미국의 공유경제 정책 사례

해외 사례 분석 목적은 주요국의 해외 선진 사례의 정책 현황 및 입법 현황을 검토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를 국내 공유경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분석 국가는 미국이며, 주요 분석내용은 공유목적(경제적, 사회적, 환경적)과 공유내용(공간공유, 음식공유, 에너지공유, 협력적 커뮤니티 공유, 데이터공유, 운송수단공유, 물품공유)에 따라 유형화해서 살펴보고 공유경제를 촉진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책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어진 법률적 현황을 동시에 검토하여 시사점 도출하고자 한다.

1) 경제적 가치(비즈니스형) 공유사례

(1) 운송수단공유: 공급자가(회사)가 개인들에게 차량을 임대하는 방식의 기업형 카셰어링

미국의 대표적인 차량 공유 회사 집카(ZIPCAR)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 기술을 기반으로 유료가입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정해진 구역에서 회원카드나 모바일 카드로 집카(ZIPCAR) 차량을 이용하고 목적지 근처의 정해진 장소에 차량을 반납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공유를 운영 중이다. 집카(ZIPCAR)의 서비스는 계약서를 쓰고 차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가 없어차량공유가 편리하다는 평이다. 하지만 차량이용을 원하는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서 차량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보통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 적합한 사업이고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은 교외 시골 지역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사업으로 평가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합승(Ridesharing)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자동차 운행의 효율화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결합한 서비스 형태로 그 범위로 확장하고 있다. 합승(Ridesharing)의 개념은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중간에 태워 이동하는 방식으로서 차량공유의 대표적인 회사 우버(Uber)는 2015년부터 우버풀(Uber Pool)이라는 합승 프로그램을 도입해 1인승차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승차 공유를 시행 중이다.

또한 미국의 몇몇 주정부는 자동차 공유에 친환경적인 전기차가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환경보호의 측면에서 자동차 공유 프로그램을 바라보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주정부는 에너지연구개발청(State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uthority)과 뉴욕주 교통국, 민간업체 집카(ZIPCAR)와 협력하여 친환경 전기차가 자동차가 공유 수단으로 확산될 수 있게 새로운 전기차 구입 25만 달러를 해마다 지원중이며, 일리노이주에서는 하원법안 「House Bill 2903」을 제정하여 일리노이주에 제공하는 보조금을 받는 자동차 공유 업체는 보조금 예산의 총 25%를 전기차 구입 비용으로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¹⁰.

(2) 개인들 간의 자동차를 공유하는 개인공유 카셰어링

미국에서는 개인들 간에 직접 자동차를 빌려주는 방식의 자동차 공유 서비스도 존재한다. 예로 버즈카(Buzzcar)는 인터넷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하여 개인의 차량을 이웃이나 다른 회원에게 직접 임대해 줄 수 있고 개인 간의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로 회사(버즈카, Buzzcar)는 수익을 얻는다. 버즈카(Buzzcar)는 민간기업으로서 수익창출을 위한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지만, 샌프란시스코의 씨티카셰어(Citycar Share)¹¹는 혼잡 완화,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 환경개선 등과 같은 수익 외의 목적으로 주 단위에서 비영리 사업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예이다.

카셰어링은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제 적이며 시민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효과성을 검증받고 있으며 이용자의 입장에서 차량 유지비가 들지 않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각 주마다 카셰어링을 장려하는 정책을 선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예로, 미국 포틀랜드주(Portland)에서는 카셰어링에 대한 세금을 완전히 면제하고 있고, 미국 콜로라도주는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 「Senate Bill 2731」을 마련하여 카셰어링의 세율을 30분당 25센트, 시간당 최대 3달러로 규정하는 등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¹⁰ <https://www.illinoisinnovation.com/governor-signs-legislation-to-boost-electric-vehicle-usage-in-illinois> (검색일: 2019. 06. 08.)

¹¹ 샌프란시스코 Bay Area지역에서 12대의 차량과 소수의 회원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1천 명 이상의 회원과 친환경차량 100여대와 12개의 교통관련 비영리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보유한 서비스로 성장 중이며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단체들과 협력하여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자동차공유협회(International Car Sharing Association)에 가입하여 활동 중

(3) 지방정부와의 협약을 통한 공유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사용 제도 마련

미국의 많은 주·지방정부들은 자동차 공유사업체와 협약하여 공유자동차가 공영주차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자동차 이용을 권장 하고있다. 주·지방정부는 사업체에게 낮은 사용 수수료의 혜택을 주고 공유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운영업체가 지정한 공영주차장의 주차공간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자동차 공유를 장려하기 위해 Transit Priority Program(TPP)을 통하여 자동차 공유를 위한 토지이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제정하였고, 이 프로그램은 상원법안 「Senate Bill 310」을 근거로 운영 중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공유차량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주차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5년 미국의 위스콘신 주정부 또한 자동차공유 주차공간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하였다. 위스콘신 주정부는 공영주차장이 민간 공유자동차 업체로부터 사전에 미리 예약되어 일반 자동차 사용자들이 공영주차장의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허가된 시간에 허가된 공간만을 공유자동차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¹²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표 4-2】 운송수단공유(Shared Mobility) 장려위한 미국 주·지방 정부의 정책사례

지역	정책사례	정책사례내용	공유자원
샌프란시스코	개인과 개인 간의 자동차 공유 장려	샌프란시스코 시티카셰어(Citycar Share)는 혼잡 완화,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 환경개선 등과 같은 수익 외의 목적으로 주 단위에서 비영리 사업으로 운영	자동차
캘리포니아주	자동차 공유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차 공간 제공	자동차 공유 장려위한 토지이용을 확대하는 Transit Priority Program을 제정하였고, 상원법안 「Senate Bill 310」을 근거로 운영 중	주차공간
포틀랜드주 콜로라도주	자동차 공유에 대한 세제혜택	미국 포틀랜드주(Portland)에서는 카셰어링에 대한 세금을 완전히 면제하고 있고, 미국 콜로라도주는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 「Senate Bill 2731」을 마련하여 카셰어링의	세금감면

¹² Chapter One(1) of the Department of Administration Code and S.S 16843 of the Wisconsin Statutes (<https://doa.wi.gov/CapitolPolice/Parking%20Rules%20and%20Procedures.pdf> 검색일: 2019. 06. 08.)

지역	정책사례	정책사례내용	공유자원
		세율을 30분당 25센트, 시간당 최대 3달러로 규정하는 등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법안을 통과	
뉴욕주 일리노이주	친환경자동차 확산을 위해 공유자동차와 정부 간의 협력 프로그램	일리노이주에서는 하원법안 「House Bill 2903」을 제정하여 일리노이주에 제공하는 보조금을 받는 자동차 공유 업체는 보조금 예산의 총 25%를 전기차 구입 비용으로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	전기자동차

자료: Local Governments and the Sharing Economy (2015)

(4) 그 밖의 운송수단 공유에 관련된 미국정부의 제도현황

미국의 워싱턴 D.C, 미네아폴리스 세인트폴, 보스턴, 덴버 지역의 주·지방정부에서는 공공 자전거 세어링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기금마련에 힘쓰고 있다. 미국 교통부 연방 고속도로국에서는 공공 자전거 세어링 프로그램을 위해 현재 \$6백만 달러 규모의 기금 마련 중이며, 미네아폴리스 세인트폴 정부 또한 Nice Ride 프로그램 위해 \$3백만 달러의 기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다. 보스턴 지역에서는 정부주도 허브웨이 바이크세어링 프로그램이 시행중이며, 덴버 지역에서는 「B-Cycle」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또한 미국 달라스, 로스앤젤레스, 아틀란타, 메사추세츠, 로레곤 주에서는 대중교통과 자동차공유 연계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빌리티 허브 개발 사업을 시행 중이다.¹³

(5) 단기공유숙박(Short-Term Rentals)에 대한 새로운 규제 정비

미국 오regon 주의 포틀랜드 시는 「Portland Zoning Code Section 33.207」¹⁴ 제정하여 주택임대는 오직 영구 거주자만이 할 수 있으며, 주택 전체를 임대하는 것은 1년에 총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샌프란시스코에서도 「Airbnb Law」 제정하여 영구 거주자를 제외하고 주택전체를 임대하는 것을 1년에 90일 미만으로 제정하고 단기 임대일 경우 임대인은 50만 달러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¹³ 최새로나, 이수일 (2018). 카셰어링 교통안전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교통안전공단

¹⁴ The City of Portland 홈페이지 참조(<https://www.portlandoregon.gov/bds/65603> 검색일: 2019. 06. 05.)

함을 추가 신설하였다. 라스베가스와 산타모니카(Santa Monica, CA) 역시 단기숙박 임대일 경우 31일을 초과하여 임대할 수 없는 규제를 신설했으며,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CA) 역시 단기숙박 임대기간을 1년에 120일 미만으로 제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단기공유숙소 예약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플랫폼은 Airbnb, HomeAway, Couchsurfing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미국 포틀랜드 시(지방정부)는 Airbnb와 협력구축을 통해 Airbnb를 통해 집을 빌려주는 집주인에게 180달러 금액의 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는 규제를 도입하고 11.5%의 세금징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공공임대 주택비용 부담을 낮추는 기금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민간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대표적인 선도 사례를 보이고 있다.

[표 4-3] 미국의 숙박공유 플랫폼

플랫폼	사업방식	사용자수	서비스제공지역
Airbnb	단기 숙소 대여 플랫폼	집주인에 의해 제공되는 숙소 약 200만개	전 세계 190개 국가
HomeAway	휴가용 숙소 임대 플랫폼	유료등록 숙소 100만개 이상 보유	전 세계 190개 국가
Couchsurfing	휴가용 숙소 임대, 교류,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으로 비영리기구로 설립되어 영리기구로 재편됨	회원 수 약 1천만 명 이상	전 세계 20만개 도시

자료: Policies for the Tourism Sharing Economy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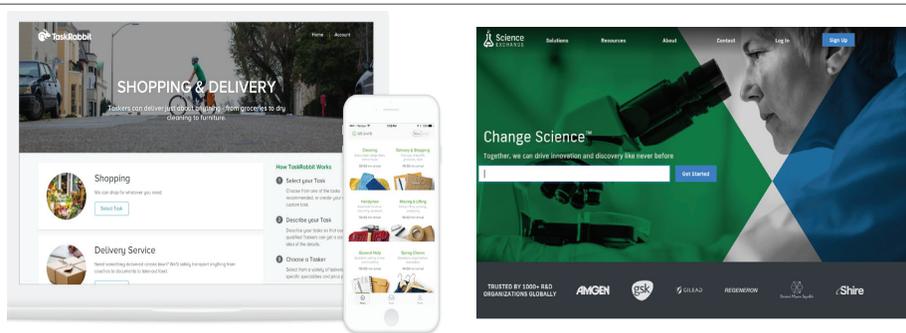
(6) 유희인력 공유 통한 일자리창출

미국의 민간영역에서는 사람 간의 유희 인력을 공유하는 테스크레빗(Taskrabbit)¹⁵ 서비스가 인력공유의 측면에서 진행 중이다. 테스크레빗(Taskrabbit)은 일손이 필요한 사람(도움을 원하는 사람)과 시간이 남는 사람(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으로서, 급한 일 처리를 원하는 인력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부터 최근에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 급성장 중이다. 또한 미국의 사이언스익스체인

¹⁵ <https://www.taskrabbit.com/r/5corf/try> (검색일: 2019. 06. 05)

지(Science Exchange)¹⁶는 화학, 식품, 약물 등의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연구개발 가능 전문 인력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사이언스익스체인지(Science Exchange)를 통해 프로젝트를 외뢰한 기관은 여러 과학자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후 원하는 인력을 의뢰기관에 연결시켜 주는 중간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 자산의 유희능력을 활용할 수 공유 플랫폼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고용관계에 대한 법 제도적 정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그림 4-4] 테스크레빗 사이언스익스체인지 공유플랫폼



자료: <https://www.taskrabbit.com/r/5corf/try>, <https://www.scienceexchange.com/>

2) 사회적 가치(사회적관계 구축형) 공유사례

(1) 정부주도의 합동주택(Co-Housing)을 통한 공간 공유 시도

미국콜로라도의 볼더(Boulder)시에서는 「Silver Sage and Wild Sage」라는 시니어 합동주택(Co-Housing)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반아파트와는 달리 공동거실, 부엌, 식당 등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공유공간(시설)이 있고 동시에 개인 공간이 존재하는 구조로 노인 개개인 공간을 확보하고 동시에 공동 공간도 이용한다는 점에서 셰어하우스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유공간의 개념을 노인복지의 해결책으로 사용한 사례로서 현재 우리나라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어르신 전용 두레주택’ 사업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¹⁶ <https://www.scienceexchange.com/> (검색일: 2019. 06. 05)

(2) 주민주도의 합동주택(Co-Housing)을 통한 공간 공유

미국의 포틀랜드 시에서 운영되어지는 「Daybreak Co-Housing」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공동으로 사용·관리하는 하나의 공유주택(common house)의 개념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여가시간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여 활용된다. 지역에 방문하는 손님들을 위한 게스트 룸 공간을 제공하며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세탁실, 자전보관소 등)을 공유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커뮤니티 내 사용자 간의 협력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Co-Housing을 운영한다.

(3) 민간주도의 유희공간의 활용을 통한 공간공유 확산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Cubes and Crayons Providing Daycare」 정책사례는 기존의 비즈니스 센터(회사)의 유희공간을 탁아시설로 탈바꿈하여 5세 이하 어린이를 돌봐주는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대표적인 공유경제 업체인 Roost는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물품의 저장 창고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표 4-4] 사회적관계추구형의 공간공유사례

지역	정책사례	정책사례내용	구분
캘리포니아 (CA) 전지역	Cubes and Crayons Providing Daycare	기존의 비즈니스 센터(회사건물)의 빈 공간을 탁아시설 공간으로 활용하여 5세 이하 어린이 돌봐주는 탁아 시설 운영. 매달 회비와 시간당 저렴한 이용료를 내면 자유롭게 사무실과 탁아시설 이용가능	민간주도 유희공간 활용 공간공유
볼더 (Boulder) 콜로라도(CO)	Silver Sage and Wild Sage: Density bonuses to create below-market housing ¹⁷	시니어 합동주택 설립하여 노인들이 함께 공간 공유, 1층엔 공동 거실, 식당 부엌 등 공유 공간이 있고 다른 층엔 개인공간이 동시에 있어 개인과 공동체 공간이 공존 ¹⁸	Co- Housing (합동주택)
메디슨 (Madison), 위스콘신(WI)	Troy Gardens: Density bonuses to create below-market housing	공동체토지신택제도를 통해 메디슨 지역의 Troy Garden 이라는 커뮤니티 개발 운영	
포틀랜드 (Portland), 오레곤(OR)	Daybreak Co-Housing	지역 커뮤니티에서 공동으로 사용·관리하는 하나의 공유주택(common house)의 개념 도입	

(4) 지역사회 내에서의 공유 활성화를 위한 「Fix-It Clinics」 운영

미네소타주는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 간의 공유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웹 플랫폼¹⁹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공유 플랫폼을 통해 지역주민들은 실생활에 유용한 개인의 재능이나 기술을 공유하고 지방정부는 개인과 개인을 플랫폼을 통해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 미네소타주의 램지 카운티(Ramsey County, MN), 다코타 카운티(Dakota County, MN), 아노카 카운티(Anoka County, MN)에서는 「Fix-It Clinics」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고장난 물품을 수리하는 기술을 지역주민들 간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업을 통해 수리된 제품의 수가 전체의 73%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그림 4-5] 미네소타주의 「Fix_it Clinics」 프로그램



자료: <https://sites.google.com/site/scr625/Home/fixit-clinics> (검색일: 2019.06.09.)

포틀랜드 주정부 역시 「Fix-It Fairs」²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 개인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재능을 공유하고 있다. 그 밖의 샌디에이고(CA), 볼더(CO), 샌프란시스코(CA) 도체스터(MA), 클리블랜드(OH) 등 각 지역에서도 「Fix-It Fairs」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²¹

¹⁷ <http://silversagevillage.com/> (검색일: 2019. 06. 05)

¹⁸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어르신 전용 두레주택’과 비슷한 사례

¹⁹ <https://www.hennepin.us/fixitclinic> (검색일: 2019. 06. 09.)

²⁰ <https://www.portlandoregon.gov/bps/41892> (검색일: 2019. 06. 09.)

(5) 개인 간의 지식·경험 공유를 통한 사회적관계 구축

미국의 대표적인 지식공유 회사로 위즈덤 인트라넷(Wizdom Intranet)²²을 예로 들 수 있다. 지식, 경험 분야의 지혜를 개인 간의 서로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개인의 지식나눔 서비스 공간이다. 공유하고 싶은 지식이나 정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 공간을 개설하고 관심 있는 개개인이 참가비를 내고 신청해 소규모의 전문적인 모임을 만들고 참여할 수 있다. 창업, 취직, 여행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공유를 통해서 개인 간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구축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6) 식당을 공유해 음식을 조리하는 공유플랫폼 등장

우버 공동창업자인 트래비스 캘러닉은 미국에서 「클라우드 키친(Cloud Kitchens)²³」이라는 이름의 공유주방 서비스를 시작했고, 미국 그린서밋그룹(Green Summit Group)은 2015년 시카고에 185㎡ 규모의 주방 하나를 함께 사용하는 레스토랑 9개를 동시에 오픈하여 운영 중이다. 이러한 주방공유의 개념은 90%가 테이크아웃(포장주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레스토랑 사업자의 니즈를 반영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상대적으로 상가 임대료가 비싼 뉴욕시의 맨해튼과 브루클린 등과 같은 지역에서 활성화 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키친 타운(Kitchen Town)은 기존의 주방공간과 요리도구, 식자재를 공유한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운영 중이며 장소를 사용하고 요리도구를 공유해서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분담하는 임대요금에 따라지는 개념으로 운영된다. 뉴욕, 펜실베이니아 등지에서는 키친인큐베이터(kitchen incubators)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으며 시간당 약 35달러를 지불하면 설비가 갖춰진 주방을 원하는 시간만큼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식품, 조리도구에서부터 주방공간에 이르기까지의 키친공유는 협력적이며 책임 있는 운영방식을 바탕으로 유지되며, 잉여자원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운영비 절감 효과가 있고 협력적·경제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현행법상 하나의 장소에서 한명의 사업자만이 등록할 수 있는 영업규정 때

²¹ <http://fixitclinic.blogspot.com/> (검색일: 2019.06.09.)

²² <https://www.wizdom-intranet.com/> (검색일: 2019.06.05)

²³ <https://www.cloudkitchens.com/> (검색일: 2019.06.05)

문에 주방을 공유하는 여러 명의 창업자들이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한 계점으로 지적된다.²⁴ 몇몇 주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사업자 등록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에 있으며, 최근 뉴욕시 정부에서는 공유키친을 운영하기 위해서 「Food Protection Certificate」과 「Food Service Establishment Permit」을 반드시 수령해야 하는 절차를 신설해 도심지역에서 공유키친이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표 4-5] 미국에서 키친인큐베이터가 활성화 된 상위 10개 지역

지역 (Metro Area)	인구	면적당 키친인큐베이터 수 (Kitchen Incubators per Metro Area)
New York, Newark Jersey City	20,320,876	16
Chicago, Naperville Elgin	9,533,040	13
Los Angeles, Long Beach-Anaheim	13,353,907	8
Denver, Aurora Lakewood	2,888,227	8
Austin, Round Rock	2,115,827	8
Washington, Arlington Alexandria	6,216,589	7
Boston, Cambridge Newton	4,836,531	7
San Francisco, Oakland Hayward	4,727,357	6
Dallas, Fort Worth Arlington	7,399,662	5
Cincinnati	2,179,082	5

자료: U. S. Census Bureau (2017). Top10 Metro Areas with the Greatest Number of Kitchen Incubators

3) 사회적 가치(지역사회 문제해결형) 공유사례

(1) 사회문제 해결 위한 빅데이터 정보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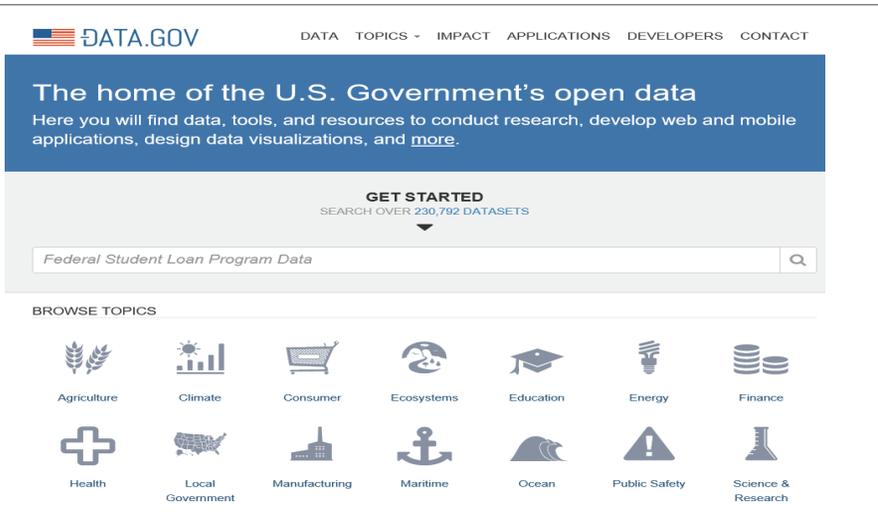
미국의 연방정부는 「DATA.GOV²⁵」 웹페이지를 통해 미국 정부의 정보 공유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게 개방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이 활성화 되는 것이 DATA.GOV 홈페이지 운영의 주요 운영 목적이다. DATA.GOV는

²⁴ NYC Business 참조(<https://www1.nyc.gov/nycbusiness/description/shared-kitchens>) (검색일: 2019. 06. 05)

²⁵ <https://www.data.gov/> (검색일: 2019. 06. 05)

정부기관의 데이터를 시민들이 손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개의 연방정부 기관에서 제공된 정보가 접근가능하다. 월평균 방문자수는 14만 8,821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와 시민간의 정보 및 데이터 공유는 국민들의 공공 데이터 활용을 유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혁신적인 기술개발, 빅데이터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정부 효율성을 향상 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4-6] DATA.GOV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



자료: <https://www.data.gov/>

최근에는 주정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오픈 데이터 공유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예로, 샌프란시스코는 별도의 관련 법률 「Government Code Section 6250.10」²⁶을 제정하여 오픈 데이터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데이터 공개를 위해 민간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유된 데이터의 활용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공유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²⁶ <https://sfethics.org/laws/open-government> (검색일: 2019.06.05)

[표 4-6] 데이터 공유 웹사이트 운영 중인 미국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

데이터 공유 웹사이트 운영 중인 주정부		
Alabama	Arizona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Delaware
District of Columbia	Florida	Georgia
Hawaii	Illinois	Indiana
Iowa	Kansas	Kentucky
Louisiana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Minnesota
Missouri	Nebraska	New Hampshire
New Mexico	New York	North Carolina
Ohio	Oklahoma	Oregon
Philadelphia	Rhode Island	South Dakota
Tennessee	Texas	Utah
Virginia		

데이터 공유 웹사이트 운영 중인 지방정부		
Ann Arbor	Arvada	Asheville
Atlanta	Austin	Baltimore
Boston	Chicago	City of Boston
Cook County	Denver	Honolulu
Kansas City	King County	Louisville
New Orleans	New York City	Palo Alto
Portland	San Francisco	Seattle

자료: <https://www.data.gov/>

4) 환경적 가치(자원활용형) 공유사례

(1) 필요하지 않은 유희제품을 재분배 하는 방식의 공유

미국의 물품공유는 온라인의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직접거래(peer to peer)가 이뤄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으로는 미국의 크레이그리스트(Craigslist)가 있으며 소비자 간 판매, 대여, 교환, 기부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갖는다. 크레이그리스트를 통해 공유되는 물품의 종류는 생활용품, 자동차, 의류, 공구 등 다양한 품목이 유·무료로 거래되고 있으며, 개인의 유희물품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타인에게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개념이다. 물품의 거래는 개인 대 개인 거래, 쌍방 간 교환,

사용권 제공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크레이그리스트(Craigslist)는 플랫폼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의 일부를 지역 시민기자를 양성하는데 쓰고 있으며 'daylife.com' 과 'congresspidia'에 참여하여 시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오프라인 물품공유 플랫폼으로 플라토 클로젯(Plato Closet)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용자는 각 지역에 위치한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중고 옷들을 구매할 수 있고, 유휴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미국 전역에 약 180개의 플라토 클로젯(Plato Closet) 오프라인 매장이 운영 중이다.

(2) 정부주도의 첨단장비시설 공유

미국의 클리블랜드 공공도서관(Cleveland Public Library)와 시카고의 해럴드 워싱턴 도서관(Harold Washington Library)에서는 3D 프린터(3D printers), 레이저 커터(laser cutter), 라스베리 파이 컴퓨터(Raspberry Pi computer)와 같은 최첨단 테크놀로지 물품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국립도서관들은 값비싼 첨단장비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첨단 기술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통하여 시민들이 유익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4-7] 시카고 해럴드 워싱턴 공공도서관의 3D프린터기 공유서비스현장



자료: <https://www.chipublib.org/locations/34/>

[표 4-7] 자원활용 측면에서의 물품공유(Sharing Goods)에 대한 미국의 정책사례

지역	정책사례	정책사례내용	공유자원
온라인 플랫폼	미국의 크레이그리스트 Craigslist	개인의 유휴물품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타인에게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개인 간 직접거래(peer to peer)가 이뤄진다는 점이 특징. 민간은 공유 플랫폼을 제공하고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 교육 사업을 위해 지원	생활용품 등 다양한 품목
오프라인 플랫폼 (미국전지역)	플라토 클로젯 (Plato Closet)	미국의 오프라인 물품공유 플랫폼으로 유휴의류 중심으로 개인간 거래 발생	의류
클리블랜드 (Cleveland), 오하이오(OH)	3D 프린터기 공유	최첨단 테크놀로지 물품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공유하여 새로운 첨단 기술 체험 학습의 기회 제공	첨단기기
시카고 (Chicago)	3D 프린터기 공유	최첨단 테크놀로지 물품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공유하여 새로운 첨단 기술 체험 학습의 기회 제공	첨단기기

자료: Local Governments and the Sharing Economy (2015)

(3) 에너지공유에 대한 정책사례: 저소득층과의 에너지 공유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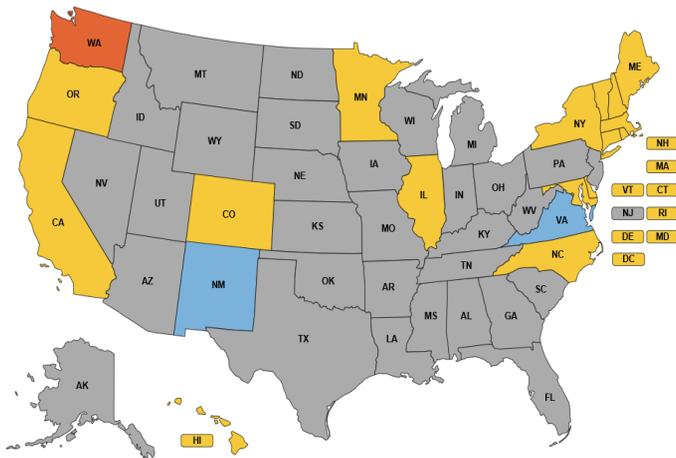
미국에서는 에너지 분야가 공유경제의 주축으로 떠오르면서 유휴 에너지 공유와 비용 절감이라는 새로운 트렌드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도시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에너지 공유 플랫폼이 더욱 활성화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DOE, 2018).

2015년 미국 보스톤에 설립된 스타트업 기업 옐로하(Yeloha)는 개인과 개인간(peer to peer)의 태양에너지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시험사업화 하고 있다. 이 사업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과 태양광 패널 설치주를 플랫폼을 통해 매칭해주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주는 역할을 한다. 저소득층 가정(참여자)에 패널을 설치하게 해준 주인(설치주)이 생산된 전력의 약 1/3을 갖고, 나머지 2/3의 전력은 태양광 패널이 직접 설치된 저소득층 가정에서 소액의 수수료를 옐로하(Yeloha)에게 지급한 뒤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은 설치주와 저소득층(참여자) 모두에게 에너지 요금의 절감효과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환경개선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패널에서 생산된 전기의 일부분을 이용하면 1년에 약 500달러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된다(Giotitsas, 2015²⁷).

하지만 태양광 설치가 지역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곳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는다. 최근 미국의 보스톤, 덴버, 애틀란타 정부는 「Community Solar Projects」 사업을 신설하여 신재생에너지 전력회사와 협업하여 에너지공유 사업을 시범사업 중에 있으며, 이러한 시범 사업을 토대로 최근 미국의 주정부(State Government) 차원에서는 커뮤니티 공유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을 의무화 하고 있는 추세다. 57개 전력회사 주도의 커뮤니티 공유 태양광 프로젝트를 16개 주²⁸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전력회사로는 선에디슨(SunEdison) 및 솔라시티(SolarCity)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림 4-8] Community Shared Solar Energy Program에 참여중인 주(States)



자료: <http://www.sharedrenewables.org/community-energy-projects>

²⁷ Giotitsas, C., Pazzaitis, A., Kostakis, V. (2015) "A peer-to-peer approach to energy production" *Technology in Society*, 42:28-38"

²⁸ 워싱턴주, 오리건주,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미네소타주, 일리노이주, 노스캐롤라이나주, 뉴욕주, 코네티컷주, 매사추세츠주, 뉴햄프셔주, 노스다코타주, 로드아일랜드주, 버몬트주, 뉴저지주, 델라웨어주

(4) 정부주도의 유휴공간의 활용을 통한 도심 내 농업활동 확산

미국에서는 최근 도심내 유휴토지를 활용한 농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도심내 농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세제감면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농업 용지에 부과되는 지방세 공제(메릴랜드), 도심내 버려진 토지나 미활용 토지를 활용해 농산물을 경작하는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도심내 농지로 활용될 수 있는 유휴토지를 조사하는 단계에 있으며, 도심내 「커뮤니티농업 지역」을 새롭게 신설하여 도심내의 주거·상업·공업용지에서 농업활동을 허용하도록 하고, 커뮤니티가든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 및 기부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²⁹. 필라델피아에서도 도심내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이라는 새로운 토지이용의 용도지역을 신설하였으며, 도심내 미활용 토지를 활용하여 농산물을 경작하기 위해 농업용 용도지역으로 등록할 경우 등록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³⁰. 포틀랜드 시의회에서도 농업용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인벤토리(land inventory)를 작성하는 법안 「Resolution 36272³¹」을 통과시켰다. 오클랜드³²와 시애틀³³에서도 주거지역에서 재배된 농작물을 판매허용 규정을 신설하였다.

²⁹ A Department of the 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 홈페이지 참조(<https://sfenvironment.org/buildings-environments/urban-agriculture/urban-agriculture-permits> 검색일:2019. 06. 05.)

³⁰ Grounded in Philly 홈페이지 참조(<https://groundedinphilly.org/growing-food/> 검색일: 2019. 06. 05.)

³¹ Direct applicable City Bureaus to conduct an urban agricultural inventory of city owned land that may be suitable for community gardens and other agricultural uses.

³² City of Oakland 홈페이지 참조(<http://www2.oaklandnet.com/government/o/PBN/OurOrganization/PlanningZoning/OAK029859> 검색일:2019. 06. 05.)

³³ Seattle Permits Tip 244 참조(<https://www.seattle.gov/DPD/Publications/CAM/cam244.pdf> 검색일: 2019. 06. 05.)

【표 4-8】 자원활용 측면에서의 공간공유(Shared Space)에 대한 미국의 정책사례

지역	정책사례	정책사례내용	구분
샌프란시스코 (San Francisco), 캘리포니아(CA)	Urban Agriculture Permits	도심내 농지로 활용될 수 있는 유휴공간 조사하고 도심내 주거 상업 공업용지에서 농업활동 허용하고 판매 및 기부하는 행위 또한 허용	정부주도 유휴공간 활용 공간공유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펜실베이니아(PA)	Growing Food in Philadelphia	도심내 미활용 토지 활용하여 농업용 용도지역으로 등록할 경우 등록세 감면	
포틀랜드 (Portland), 오레곤(OR)	Resolution 36272	농업용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인벤토리 작성 시작	
오클랜드(Oakland), 캘리포니아(CA)	Urban Agriculture Citywide	주거지역에서 재배된 농작물 판매허용	
시애틀(Seattle), 워싱턴주(Washingt on D.C)	Residential Zones in Local Law 「SMC 23.42.051」	주거지역에서 재배된 농작물 판매허용	

자료: Local Governments and the Sharing Economy (2015)

[표 4-9] 미국의 공유경제 정책사례 종합

유형		사업명		특성
경제적	비즈니스형	모빌리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카(ZIPCAR) • 우버(UBER) • 버즈카(Buzzcar) • 씨티카셰어(Citycar Share) • 공유차량공영주차장사용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자원을 민간영역에서 활용하는 형태로 운영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rbnb(단기숙박임대) • HomeAway(단기숙박임대) • Couchsurfing(휴가용숙소단기임대) 	
		재능(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스크레빗(Taskrabbit 유휴인력일자리창출) • 사이언스익스체인지(Science Exchange 유휴인력일자리창출) 	
사회적	사회적 관계추구형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lver Sage and Wild Sage(시니어합동주택) • Daybreak Co-Housing(지역주민공유공간) • Cubes and Crayons Providings Daycare(유휴공간활용육아돌봄) • Cloud Kitchen(주방공유) • Kitchen Town(주방공유) • Kitchen Incubators(주방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자원을 민간영역에서 활용하는 형태로 운영
		재능·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x-It-Clinics(재능기술공유) • Wizdom-Intranet(재능경험공유)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재능·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ta.Gov(데이터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자원을 민간영역에서 활용
환경적	자원활용형	물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aigslist(유휴물품공유) • Plato Closet(유휴물품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과 공공의 영역에서 제공되는 공유자원이 민간분야에서 활용
		재능·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D프린터공유(첨단기술공유) • Yeloha(신재생에너지공유) • Community Solar Project(태양에너지공유)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rban Agriculture Permits(도심내 유휴공간 농지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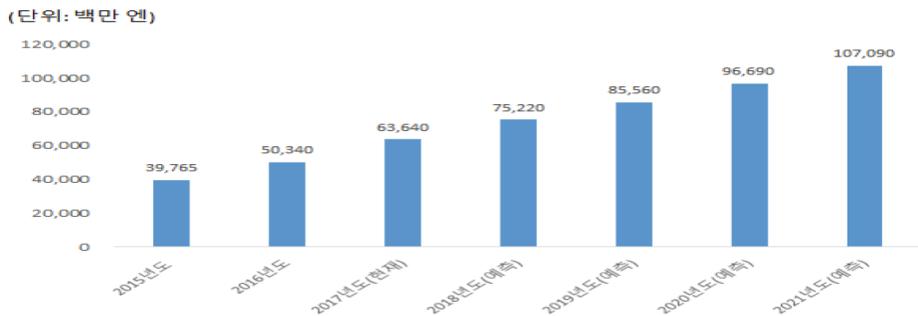
제2절 일본의 공유경제 정책 동향 및 사례

1. 일본의 공유경제 추진배경 및 분야³⁴

1) 공유경제 추진배경 및 현황

일본은 2000년대 이후 유희공간, 환경문제 등 다양한 도시의 문제들을 ‘공유’라는 개념을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김은란, 2015). 또한 일본 내의 소비인식의 변화는 공유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켰고, 이에 따라 일본의 차량·숙박 등의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2015년도 397억원에서 2017년 636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시장규모가 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설홍수, 2017). 일본의 공유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게 된 배경은 ICT 기술 혁신과 소비자 가치관의 변화 때문이다. 제품의 소유보다는 이용가치를 중시함에 따라 공유경제가 새로운 사회시스템으로 주목 받았다. 공유경제는 물건(제품), 차량, 주거 등의 분야가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세분화되어 교육, 의료, 도시행정 등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림 4-9] 일본의 공유경제 시장 규모 추이



주: 서비스제공사업자의 매출액 기준(서비스제공 사업자의 매칭 수수료, 판매수수료, 월 회비, 기타 서비스 수입 등)으로 작성

자료: 矢野經濟研究所(2017), 「プレスリリース, シェアリング・エコノミー共有經濟)市場に関する調査を実施」; kotra(2018), Global market report 18-019, p.5.

³⁴ 일본의 공유경제 관련 내용은 Kotra, 2018, 「일본 소비자의 변화와 새로운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함

즉 일본은 공유경제를 통해 창업촉진, 고용창출, 사회복지 등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인구 밀집도가 높은 일본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숙박이나 차량, 주차장과 같은 자원이 제한적이며 대중교통비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공간, 차량, 주차 공유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매우 높다. 2020년 도쿄 올림픽 개최에 따른 관광객의 증가는 민박, 차량 서비스 등의 수요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설홍수, 2017).

더불어 일본은 대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제품, 공간, 재능 등 공유경제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이 등장하였으나 최근에는 대기업-중견기업의 업무제휴 및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림 4-10] 공유경제의 일본기업 사례



자료:シェアリング·エコノミー協會(2017), 「シェアリング·エコノミービジネスについて: 資料4」; kotra(2018), Global market report 18-019, p.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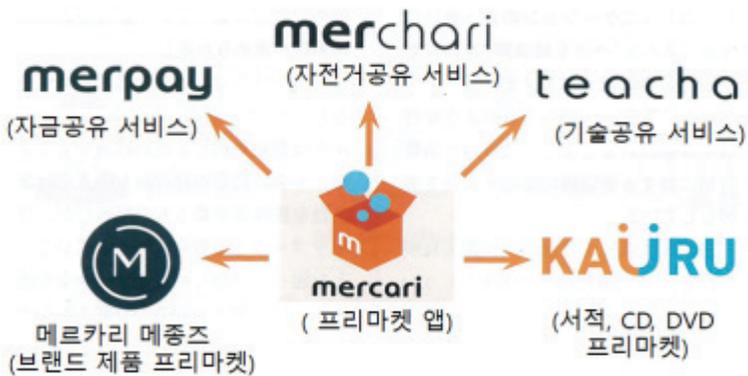
한편 일본정부는 최근 공유경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발전 방향으로 ‘공유도시’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이후부터 저성장,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가 대두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공유경제 도입을 적극 추진했다. 공유도시는 공유경제 개념을 도시 인프라에 적용시켜 각종 문제점들을 공공서비스에만 의존하지 않고 개인들이 자신의 유희화된 자산 등을 공유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특히 청년들과 연계한 지역활성화프로그램과 지역커뮤니티를 거점으로 한 마을활성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2) 일본의 분야별 공유경제

일본의 공유경제는 크게 제품공유, 이동공유, 공간공유, 지식·재능공유로 나뉘볼 수 있다. 일본의 각 분야별 공유경제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제품공유의 대표적 사례로는 ‘메르카리’가 있다. 메르카리는 ‘간편하고 단순함’을 강조한 일본 최초의 유니콘 상장기업으로 P2P 방식의 프리마켓 앱 기업이다. 2013년에 출시된 프리마켓 앱은 스마트폰을 통해 배송과 결제 서비스를 대기업과 연계하여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메르카리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스스로가 앱을 통해 자신의 제품의 가격을 스스로 정하고 판매할 수 있다. 현재 메르카리는 미국과 영국에서도 공유경제권을 확대하고 있다.

[그림 4-11] 메르카리의 공유경제 비즈니스



자료: NIKKEI BUSINESS(2018.5.7.) 「'貧テック'って何だ?」; Kotra, 2018.

두 번째, 일본의 이동 공유사례에는 자전거 공유와 화물운송 공유가 있다. 일본의 자전거 공유서비스는 차량공유나 민박 공유에 비하면 규제나 초기 투자비용이 적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자들이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서비스 사용자도 급증하였다. 2020년 도쿄올림픽과 교통지체 완화, CO2 배출량 감축, 건강증진 등을 위해 ‘자전거 활용추진법(2017년 5월)’을 시행하였다. 자전거 공유서비스는 버스, 전철 다음으로 일본의 제3의 교통 인프라가 되었다.

[표 4-10] 자전거 공유서비스

기업명	지역	요금	특징
NTT 도코모	도쿄 도내 9개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30분 150엔, 30분마다 100엔 추가) • 월정액(2,000엔) • 1일 패스(1,500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동 자전거(5,090대) 이용, 자전거 주차장 447개 • 앱을 통해 자전거 주차장 검색 및 예약 • 어느 주차장에서든지 자전거 임대 및 반납 가능 • 지자체의 연계를 통한 주차장 확보 • 전동 자전거 투입
소프트뱅크	수도권 포함 40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분 60엔 • 일 최대(1,000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나 기업을 대상으로 시스템 제공 • 자전거에 부착하는 기기나 시스템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이용 수수료 취득 • GPS와 통신기능을 탑재한 전용열쇠 ‘스마트락’과 액정 패널을 자전거에 부착하여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새로 구입하지 않아도 됨 • 세븐일레븐 그룹과 사업제휴를 통해 자전거 주차공간(5,000대)을 세븐일레븐 편의점 주차장에 설치 • 이용자의 편리한 주차는 물론 편의점 매출의 상승이라는 win-win 효과를 창출
라인	삿포로시, 후쿠오카시, 나라카와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최대 자전거 공유 서비스회사 (Mobike)와 제휴, 18년 전반에 서비스 개시
메르카리	후쿠오카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분 4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너 기업과 회원이 연계하여 주차장 제공

자료: Kotra, 2018, p.29

또한 화물운송 분야에서도 우버 물류판매업체가 등장하였는데 대표적인 공유사업으로는 사루트(SAROUTE)와 (주)라쿠스루가 있다. 사루트는 일본의 화물자동차 운전수의 구인난의 심각성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인도 배송서비스를 할 수 있는 다이아쿠(DIAQ) 스마트 앱을 개발하였다. 화물주는 앱을 통해 배달원을 선택할 수 있고 배달원은 요금을 결정하는 구조이다. 배송 공급자와 수요자를 직접 연계하기 때문에 별도로 배달원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 때문에 배송 수수료가 매우 낮다는 장점이 있다. 앱을 통한 실시간 매칭은 중개 수수료 인하 및 인력난(배달원) 문제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다.

(주)라쿠스루는 2015년부터 물류배송 공유서비스인 ‘하코벨’을 실시하였다. 하코벨은 대기업 하청 업무를 수행하는 중소형 운송업체들을 대상으로 여가 시간에 추가 배송업무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트럭 운전사들이 대부분 중년 남성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간단한 앱을 개발하였다. 하코벨 서비스는 화물주와 실제 운송업체를 직접 연계하기 때문에 물류 배송 운임이 저렴하다. 또한 결제가 완료되면 화물주가 이용 운송업체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기 때문에 배송의 품질이 높다.

[표 4-11] 화물 공유서비스

기업명	공유서비스	특징
사루트 (SAROUTE)	다이아쿠 (DIAQ)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류업계의 인원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인도 배송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 화물배송 스마트 앱 개발 우버와 같은 물류버전의 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도쿄 지역에서 개시 다이아쿠(DIAQ)는 Diagram과 Quality를 결합한 단어로, 배달원의 대역(代役의 일본어인 다이야크)이라는 의미도 포함 화물주가 화물정보를 앱에 등록하면 근처에 있는 복수의 배달원 정보가 표시됨 화물주는 배달원의 정보 평가를 토대로 위탁업자를 결정 직접 연계를 통해 별도로 배달원을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가 매우 낮은 장점이 있음
(주) 라쿠스루	하코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기업 하청 중소형 운송업체들이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배송 업무 화물주와 실제 운송업체를 직접 연계하여 가격 파괴 달성 화물주에 의한 운전자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배송의 품질을 담보하는 기능 구축

자료: Kotra, 2018, p.32 내용 정리

세 번째, 일본에서는 숙박, 주차장, 점포, 회의실 등 공간 중심의 공유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다. 2014년에 에어비앤비가 숙박공유로 일본에 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이후로 스페이스 마켓과 아키퍼 등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였다. 2014년 설립된 스페이스 마켓은 공간 공유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재창출할 수 있는 부동산 공유경제 기업이다. 다양한 유희공간을 통해 영화관, 결혼식장, 미술관 등과 같은 다양한 이벤트 공간을 제공한다. 공간 확보를 위해 소유주를 대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제안하여 수익을 증대시켰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 마켓은 2014년 설립당시에는 100여개에 불과하였지만 2018년에는 8,696개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공급자의 후생 증대와 함께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림 4-12] 스페이스 마켓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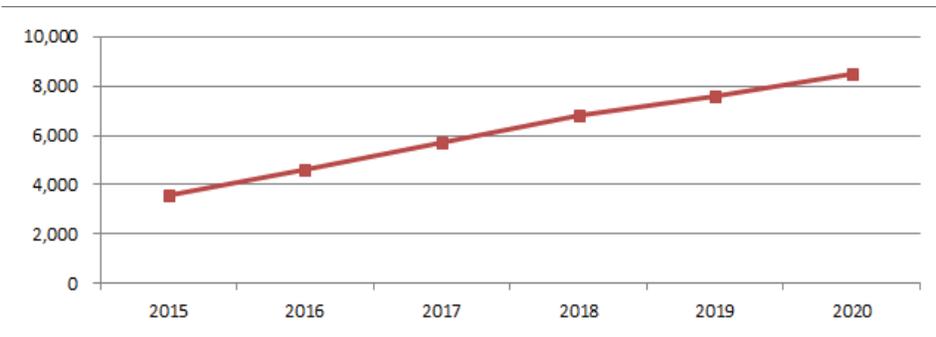


자료: 스페이스마켓 「스페이스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다」; Kotra, 2018

공유경제에서 주차장 같은 작은 규모의 유희자산을 파악하고 매칭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아키퍼는 2014년 주차장 매칭 서비스를 통해 주차장 공유서비스를 시작하여 창업 3년만에 약 12,000개 이상의 거점 주차장을 확보하여 심각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였다. 주차장 공유서비스는 기업 또는 개인이 보유한 빈 주차장을 앱에 입력하면 이용자가 이를 검색하여 사용하는 서비스이다. 스마트폰을 통한 사전예약 및 신용카드 결제로 주차장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리성을 제고했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아키퍼기업은 도요타자동차와 제휴를 통해 내비게이션 기능 중에 아키퍼 주차장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다양한 기업들과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

네 번째, 일본의 지식·재능 공유시장은 2014~2020년 동안 연평균 21.2%의 증가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2015년도에는 온라인을 통해 레슨, 가이드, 가사도우미 등의 매칭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관련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인다.

[그림 4-13] 일본의 지식·재능 공유시장 전망



자료: 矢野經濟研究所(2016); Kotra, 2018

지식·재능 공유에는 애니타임즈와 타임티켓이 있다. 애니타임즈는 2016년부터 앱을 통한 서비스제공 플랫폼으로써 가사도우미, 생활서비스 등의 매칭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일상 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이웃과 함께 공유하여 해결하는 상부상조를 바탕으로 협동적 경제사회 시스템을 구축한다. 주로 요리, 가사, 육아 등 1회로 가능한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며 동시에 공급자들은 자신의 여가 시간에 지식·재능을 활용하여 고용의 기회를 얻는다. 애니타임즈는 의뢰자가 서비스내용이나 금액을 제시하면 다수의 공급자가 이를 응모하고, 다시 의뢰자가 적합한 공급자를 지명하는 구조이다. 애니타임즈는 주로 여성의 사회진출과 고령자 간병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목표로 지자체와 연계한 공동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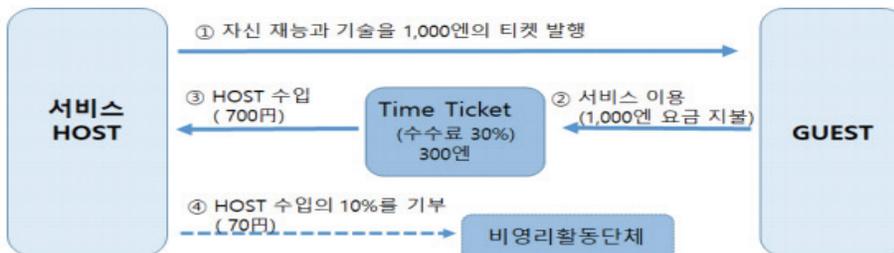
[그림 4-14] 애니타임즈 모델의 특징



자료: 矢野經濟研究所(2016); Kotra, 2018

또 다른 지식·재능 공유사업인 타임티켓은 ‘나의 30분, 팔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30분, 사보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갖는 공유플랫폼으로 2012년 설립되었다. 연애 상담, 사진기술, 창업, 비즈니스 상담, 취미생활 활동 등 다양한 종류의 지식·재능을 공유하는 시장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재능을 공유하면서도 동시에 기부도 할 수 있다. 타임티켓 서비스는 지식·재능공급자가 호스트로서 자신을 티켓으로 등록(최소 30분에서 최대 5시간 이내)하고 이를 원하는 이용자가 게스트로서 예약일시를 설정하여 구매를 신청한다. 호스트가 판매한 티켓 요금의 30%는 수수료로 플랫폼에 지급하고, 티켓 수익의 일부(최소 10~100%)는 원하는 만큼 비영리법인단체에 기부한다.

[그림 4-15] 타임티켓 모델의 특징



자료: 矢野經濟研究所(2016); Kotra, 2018

2. 일본정부의 공유경제 관련 정책 추진 동향

일본정부는 공유경제 기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환경정비, 새로운 (법)규제 도입, 이용자 보호 장치 강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일본정부는 2015년과 2016년 성장 전략에서 공유경제의 발전을 위한 환경정비 수립 및 정비체제를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인 간 거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불안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임으로 보다 안전하게 거래(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해결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2016년 7월 내각관방 IT종합전략실 산하에 ‘공유경제 검토회의’를 설치하고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및 민간단체의 자주적 규제방식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는 거래참여자의 자율적 규제를 통한 안정성·신뢰성 확보와 불명확한 현행 규제의 적용범위 문제를 해소하는 방침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2017년 1월에는 내각관방 IT종합전략실에 마련된 ‘공유경제 촉진실’에서 사업자 대상 관련 규제 법령 상담 및 지자체의 공유경제 서비스 보급을 지원하였다(内閣官房 IT総合戦略室, 2017; Kotra, 2018). 뿐만 아니라 2016년에 설립된 공유경제 협회를 중심으로 업계 공통적인 규제를 만들고 이에 대한 적합성을 심사하는 공유경제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공유활동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협회는 공유경제 활용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KPI 성과지표를 정하고, 지자체가 보유한 유휴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취업기회를 창출하는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 시티로 인정해주고 있다.

두 번째, 일본정부는 ‘20년 도쿄올림픽 기간에 4,0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민박신법(주택숙박사업법, 2017년 법률 65)을 제정하여 201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법에 따라, 기존의 인가가 필요 없었던 민박시설도 주택숙박사업신고를 해야 하며, 주택숙박공유 공급자 등록을 위해서는 숙박일수가 180일이여야하고 화재 안전 설비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 법은 여관업법과는 별개로 숙박공유 사업의 확대를 위한 것으로, 무허가 민박 사업장에 대한 강한 대응 및 건전한 민박 서비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규제의 도입은 에어비앤비에 게재된 숙박시설을 18년 3월 대비 약 80%이상으로 급감시켰다. 민박일수 제한(180일)과 복잡한 신고 절차(20가지 서류), 그리고 안전설비 구축에 따른 비용 증가가 이와 같은 감소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표 4-12] 숙박공유 서비스에 대한 신규 법안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정부는 숙박공유 서비스를 지원하면서도 기존 사업과의 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신규법안인 ‘주택숙박사업법’을 창설, 2018년 6월부터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일 관광객 급증과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로 숙박 시설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숙박 공유 서비스가 빠르게 진전 • 무허가로 운영하는 위법 민박사업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 건전한 민박 서비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제정 • 2015년 10월부터 규제개혁회의를 통해 관련자와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 • 2016년 3월 민박서비스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숙박사업법에서 규정한 주택숙박사업자에 대한 관련 규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숙박사업자는 도도부현 지사에 신고가 필요(年間 영업일수 상한은 180일로 조정, 지역 실정을 반영하는 추가규제 창설 • 주택숙박사업을 적절히 수행하면서 지역주민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위생확보, 소음방지, 숙박자 명부 작성, 고충 대응 등)를 자율적으로 도입 • 주인이 체류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조치를 주택숙박관리업자 위탁을 의무화

자료: 일본 国土交通省 홈페이지(住宅宿泊事業者法); Kotra, 2018

세 번째, 일본정부는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강구하고 있다. 일본의 이용자 보호 정책은 정부가 보완적인 역할을 하되, 공유경제 참여자보다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추진한다(김민정, 2017). 현재 일본정부는 내각관방이 작성한 ‘공유경제 모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서비스체제를 구축한 사업자들에게는 인증마크를 부여(シェアリングエコノミー協会, 2017)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는 사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의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으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플랫폼 및 이용자의 보험가입의무화 제도 강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상호평가시스템이나 SNS를 통한 본인확인 인증을 통해 자체적으로 거래위험을 감소시키고 있다.

[표 4-13] 이용자 보호 사례 및 기대효과

시스템	개요	기대효과
지불대행	• 신용카드 이용 및 요금 지불을 플랫폼 사업자를 매개로 실시	• 부당한 요금청구 및 요금 미납 문제 방지
사전협의	• 숙박 조건, 이용 방법 등은 사전에 상호 협의를 도출	• 사전에 분쟁소지 억제

시스템	개요	기대효과
계제정보의 품질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플랫폼 사업자가 공급자 컨설팅을 시행, 필요한 정보의 지정 및 정보 품질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가 서비스의 비교·검토 용이 문제가 있는 서비스는 등록이 어려움
이용 이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자 이력을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의 사기피해를 효과적으로 대응
공유경제 전용 배상보험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일의 사고에 대한 대응을 위해 보험 회사와 연계하여 공유경제 전용 배상 보험 판매 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 경제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향상 및 서비스 이용 확대 기여

자료: 三菱総合研究所(2015.12.17.), 「シェアリングサービスの動向整理」, Kotra, 2018

3. 공유경제를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례

일본은 현재 지자체 주도로 공간공유 지원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 인프라에 공유경제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다면, 지역네트워크 연계가 활성화되어 지역사회 커뮤니티 형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일본은 이미 2011년부터 지역 주민 중심으로 지역커뮤니티를 형성하여 공유오피스, 코워킹 스페이스 등의 다양한 공유공간을 조성했다. 특히 청년층을 지역 활동에 참여 시킴으로서 협업관계를 통한 지역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김은란 외, 2015).

일본은 2015년 범죄나 붕괴 위험이 있는 빈집을 지자체가 강제 철거하는 ‘아키야 대책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빈집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아키야뱅크(空き家 bank·빈집 은행)’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들은 아키야뱅크 단체와 협력하여 빈집과 폐교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여 지방자치 단체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성영조 외, 2016). 사이트에 등재된 빈집의 가격은 지역이나 크기,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사이트에 등재된 빈집 가격은 지역과 집 크기 및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무료이거나 아주 싼 가격(약 50만엔에서 2,000만엔)에 제공하고 있다. 일본 지자체들도 아키야뱅크 통해 입주한 사람이 18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60세 이상의 고령자일 경우 월세를 최대 4만엔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이용자와 소유자 간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규슈지역의 후쿠오카시는 2015년 일본 최초로 운전공유 서비스인 ‘민나노’ 우버 서

비스를 도입하였다. 민나노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근처에 있는 운전자의 차에 무료로 동승하고 운전자에게 실험 데이터 제공료 명목으로 금전 보상을 하는 구조이다.

후쿠오카시에서 시작된 민나노 택시는 현재 소니의 AI기술을 적용하여 날씨 등 외부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고객에게 차량을 배치하는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다. MOV 역시 DeNA 외에도 가나가와현 택시협회와 다이이치 교통산업, 도토 자동차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목표로 ‘합승택시’를 위한 실증실험도 진행 중이다(이데일리, 2018. 12. 14.).

요코하마 지역에서는 빈집이나 빈 점포 등을 활용한 도시 공간 공유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역주민과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을 펼치고 특히 청년들을 참여시켜 취업난을 해소시켰다(강현숙, 2016). 또한 요코하마시는 2010년부터 오래된 건물 혹은 빈 공간을 리노베이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창작가, 예술가 등 예술창작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예술창작활동 공간의 한 예로, <BankART1929> 프로젝트는 요코하마의 낡은 건물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며, 요코하마의 낡은 건물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활용도를 높인다. 즉, 도시가 지닌 역사성과 도시성을 모두 살리면서 문화예술을 활용해 도시의 정체성을 살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림 4-16] 낡은 은행을 활용한 미술관(BankART1929)



출처: <https://froma.co.kr/493> [fromA 프럼에이]

도쿄도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빈집을 구입 후 리모델링 하여 공공형 시설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주택활용시범사업(빈집 활용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중앙정부와 도쿄도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어린이 보육시설,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였다(김은란, 2015). 더불어 교토도 2020년 도쿄올림픽에 맞춰 빈집을 호텔로 사용하자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세타가야구는 ‘세타가야구 트로스트 마을 만들기’라는 단체와 협업을 통해 2013년부터 ‘세타가야 타운 빈집활용 지역공헌 모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으로 선정된 집은 약 2천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아 지역내 치매고령자나 장애아동 등을 케어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지역내 코워킹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또한 ‘지역 공생의 집’이나 ‘만남의 집’ 등 지역 커뮤니티를 위해 활용되는 소규모 분산형 빈집 활용 사업이 활성화되었다(남지현, 2012). 뿐만 아니라, ‘지역 공생 집 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 주택 소유자가 건물(일부 혹은 전부)을 지역 주민에게 공유하는 지역 활성화 사업을 2008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금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주민 자발적 사업이다(김은란, 2015; 성영조 외, 2016).

또한 지역내의 폐교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례에는 폐교를 활용한 네야가와시의 ‘연목마을 시민교류센터’, 세타가야구의 ‘IID 세타가야 공방학교’ 등이 있다. 연목마을 시민교류센터는 폐교된 초등학교를 커뮤니티의 거점으로 활용하여 체육시설, 자연 자료 시설, 다목적실, 문화재 자료시설 등 지역주민의 문화 및 스포츠 활동의 장을 제공하는 복합시설이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고 있다. IID 세타가야 공방학교는 폐교를 활용한 공유형 오피스 공간으로 창업 및 코워킹 스페이스, 카페, 갤러리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이다(김은란, 2015).

이 밖에도 아키타현 유자시는 지역 주민의 육아 지원 공유 플랫폼 ‘Asmama’와 공동으로 지역 내 육아 분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즈오카현 하마마츠시에서는 ‘TABICA’와 연계해 관광객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역주민과 함께 교류하면서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표 4-14] 일본 공유경제 정책사례 종합

유형		사업명		특성
경제적	비즈니스형	모빌리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공유서비스(NTT 도코모, 소프트뱅크, 라인, 메르카리) • 물류배송 공유 플랫폼(사루트, 라쿠스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자원을 민간 영역에서 활용하는 형태로 운영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오피스 	
		재능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능·경험공유(애니타임즈) • 타임티켓 	
사회적	사회적 관계추구형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창작활동 공간 창출 (Bank ART1929) • 지역 공생 집 만들기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자원을 민간 영역에서 활용하는 형태로 운영
		재능·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타가야구의 IID 세타가야 공방학교 • 지역공생의 집 • 만남의 집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재능·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돌봄 플랫폼(ASMA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자원을 민간 영역에서 활용
환경적	자원활용형	물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키타파 (주차장 공유) • 합승택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과 공공의 영역에서 제공되는 공유자원이 민간 분야에서 활용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이스 마켓(유휴공간 미술관으로 활용) • 2020년 빈집사용 활용사업 (도쿄올림픽에 맞춰 빈집을 공유숙박공간으로 활용예정) 	

제3절 시사점

1. 정책의 효과 및 문제점

1) 경제적 측면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공유경제의 문제점은 일자리 수는 증가되었지만, 대부분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지적이다. 우버(Urber) 및 단기숙박임대업인 에어비앤비(Airbnb), 테스크레빗(Taskrabbit) 사이언스익스체인지(Science Exchange) 등과 같은 유희물품, 유희공간, 유희인력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자원배분의 효율화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의 공유기업업체는 미국 노동시장의 표준화된 복지 혜택인 보험, 산업재해 보상, 실업보험, 건강검진,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고용자들의 건강보험, 퇴직연금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이어가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안정한 성격의 고용만이 창출되었다 지적이다.

또한 기존의 지역중심으로 조성되어 있던 소규모 상권(중소사업자)과 공유기업 간의 갈등이 심해져 대형자본이 영세 자본을 흡수하는 약탈 경제라는 비판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미국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모텔 여관 등 소규모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영세업자들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대규모자본이 지역에 투입됨에 따라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 직업 안정성 저해 등과 같은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사회적가치 측면

미국 또는 일본의 경우 사회적가치 측면에서의 공유경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정부나 도시차원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20년 있을 도쿄올림픽에 맞춰 유희자원이나 유희 인력을 사용하는 방안을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 중이며 미국의 경우는 육아돌봄 이나 시니어합동주택단지 건설은 지역의 사회복지 개선의 측면에서 로컬 또는 커뮤니티단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추세는 이윤의 극대화 보다는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측면과 도시 문제를 해결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용자의 만족도가 충족되지 않거나, 부정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 공유경제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여자의 지속적인 이용을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과 상호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3) 환경적 측면

환경적 측면에서 공유경제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효율적인 소비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특히 미국에서는 3D프린터와 같이 고가의 첨단장비가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어 그 쓰임이 대중화 되었다는 평이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적 소비는 아리송한 지적재산권 침해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강철의자나 포켓몬 캐릭터 상품 등 이미 누군가에게 지적재산권이 있는 제품의 도면을 활용해 물건을 출력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부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에 따른 설계도와 같은 도면의 지적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동시에 수반되어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2. 쟁점 및 과제

1) 지역의 소규모 영세기업과 대규모의 공유기업이 공생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 필요

미국 일본 등지에서 공유경제 관련해서 발생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지역의 소규모 영세기업과 글로벌 대규모 공유기업간의 갈등이다. 물론 글로벌 공유기업들이 기존 산업에서 공급하지 않았던 틈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숙박이나 교통인프라에 해당되는 대규모 공유경제기업의 유입은 지역의 소규모 영세기업자들의 경쟁상대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전체 숙박시장을 독점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존의 지역순환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³⁵. 또한 지역 안에 글로벌

³⁵ 실제로 테네시주 세쉬빌의 정부는 경쟁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공식입장을 보였으며 대응책마련중임

공유경제 기업이 유입된다고 해도 지역 안에서 발생된 수익이 지역에서 순환되는 구조가 아닌 공유기업의 본사로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지역내의 기존의 사업자와 대규모자본이 투입되는 글로벌 공유경제 기업이 지역안에서 서로 공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공유기업의 피해보상능력 제한적

공유거래는 대개의 경우 서로 알지 못하는 사용자들이 공유플랫폼을 통해 중개된 후 거래를 형성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Huurme et al., 2017³⁶). 구체적으로 거래되는 물건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실망스러움과 거래상대방의 행동을 관측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 또한 공급자가 공유 플랫폼을 통해 광고한 내용보다 저품질의 물건 및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거래상의 피해를 입는 문제는 늘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스타트업 형태의 공유경제 기업들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점은 공유경제의 지속가능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다.

3) 수요조사·분석에 따른 효율성 증대방안 마련 필요

각각의 로컬지역은 다양한 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로컬단위에서 공유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동시에 수요와 공급이 균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물품과 서비스 등을 지속적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공유경제 매커니즘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수요그룹에 따른 지역별 이용수요 효과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의 니즈를 반영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³⁶ Ter Huurne, M., Ronteltap, A. Corten, R., & Buskens, V. (2017). Antecedents of Trust in the Sharing Economy: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Consumer Behaviour*, 16(6): 485-498.

[표 4-15] 해외(미국·일본) 공유경제 정책동향 및 사례 종합

유형		미국사례	일본사례	특성 및 쟁점
경제적	비즈니스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카, 우버 버즈카 씨티카셰어 • 공유차량공영주차장사용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공유서비스 (NTT 도쿠모, 소프트뱅크, 라인, 메르카리) • 물류배송 공유 플랫폼 (사루트, 라쿠스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자원을 민간영역에서 활용하는 형태로 운영 • 일자리창출효과 있지만 대부분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 • 영세자본과 대규모자본과의 갈등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rbnb • HomeAway • Couchsurf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오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askrabbit • Science Exchan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재능·경험공유 (애니타임즈) • 타임티켓 	
사회적	사회적 관계추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ilver Sage and Wild Sage • Daybreak Co-Housing • Cubes and Crayons Providing Daycare • Cloud Kitchen • Kitchen Town • Kitchen Incuba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창작활동 공간 창출(Bank ART1929) • 지역 공생 집 만들기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공공자원을 민간·공공영역에서 활용하는 형태로 운영 • 참여자의 이용의도와 상호신뢰성 확보가 활성화를 위한 핵심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ix-it Clinics • Wizdom Intran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타가야구의 IID 세타가야 공방학교 • 지역공생의 집 • 만남의 집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ta.Go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돌봄 플랫폼 (ASMAM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자원을 민간영역에서 활용
환경적	자원활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aigslist • Plato Closet • 3D printer sharing • Yeloha • Community SolarProject • Urban Agriculture Permi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키피 (주차장 공유) • 합승택시 • 스페이스 마켓(유희공간 미술관으로 활용) • 2020년 빈집사용 활용사업 (도쿄올림픽에 맞춰 빈집을 공유숙박 공간으로 활용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과 공공의 영역에서 제공되는 공유 자원이 민간분야에서 활용 • 지적재산권 보호와 같은 제도적 장치보완필요

제5장



공유경제 활용 선도 지자체 사례분석

제1절 서울특별시

제2절 부산광역시

제3절 대전광역시

제4절 전주시

제5절 사례분석 종합 및 시사점

제1절 서울특별시

1. 정책 추진 배경

서울시는 2012년 9월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하면서 공유경제 개념을 도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서울시에서 ‘공유도시’라는 개념을 시정운영의 핵심 요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배경요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 점이 강조된다³⁷. 첫째는 복지, 환경, 일자리 등 사회적 수요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안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데, 서울시는 시민사회, 기업, 공공부문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자원의 활용성을 극대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번째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공동체 의식의 감소와 개인 간 단절 및 소외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의 중요성이다.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도시화의 이면에는 다양한 사회 문제가 있음이 강조되어 왔는데, 특히 소통이 부재된 파편화된 개인 간의 관계와 이로 인한 소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소통을 활성화 시키고, 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도시 내 다양한 자원을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 복원을 추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SNS 등을 활용한 공유경제 모델과 협력적 소비 트렌드의 확산이다. 앞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이론 및 국제적 동향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증가해 왔으며,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성과뿐만 아니라 ‘공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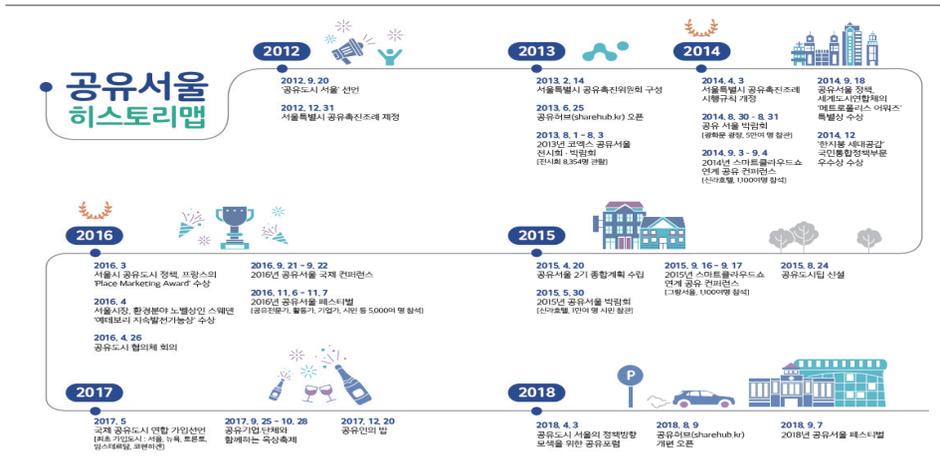
³⁷ 서울시, 2012, 공유도시 서울 추진계획

는 사회적 가치 추구의 측면에서도 그 특성이 강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변화하는 국제적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공유경제 육성과 협력적 소비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도시 경제 활성화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 함께 나누고 도모함으로써 자산과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공유도시 서울(SHARING CITY SEOUL)추진”이라는 정책 추진의 주요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2012년 10월에는 공유도시 서울 추진계획(1기)을 수립하고, 공유경제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서울시의 정책 방향성과 세부 정책 내용을 발표하게 된다. 이어 12월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촉진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도적 측면에서의 기반마련도 함께 모색하게 된다.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공유경제 정책 활용 전략은 2014년 9월 세계도시연합체로부터 ‘메트로폴리스 어워드’ 특별상을 수상함으로써 그 노력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2015년에는 ‘공유서울 2기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유도시 정책의 방향성에도 약간의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는 다음 정책분석 파트에서 세부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림 5-1] ‘공유서울’ 추진 경과



자료: 서울시(2018), 공유서울정책가이드

【표 5-1】 연도별 ‘공유도시 서울’ 정책 주요 내용

연도	주요 내용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9월: ‘공유도시 서울’ 선언 10월: 공유도시 서울 추진계획 수립 (20개 공유도시 프로젝트 선정) 12월: 서울시 공유촉진 조례제정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월: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 구성 4월: 제1차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정 및 사업비 지원(12개소, 2억원 지원) 6월: 공유허브(sharehub.kr)오픈, 제2차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정 및 사업비 지원(5개소, 1억 100만원 지원) 8월: 2013년 코엑스 공유서울 전시회 및 박람회 11월: 제3차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정 및 사업비 지원(3개소, 선정, 각 2천만원 지원)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월: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조례 시행규칙 개정 8월: 공유 서울 박람회 9월: 공유서울 정책, 세계도시연합체의 ‘메트로폴리스 어워즈’ 특별상 수상 12월: ‘한지붕 세대공감’ 정책 국민통합정책부문 우수상 수상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월: 공유서울 2기 종합계획 수립 8월: 서울시 공유도시팀 신설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월: 서울시 공유도시 정책, 프랑스의 ‘Place Marketing Award’ 수상 4월: 공유도시 협의체 회의 11월: 2016년 공유서울 페스티벌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월: 국제 공유도시 연합 가입선언 [최초 가입도시 : 서울, 뉴욕, 토론토, 암스테르담, 코펜하겐]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월: 공유도시 서울의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공유포럼 9월: 2018년 공유서울 페스티벌

자료: 서울시 공유서울정책가이드(2018) 및 경기연구원(2014)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리

2. 정책 분석

1) 정책 주요 목적

서울시가 공유도시를 추진하면서 표방하는 정책의 주요 목적은 공유서울 제1기 추진 방향에서 잘 드러난다. 서울시는 ‘공유(share)’의 개념을 “공유란 물건, 공간, 재능, 시간, 정보 등을 함께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자원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공유도시(sharing city)’를 “공유도시란 시민사회, 기업, 공공부문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공유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도시”로 정의하

고 있다.

공유도시 1기 정책의 주요 방향성을 상징하는 비전은 “함께 나누고 도모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도시(sharing city) 서울”로 설정하고, 2대 추진 방향은 ‘민간영역이 중심이 되어 공유영역을 발굴·실천’과 ‘공공자원 개방·공유 및 민간 공유활동 촉진·지원’으로 정한다. 이후 공유의 대상을 크게 물건, 공간, 인간, 시간, 정보의 5가지 부문으로 설정하고, 각 부문별 공유촉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어 공유도시 2기에는 정책 주요 비전을 ‘공유로 변화된 도시, 시민이 행복한 서울’로 설정하고, 2대 목표로는 행복한 시민의 삶과 도시문제해결을 전면에 내세우게 된다. 즉 도시문제 해결을 통한 행복한 시민의 삶을 실현하는 것이 공유도시 서울의 주요 정책 목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한 3대 추진전략으로는 ① 공유로 도시문제 해법 제시 및 시민 생활문제 해결, ② 공유주체 다각화/공유인프라 및 시민체험·참여 확대, ③ 국내외 소통 및 연대강화/우수정책 브랜드화 및 확산을, 그리고 5대 핵심 과제로는 공유를 활용한 도시문제의 해결, 공유의 일상화로 「천만서울, 천만공유」 실현, 공유 스타트업 육성, 법제도 개선으로 공유활성화 기반 확충, 국내외 공유확산을 위한 네트워킹 강화를 선정하였다.

【표 5-2】 공유서울 1·2기 정책 목표 및 내용의 변화

공유서울 1기 (2012 ~ 2014)	공유서울 2기 (2015 ~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도시 기반 조성 (조례제정, 사업발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문제·생활문제 해결에 주력 (교통, 주거, 환경, 경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자 중심 (전달위주 홍보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자 중심 (시민의 참여와 체험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의 대상 중심 사업추진 (공간, 물건, 재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 주체 다각화 (마을·학교, 주부·청년·직장인·은퇴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경제 생태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 대표기업 중점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자치구 공유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전 세계로 공유 확산 (공유서울 브랜드화)

자료: 서울시(2015), 공유서울 2기 추진계획

[표 5-3] 제1·2기 공유도시 서울 정책 추진 방향 비교

제1기 공유도시 추진방향	제2기 공유도시 추진방향
<p>II 공유도시 추진방향</p> <p><input type="checkbox"/> 공유도시의 개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Sh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란 물건, 공간, 재능, 시간, 정보 등을 함께 나누어 활용함으로써 자원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 ● 공유도시(Sharing C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도시"란 시민사회, 기업, 공공부문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공유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도시 <p><input type="checkbox"/> 공유도시 추진방향</p> <p>비전 함께 나누고 도모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도시(Sharing City) 서울</p> <p>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영역이 중심이 되어 공유영역을 발굴·실현 공공자원 개방·공유 및 민간 공유활동 촉진 지원 </p> <p>공유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物) 간 동일자원으로 더 많은 효용을 창출하는 '물건의 공유' 공(空) 간 유휴공간을 개방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공간의 공유' 인(人) 간 다양한 재능과 경험을 나누는 '사람의 공유' 시(時) 간 함께 참여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꿈의 공유' 정(情) 보 공개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정보의 공유' </p>	<p>비전 공유로 변화된 도시, 시민이 행복한 서울 I</p> <p>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복한 시민의 삶 도시문제 해결 </p> <p>3대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로 도시문제 해법 제시 및 시민 생활문제 해결 공유주체 다각화 / 공유인프라 및 시민참여·참여 확대 국내외 소통 및 연대 강화 / 우수정책 브랜드화 및 확산 </p> <p>5대 핵심 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공유의 일상화로 '천만서울 천만공유'를 이루겠습니다. 공유 스타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법제도 개선으로 공유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내외 공유확산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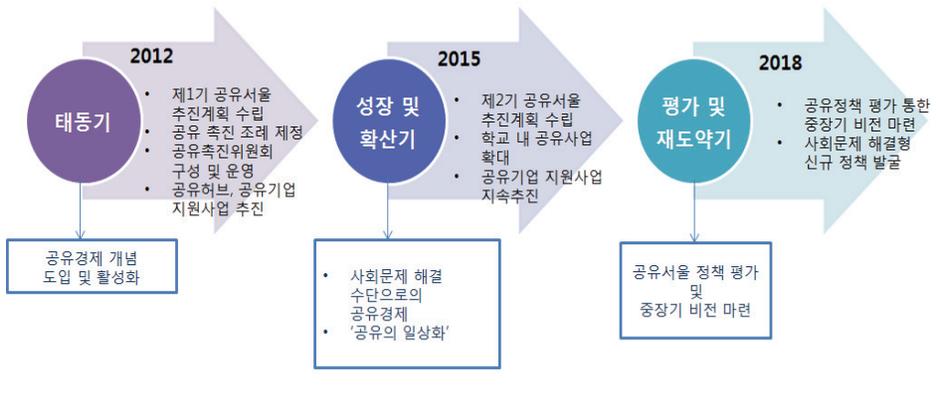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공유서울 1기 추진계획(2012) 및 공유서울 2기 추진계획(2015)

즉 이러한 공유서울 정책의 주요 목적을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해 본다면, 공유서울 1기가 지방 정부 차원에서 공유경제를 정책화 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서울시 내에서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하고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공유서울 2기는 도시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의 공유경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공유가 실제 시민들의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공유의 일상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최근 2018년 하반기 공유도시팀 업무계획 상에 나타난 공유서울 추진방향을 기존 공유서울 1·2기 정책 방향과 비교해 볼 때, 2가지 점이 눈에 띈다. 우선 2018년도 공유도시 팀 업무계획을 살펴보면 크게 공유정책 평가를 통한 중장기 비전 마련,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정책 발굴, 그리고 시민참여를 통한 공유문화 확산의 세 가지 정책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와 주요 내용이 마련되어 있다.

즉 제 2기에서 대두되었던 사회문제 해결의 주요 수단 및 전략으로서의 공유경제 활용 목적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어, 서울시 내에서의 공유경제 활용 목적은 사회문제 해결에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에 공유서울 정책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책의 내용을 확산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2018년 업무계획 상으로 파악된 공유서울 정책은 기존의 공유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 등을 자체 진단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즉 2018년 정책 비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변화와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과도기의 시기로 진입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5-2] 시기별 공유서울 정책 목표 변화



2) 세부 정책 내용

(1) 태동기(2012~2014)

공유도시 서울 1기의 세부 정책은 크게 4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첫 번째는 제도기반 마련의 측면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2012년 12월 「공유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2013년 2월부터는 민관 협치를 위한 ‘공유촉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온라인 공유촉진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공유

허브(sharehub.kr)'를 구축하고 국내외 공유관련 정보와 새로운 소식을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2014년부터는 '공유 제도개선 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공유 부문 간 즉 교통, 관광, 세무, 보험 등 서로 다른 부문 간 충돌되는 이슈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두 번째는 민간 공유경제 생태계의 조성이다. 이에 2013~2014년 기간 동안 공유단체 및 기업을 50개 지정하고 사업비 504 백만원을 지원하는 한편, 공유서울 박람회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공유기업 워크숍,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하였다.

세 번째는 공공부문 공유사업 활성화이다. 공공시설 개발을 통한 유휴공간 공유 확대를 위해 1,000여 개소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3,670 데이터셋 공개를 통해 공공데이터 부문에 있어서도 공유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차장 공유, 룸셰어링 등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사업을 실시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 2,000면 공유, 한지붕세대공감 사업 66가구(77명) 참여 실적을 달성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아이웃 나누기 80,000건 공유, 공유서가·공유도서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나아가 공유정책을 국내외 주요 도시 및 국가로 전파·확산하기도 하였다.

네 번째는 시민 생활 속 공유문화의 확산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일상 생활 속 공유의 실천을 위한 시민 공유체험 행사를 실시하고, 자치구 찾아가는 공유마당 운영 및 공유 UCC, 체험수기 공모를 통해 공유 체험 사례를 전파하고자 하였다.

[표 5-4] 공유서울 1기 주요 정책목표 및 세부 정책내용

정책 목표	세부 정책 내용
제도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 촉진 조례 제정 민관협치를 위한 공유촉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유허브 구축 및 운영 공유제도개선기획단 구성 및 운영
민간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단체 및 기업 50개 지정 및 사업비 504 백만원 지원 공유서울 박람회 및 컨퍼런스 개최 공유기업 워크숍, 컨설팅, 홍보지원
공공부문 공유사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시설 개방을 통한 유휴공간 공유 확대 및 공공데이터 공개 주차장 공유, 룸셰어링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공유사업 실시 아이웃 나누기, 공유서가·공유도서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유사업 추진 공유정책 국내외 주요 도시 및 국가로 전파

정책 목표	세부 정책 내용
시민 공유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 속 공유실천을 위한 시민 공유체험 행사 실시 • 자치구 찾아가는 공유마당 운영 • 공유 UCC, 체험수기 공모를 통한 공유체험 사례 전파

자료: 서울시(2015), 「공유서울 2기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정리

(2) 성장 및 확산기(2015~2017)

공유도시 서울 2기의 세부 정책은 크게 5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첫 번째는 공유를 활용한 도시문제의 해결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서울형 공유모델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하였는데, 주차장 공유, 공공시설 개방, 틈새어링 등 시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함과 동시에 자치구·학교 등과 협업하여 새로운 공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였다. 또한 거주자우선 주차장 등 주차장 공유사업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 등 공공시설물의 전면 시민개방을 추진하였으며,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는 등 공간공유 부문의 적극적 추진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 부문은 공유의 일상화이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시민체험행사 개최 뿐만 아니라 마을·학교 중심 공유확산을 꾀하게 된다. 특히 공유마을, 공유학교 등 공유를 선도할 수 있는 우수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2014년 4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했던 ‘찾아가는 공유 한마당’ 사업도 전 자치구 및 학교로 확산하였다. 이와 함께 언론이나 SNS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공유도시 서울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축된 ‘공유허브’를 위키 방식의 오픈형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하여 공유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세 번째는 대표적인 공유기업, 즉 공유 스타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함으로써 공유경제의 저변을 확대하려는 노력이다. 기업 니즈에 맞는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공유경제 창업프로그램 운영, 공유기업 지정 및 사업비 지원사업의 계속추진, 맞춤형 컨설팅 지원 투자유치 지원, 공유 코디네이터 운영 등의 세부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네 번째는 글로벌 공유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네트워킹 강화이다. 국내외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공유도시 서울 브랜드를 확산하고자 하였는데, 세부적으로 공유도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공유경제 국제 자문단 확대 운영, 공유서울 국제박람회 개최

등 사업이 이루어졌다.

다섯 번째는 법·제도 개선으로 공유 활성화 기반 마련이다. 이를 위해 법·제도 개선 공론화 과정을 거친 개별 법령개정, 그리고 공유촉진특별법 제정 등이 계획되었으나, 2019년 6월 현재 개별 법령개정 및 공유촉진특별법 제정 등의 전략에 있어서는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표 5-5] 공유서울 2기 주요 정책목표 및 세부 정책내용

정책 목표	세부 정책 내용
공유로 도시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공유모델의 발굴 및 확산 • 거주자우선주차장, 공공시설물, 셰어하우스, 한지봉세대공감 사업 등 공간 공유 사업 확대 • 아이웃, 장난감 공유사업 확대 등을 통한 물건 및 지식 공유 활성화
공유의 일상화로 「천만서울 천만공유」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시민 체험행사 확대 • 마을·학교 중심 공유 확산 • 공중파, SNS 등을 활용한 전략적 홍보 및 '공유허브' 온라인 플랫폼 확대 개편으로 인프라 확충
공유 스타기업의 적극적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경제 창업프로그램 운영 및 공유기업 지원사업 지속화 • 맞춤형 컨설팅 지원 투자유치 지원 • 공유 코디네이터 운영
국내외 공유확산 위한 네트워킹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도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공유경제 국제자문단 확대 운영 • 공유서울 국제박람회 개최
법·제도 개선으로 공유 활성화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촉진특별법 제정이 계획되었으나 2019년 6월 현재까지 미달성

자료: 서울시(2015), 「공유서울 2기 추진계획」 및 반정화(2017)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3) 평가 및 재도약기(2018~현재)

이후 가장 최근인 2018년 하반기 서울시 혁신기획관 내 공유도시팀 업무계획을 통해 살펴본 공유서울 관련 세부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정책 목표 하에 세부 추진과제들을 설정하고 있다. 첫 번째는 공유정책 평가를 통한 중장기 비전 마련으로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공유서울 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위한 정책 연구 및 포럼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문제 해결 수단으로서의 공유서울 정책의 방향성

은 그대로 견지하되, 다양한 신규 정책 발굴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해결력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내용의 확대도 엿볼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참여를 통한 공유문화의 확산으로, 시민들이 직접 공유정책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유에 대한 홍보 확대와 함께 생활 속 공유를 확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6] 2018년도 공유서울 정책 추진 목표 및 주요 과제

비전	정책목표	추진과제	주요내용
변화와 도약을 준비하는 '공유서울 2018'	• 공유정책 평가 통한 중장기 비전 마련	• 공유정책 평가 위한 정책 연구 및 포럼 개최	연구 및 포럼 • 서울시 공유도시 정책지원 위한 디지털재단 정책연구 • 공유정책 평가 위한 시립대 시정연구 추진 • 정책별 포럼 개최
	• 사회문제 해결 위한 신규 정책 발굴	•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 공유 • 협동조합형 공유모델 시범 실시	신규 정책 발굴 • 거주자 우선 주차면 공유 • 학교 등 유휴체육시설 공유 활성화 • 협동조합형 공유모델 추진
	• 시민참여 통한 공유문화 확산	• 시민들이 직접 공유정책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생활 속 공유 확산 • 공유페스티벌 개최 • 공유캠프 프로그램 개발 • 공유허브 리뉴얼

자료: 서울혁신기획관, 2018, 「2018 하반기 공유도시팀 업무계획」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3) 유형별 정책 사례

서울시 공유관련 정책을 본 연구의 주요 유형화 기준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우선 경제적 목적의 비즈니스형 사업에는 도시민박 활성화사업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비즈니스형은 민간자원의 민간 공유 촉진으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 사회적 목적은 사회적관계추구형과 지역사회문제해결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회적관계추구형은 휴먼라이브러리 등 공유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확산하고 공동체 활성화 효과를 창출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지역사회문제해결형은 서울시 공유정책에서 상당수를 차지

하고 있고, 또한 정책의 주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유형이다. 서울시에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공유단체·기업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사회문제해결형’이라는 분명한 선정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공유정책의 분명한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사회문제해결형 공유사업의 다각화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서울시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목적을 가진 자원활용형은 물품이나 공간 등 공공자원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이 공동으로 활용하게 하는 정책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구도서관·공공시설 공유, 그리고 공공자전거 및 나눔카 사업 등을 통해 환경오염 저감 및 친환경성 증진 효과를 창출하려는 특성을 띤다.

[표 5-7] 서울시 공유촉진 우선 추진 사업의 유형화

유형		사업명	특성
경제적	비즈니스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민박 활성화사업 (예: 코자자, 옐로트레블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자원의 민간 공유 촉진으로 경제적 효과 창출 목적(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자원활용 특성: 민간자원의 민간활용
사회적	사회적관계 추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먼라이브러리 협동조합 공유모델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활용 특성: 민간자원의 민간활용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문제 해결형 공유단체·기업 지원 사업 거주자우선주차장공유 셰어하우스, ‘한지붕 세대공감’ 공유마을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공유정책의 상당부분이 지역사회 문제해결형에 초점 최근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사업의 다각화를 목표로 추진 자원활용 특성: 민간자원의 민간활용
환경적	자원활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구 대여소 아이웃 공유 공공도서관 공유 공공시설 개방 공공자전거 따릉이 나눔카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이나 물품 등의 공유를 통해 친환경적, 자원활용적 목적 추구 자원활용 특성: 공공자원의 민간활용

자료: 서울시(2015), 「공유서울 2기 추진계획」 및 서울혁신기획관(2018), 「2018 하반기 공유도시팀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1) 경제적 가치: 비즈니스형

• 도시민박 활성화 사업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경제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도시민박 활성화사업이다. 이 사업은 개별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에 따라, 개별 주택의 남은 방을 활용하여 소득증대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모색된 사업이다. 2015년 700개소에서 2020년까지 1,200개소 까지 도시민박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며, 도시민박업 운영(희망)자 대상으로는 창업설명회 개최를, 도시민박업 운영자 대상으로는 안전, 환대, 외국어 등 심화교육과정 제공 등 단계별 차별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운영자 커뮤니티 지원을 통한 운영업체간 협력기반 조성, 해외포털, 여행사 및 잡지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를 통해 인지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도시민박의 활성화 및 소득증대,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를 견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회적 가치: 사회적관계추구형

• 휴먼 라이브러리

휴먼라이브러리 사업은 다양한 경험 및 지혜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 지식이 아닌 '지혜'를 공유하고, 이러한 건설적 대화를 통해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타파하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개발된 사업이다. 사업 명 '휴먼 라이브러리'가 뜻하는 것은 '도서관에 와서' 책'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특히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고, 지식과 경험을 서로 나누고 소통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형성 및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독자들과 활발한 대화가 가능한 '사람책'을 섭외하고, 사람책 1명당 독자 3~5명의 모임을 구성하여 각 모임이 3~5회의 모임을 갖는 형식이다. 이 사업은 시민들의 재능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 형성, 나아가 인간의 권리 및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3) 사회적 가치: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 사회문제 해결형 ‘공유단체·기업 지원사업’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공유 촉진 사업 중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둔 대표적인 사업은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특히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 되기 위해서는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회문제의 범위에는 청년실업 등의 경제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서울시라는 도시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다.

[표 5-8] 공유단체·기업 지정 요건: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할 것

〈사회문제의 범위〉

-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
-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 그 밖에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지원사업은 2012년 제정된 공유촉진 조례에 따라 ‘공유단체·기업 인증제’를 도입하면서 부터이다. 구체적으로 공유단체·기업 지원사업은 물품, 공간, 재능·지식, 모빌리티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공유 활동을 한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지정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2천만원, 지정기간은 3년이다. 이에 매년 공유경제 기업·단체를 지정하고 창업단계에서 성장까지 다양한 단계 맞는 지원을 제공해 왔다. 2018년까지 6개년 총 102개, 누적 기준 134개의 기업 및 단체를 지정하고 공유촉진사업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기간 지원 금액은 약 16억 3,600만 원으로 업체당 평균 약 1,146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9] 서울시 공유기업·단체 지원 사업 추진 내역

(단위: 개, 백만 원)

구분	공유 기업·단체 지정		지원내역
	총 지정수	신규 지정수	
2013	37	37	286
2014	13	13	218
2015	14	14	232
2016	43	18	280
2017	18	15	260
2018	9	5	260
합계	134	102	1,536

자료: 김시정(2018: 19)

• ‘한지붕 세대공감’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공유정책의 대표적 사례는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주거 공간의 여유가 있는 어르신과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학생을 연결하는 주거 공유 서비스로서, 고령화와 청년주거라는 사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고안된 사업이다. 즉 주거공간에 여유가 있는 어르신은 일부 여유 공간을 제공하고,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학생은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공간을 확보하되, 어르신을 위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생활 편의를 돕는다. 세부적으로 참여 어르신들은 남는 방을 시세의 50% 이하의 임대료로 대학생에게 제공하고, 대학생은 청소, 장보기, 스마트기기 학습 등 생활서비스를 어르신에게 주당 5시간 내외로 제공하는 형태이다. 이 사업은 2018년 국민통합정책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 ‘공유마을 조성’ 사업

기존에는 공유부엌, 공유옷장 등 콘텐츠 중심으로 공유사업이 추진되었다면, 최근에는 공유마을이라는 물리적 공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가 모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즉 ‘공유마을 조성’ 사업은 아파트 및 마을단위로 공유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마을 및 아파트 단지 단위로 공유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칭한다. 마을 및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기존 나눔가, 공공자

전거 등의 개별 사업을 집적화하고, 시민의 생활단위로 공유를 확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주민대표가 공유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간 조성 등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하며, 공유기업이나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시즌별/월별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 사업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 사업은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중 미사용 시간의 주차면을 시민들에게 공유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모색된 정책이다. 2018년부터 서울시는 한 주차 공유 플랫폼 기업 ‘모두의 주차장’과 연계하여 시민들이 민간 플랫폼을 통해 주차공간을 손쉽게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을 가지고 있는 주민은 자신의 주차면을 등록·공유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주차공간이 필요한 운전자는 사용료를 지불한 주차면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불법 주정차 문제와 사회적 비용의 절감, 주차장 신설 비용 절약, 이면도로, 거주지 인근 주차공간 확보, 그리고 배정자에게는 이용요금 최대 50% 감면 또는 상품권을 활용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도에 546건이던 공유 주차면의 수는, 2017년에는 1,091개 까지 확대되었다.

[표 5-10] 부설주차장 포함 연도별 공유 주차면 수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06	계
공유 주차면 수	546	1,277	1,768	1,091	533	5,215

주: 2018년은 5월 말 기준

자료: 서울특별시(2018), 공유하는 즐거움: 공유서울 정책가이드

(4) 환경적 가치: 자원활용형

서울시에서 우선 추진하고 있는 상당수의 사업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환경적 가치 측면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나눔카 사업은 차량공유 확산을 위한 서울시 차량 공유 브랜드로서,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도 필

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내 차처럼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그린카, 쏘카 등을 서울시 공유기업으로 지정하고, 공영주차장 50% 할인 등의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온실가스 등의 환경 문제를 고려하여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 친환경 차량 중심으로 차량 공유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나눔카 1대당 승용차 8.5대 감소 및 억제효과, 연 289억 원의 가계지출 절감 효과, 자동차 온실가스 486톤 감축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공유사업 ‘따릉이’는 2017년 서울시 공유정책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공유사업이다. 따릉이는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도시의 교통체증, 대기오염, 고유가 문제를 해결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고안된 사업이다. 누구든지 ‘따릉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가까운 정거장을 선택하여 이용한 후, 가까운 거치대에 자전거를 반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접근성 및 편의성을 확대하고 있다. 2016년에는 10만 명에 불과하던 회원 수가 2018년 초에는 60만 명까지 확대된 것으로 사업의 확산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표 5-11] 자원활용형 공유 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물건	• 공유서가 활성화	• 아파트·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보유한 책을 이웃과 공유
	• 공구도서관 활성화	• 아파트·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평소 자주 쓰지 않는 공구의 공유
	• 아이웃·장난감 공유	• 영유아의 성장·발달에 적합한 아이웃·장난감 공유를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나눔 문화 확산
공간	• 공공시설 개방	•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 수요 증가에 따라 공공시설 개방 확대 • 시설 개방 확대 및 지속성 확보 위해 주민 등의 ‘자율관리모델’ 발굴
재능·정보	• 공공데이터 개방	• 다양하고 유용한 시민생활형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안정화
모빌리티	• 누구나 쉽게 빌려쓰는 나눔카	• 차량공유 확산을 위한 서울시 차량 공유 브랜드로서, 차량 소유 없이 필요할 때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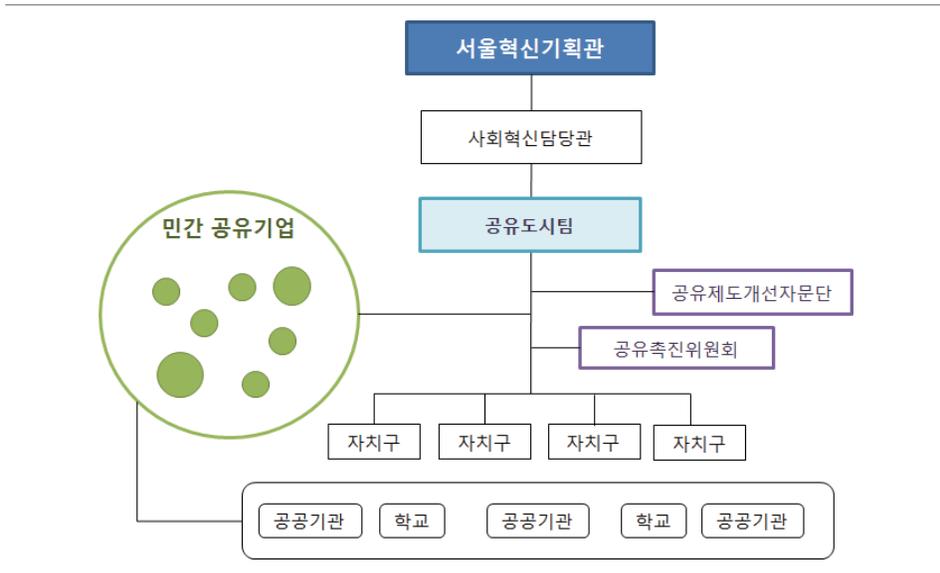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형 공공자전거 시스템 확대 및 구축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따릉이'는 서울시민이면 누구든지 쉽고 편리하게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서, 2017년 서울시 공유정책 조사 인지도 및 만족도 1위

자료: 서울시(2015), 「공유서울 2기 추진계획」 및 서울혁신기획관(2018), 「2018 하반기 공유도시팀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정리

4) 정책 지원 및 추진 체계

공유서울의 추진체계는 크게 서울시 본청과 각 자치구, 그리고 공유서울 사업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유기업 간 삼각 협력체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서울시는 2012년 서울시장 직속 서울혁신기획관을 구성하고, 그 하부에 사회혁신담당관-공유도시팀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체계를 마련하였다. 공유도시팀은 각 자치구 단위 공유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각 자치구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등을 활용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은평구의 경우에는 관할 지역내 공유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공유센터를 독자적으로 설립하는 등 자치구 단위 공유추진체계를 다각화하기도 하였다. 공유도시팀은 또한 온라인 플랫폼인 '공유허브'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다양한 민간단위 공유기업 지원사업을 행정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공유서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유제도개선자문단' 및 '공유촉진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정책 관련 협의 및 자문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민-관의 협력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의 공유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공공기관 및 학교 등도 공유서울 정책의 주요 행위자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3] 공유서울 정책 추진체계



3. 사례특성: 정책효과 및 문제점

1) 정책 효과

서울시는 2015년 제2기 공유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유서울 1기의 경제적 효과를 약 4,840억원으로 예측하였다. 주차장 공유를 통해 약 1,600억원, 공공시설 개방을 통해 약 3,170억원, 나눔카 회원을 통해 약 74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공유서울 2기에는 나눔카와 아이웃 공유를 통한 생활비 절감으로 120억원, 주차장 공유 및 공공시설 공유를 통한 11,800억원, 공유기업 및 도시민박을 통한 일자리 1,280개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다만 단순히 예측치를 제시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적 효과에 대한 좀 더 면밀하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표 5-12] 공유서울 1·2기 정책 효과

<p>〈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서울 1기 경제적 효과: 4,84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공유 : 2,000면×8,000만원=1,600억원 · 공공시설 개방 : 139,366㎡(1,000개소)×2,275천원=3,170억원 · 나눔카 회원 : 200만원(자가용 1대 대비 나눔카 연간 절감액)×37만명×1%=74억원 • 공유서울 2기 정책효과(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비 절감: 나눔카(110억원) + 아이웃(10억원) = 120억원 · 예산절약: 주차장 공유(8,000억원) + 공공시설(3,800억원) = 11,800억원 · 일자리증가: 공유기업(300개) + 도시민박(380명) = 1,280개 · CO2감소 : 나눔카(28,800톤) + 아이웃(1,000톤) = 29,800톤

자료: 서울특별시 보도자료(2015.04.21.) 재인용

특히 공유서울 정책을 통한 정책효과를 경제적 측면이 아닌 도시 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라는 사회적 측면에서의 효과역시 분명히 인식되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정책 방향성이 사회 문제의 해결에 있는바, 실제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지역에서 도출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문화 및 예술영역에까지 공유문화가 확산되는 조짐을 보인다.³⁸ 또한 공공자전거의 공유나 아이웃·장난감 등의 물품공유는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환경적 효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2) 쟁점 및 과제

(1) 서울시 공유경제 특징: 민간부문 공유 촉진 + 공공부문과의 소통·협업

서울시는 공유도시를 시민사회, 기업, 공공부문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공유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도시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가 가진 방향성을 분명히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즉 민간부문의 공유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공유관련 단체와 기업의 지원, 그리고 이들 활성화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과의 소통과 협업의 구조를 통한 공유도시로의 자리매김이 그것이다. 이러한 공유도시 브랜드의 구축 및 공고화를 위해

³⁸ ‘공유개념의 확장, 문화예술계의 공유문화를 꿈꾸다’
http://sharehub.kr/sharestory/news_view.do?storySeq=1778

서울시는 시장 직속 서울혁신담당관 내 공유도시팀을 조직하는 등 공유경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공유경제의 활용을 서울 시정의 주요 원칙 중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도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유도시 서울’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요 정책 사업 중 하나로 대두된 배경에는 박원순 시장의 공유경제에 대한 이해가 주요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공유를 ‘소유’가 아닌 ‘사용’의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공유를 통해 저비용 고효용 달성, 자원활용, 공동체 복원, 환경에의 기여 등을 꾀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³⁹ 즉 공유경제를 바라보는 초점이 공동 소유가 아닌 ‘공동 사용’에 있으며, 이러한 공동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의 방향설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공유’ 개념의 재인식에 기반한 공유사업 우선순위 설정 필요

앞서 인용한 박원순 시장의 ‘사용’에 초점에 둔 공유개념의 인식은 서울시의 공유정책이 공동소유에 기반한 공유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이나 공간, 그리고 서비스의 공유를 촉진하는데 초점이 맞추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시의 공유정책은 공유경제가 아닌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와 유사하거나, 상업적인 부분을 대거 포함하는 레식의 하이브리드경제 개념에 더욱 가깝다고 지적된다(곽노완, 2016: 168-170). 공유의 개념이 유희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효율을 추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의 경우에는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지고 투입된다는 점에서 결론적으로 공유의 원리 및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있다.⁴⁰ 또한 서울이라는 광역 지자체의 차원에서 직접 나서서 해결할 공유의 과제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두기 보다는, 시민단체나 지역 협동조합의 공유활동과 사업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분명한 한계점으로 논의된다.

즉 서울시 차원에서 거리나 광장과 같은 공유지와 공적 재산을 가능한 한 모두가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유(共有)의 대상으로의 혁신, 또는 공유(共有)의 범위 확장,

³⁹ 박원순(2015); 유정호 외(2016)에서 재인용

⁴⁰ 2019 공유포럼, “공유서울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시민”, (2019. 6. 2.) 에서 제기된 내용을 반영하여 정리

나아가 보다 넓은 공유(共有)권을 향유하고 누릴 주체의 형성 촉진과 같은 과제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된다(곽노완, 2016: 165). 즉 단순히 민간단체의 공유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유의 개념을 재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어떤 공유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에 따라 어떤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3)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활성화 필요

서울시의 공유정책 자체가 민간부문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서울시 내의 공유활동을 촉진시킨다는 분명한 방향성을 견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울혁신기획관 하부에 공유경제 전담팀을 구축하고 ‘공유제도개선자문단’ 및 ‘공유촉진위원회’ 등의 자문기구 운영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지만, 여전히 민간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대두된다.⁴¹ 즉, 공공과 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라는 분명한 정책 목표의 표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민-관의 협력구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서로 다른 부문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좀 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⁴¹ 2019 공유포럼, “공유서울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시민”, (2019. 6. 2.) 에서 제기된 내용을 반영하여 정리

제2절 부산광역시

1. 정책 추진 배경

부산광역시는 총 157개의 세부추진 과제 중 42개가 과학기술혁신에 관련된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혁신적인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정책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체질 혁신과 환경구축」을 추구한다. 구체적으로 부산광역시는 「지역경제 체질 혁신과 환경구축」에 관련된 추진전략 중 24번째 세부과제로서 「부산형 공유경제 모델 개발」 「부산대표 공유기업 육성으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대응」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유경제 관련 정책이 도입·시행되기 시작하였다.

[표 5-13]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관련 정책추진 배경

부산광역시 도시 목표	추진 전략	세부 추진과제
일자리가 풍성한 경제 혁신도시	지역경제 체질 혁신 환경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형 공유경제 모델 개발 • 부산대표 공유기업 육성으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대응

자료: 부산광역시 과학기술 아젠다의 정책적 함의(2018)

부산광역시 공유경제는 유희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14년 3월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⁴²를 제정하고 2014년 11월 부산광역시는 「공유경제 부산(Sharing Economy Busan)」이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는 “공유경제 활동 촉진을 통하여 자원 활용을 극대화 하고 시민 편의 증진과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여 공동체의 회복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안 제6조에 따르면 부산광역시는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경제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과 지원에 대한 심의를 위해

⁴² http://www.elis.go.kr/newlaib/laibLaws/h1126/laws_list.jsp?lawsNum=26000008007014 (검색일: 2019년 6월 24일)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다. 2014년 처음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위원회는 시 관계자 와 민간 전문가 참여로 운영되며 부산지역 공유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며 공유경제 참여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 및 정기 회의를 통해 공유경제 시행에 관한 계획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림 5-4] 공유경제 부산 홈페이지



자료: 공유경제부산 <http://www.sharebusan.kr/bepa/template.php?midx=27>

[표 5-14]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관련 히스토리

추진년도	추진내용
2014년 3월	부산광역시 공유촉진조례지정
2014년 3월	공유경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 개설
2014년 4월	공유경제촉진위원회 구성
2014년 11월	공유경제 부산 홈페이지 개설
2015년 1월	공유경제 부산 추진계획 발표
2015년 1월	부산 공유경제 시민허브 창립 및 제1회 모임 개최
2015년 4월	부산광역시 「부산 공유를 만나다」 포럼 개최
2015년 6월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단체 및 기업 지정공모사업 시행
2016년 6월	구 군 공유경제 촉진 지원 사업 시행
2018년 1월	「부산청년 우리집」 셰어하우스 사업 기획
2019년 1월	부산경제진흥원 공유경제 관련 위탁사업 예산 편성
2019 1월	「부산청년 우리집」 셰어하우스 사업 시행

자료: 기존의 선행연구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재구성

부산광역시는 공유경제를 통해 유희자원의 협력적인 소비를 극대화 하고 청년일자리 사업과 창업활동을 위한 수단으로 공유경제의 활용과 더불어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써 공유경제 개념을 이용하고 있으며 셰어하우스, 공공시설의 공유, 코워킹스페이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그 범위를 확대 중에 있다

공유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공유문화와 소통 확산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2015년 「공유경제 부산 추진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공유경제 기반조성, 공유경제 주요사업 발굴 및 지원, 공유경제 소통 확산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자치구 단위에서 공유경제를 위한 조례 제정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산광역시 내에서는 공유경제가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 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아래 표 참조). 부산광역시 자치구별 공유 촉진조례 소관 부서는 대부분 일자리경제과나 경제진흥과로 공유경제를 일자리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특성을 반영한다.

【표 5-15】 부산광역시 공유경제촉진조례 입법 현황

자치단체	법규명	제정일	소관부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2014-03-01	일자리경제실
부산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2016-06-10	창조경제과
부산 남구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2015-12-21	경제진흥과
부산 북구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2015-11-04	경제진흥과
부산 사상구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2016-11-24	일자리경제과
부산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2016-09-23	일자리경제과
부산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2016-09-13	복지정책과
부산 영도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2016-01-07	경제진흥과
부산 중구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2016-07-15	경제진흥과
부산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2014-12-30	경제진흥과
부산 동래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2017-11-03	경제계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결과

2. 정책 분석

1) 정책 주요 목적

부산시의 공유경제 정책 도입의 주요 목적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년주거의 문제해결이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공유경제 세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사회적 목적을 위한 공유경제 정책의 활용으로 다각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 세부 정책 내용

부산광역시의 공유경제 활성화의 비전은 「공유로 변화된 도시 행복한 부산」으로써 공유로 변화된 도시와 행복한 부산을 조성하기 위한 4대 중점과제를 추진 중에 있다.

[표 5-16]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추진 분야 및 추진과제

4대 중점과제	세부추진과제
공유경제 기반조성: 공유경제 패러다임 제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운영 활성화
	공유경제 웹 플랫폼의 기능 고도화
	공유활동가, 공유단체, 기업 등의 워크숍 개최
공유경제 주요사업 발굴 및 공유기업 지정 육성	공유단체 및 기업 인증제 도입(통합브랜드 구축)
	공유단체 및 기업을 지정하고 지원
	공유단체 및 기업을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으로 성장·육성
	시민점점 공유경제사업 발굴 육성시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시민참여 공유문화 확산	시민참여 공유문화 확산, 공유경제 활동가 양성
	공유기업인 간담회 개최
	공유경제부산 중간지원조직 설립
	리노베이션 공유스쿨 개최
청년주거나눔 확대 조성	청년 주거 나눔 「부산청년 우리집」 확대 조성 (7실→20실)

자료: 2015년·2018년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활성화 시행계획 재인용

첫째, 부산형 공유경제 기반조성에 힘쓰고 있다. 공유경제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하여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유경제촉진위원회

를 통해 공유 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 있는 공유경제 정책과제 발굴을 추진 중이다. 또한 공유경제 웹 플랫폼⁴³을 통해 부산광역시 공유자원에 대한 DB를 구축, 공유경제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및 프로그램에 대해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공유 참여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워크숍 개최를 통해 공유 기업, 단체 활동가들이 경험을 나누고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장을 마련하고 있다.

【표 5-17】 부산광역시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설치근거	「부산광역시 공유경제촉진 조례」 제13조(공유경제촉진위원회)
구성인원	13명 (위원장:경제부시장)
위원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주요기능	공유경제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공유기업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공유경제 촉진지원금 심의 등

자료: 부산광역시 시청 보도자료 <https://www.busan.go.kr/nbtnewsBU/1379106>

둘째, 부산광역시는 공유경제 주요사업을 발굴하고 우수 공유기업 지정 사업을 통해 부산대표 공유기업을 육성 중이다. 구체적으로 부산광역시는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지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하고 하고 있고 창업 공유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지원 사업을 시행중이다. 구체적으로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은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정」과는 별도의 신청·심사 과정을 통해 선정하며 공유경제 기업을 선정하는 심사기준은 공유경제 촉진효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사회 연관성과 관련된 항목 세부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동시에 공동 마케팅 및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공유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공유기업 및 단체를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자원·서비스의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부산 소재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1천만원 내외에서 최대 3년간 재정 지원 중에 있다. 2019년 4월 기준 공유경제 기업 촉진 지원 사업의 지원규모는 7개사 내외이다.

⁴³ <http://www.sharebusan.kr/bepa/template.php?midx=27> (검색일: 2019년 6월 24일)

[표 5-18]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기업 촉진지원 심사기준

심사기준	평가지표
공유경제 촉진효과	사업의 공유 촉진 효과
사업계획 타당성	계획의 구체성, 차별성, 일정의 실행가능성, 활동방안의 효과성, 사업비 운영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인력구성, 유사사업 추진실적, 재무구조
사회 연관성	사회문제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자료: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셋째, 부산광역시는 시민참여를 통해 공유문화를 확산하고 공유 네트워크를 통한 시민참여 문화조성, 공유경제 활동가 양성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공유 공간을 활용한 도시재생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사업을 기획하고 있으며⁴⁴ 공유경제 포럼(박람회)을 통하여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유경제 부산 중간지원 조직 설립을 통해 공유경제 관련 프로그램 개발, 공유경제 관련 연구 분석 평가, 공유경제 관련 컨설팅 교육 홍보의 역할을 수행한다.

[표 5-19] 부산광역시 공유형 도시재생 활성화 단계별 시책(안)

단계	단계별 목표	세부 추진 시책
1단계	도시재생거점시설 플랫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밥상 • 공개공지센터 활용
2단계	주민 신뢰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주민가이드 • 노인과 청년 공간 공유 • 영유아 물건 아나바다
3단계	마을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민박 • 마을공유화페 • 청년맞춤형 주거공간

자료: 김형균·오재환(2013) 「도시재생 소프트전략으로서 공유경제 적용방안」, 부산발전연구원, 재구성

넷째, 부산광역시는 공유경제 촉진사업의 일환으로서 청년주거 나눔 확대 사업⁴⁵을

⁴⁴ <http://www.sharebusan.kr/bepa/template.php?midx=30&mode=view&intnum=58> (검색일: 2016년 6월 24일)

시행중이며 2019년 기준 20실로 조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청년주거 나눔 「부산청년 우리집」은 주거공간의 여유가 있는 어르신으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제공받아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과 매칭하고, 해당 주택의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부산광역시, GS건설, 부산경제진흥원이 참여한 협력 사업으로서 공유주택 조성으로 통해 청년의 주거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2019년 1월 입주자 모집시 총 118명이 신청하여 8: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서류심사 시 입주자의 생활방식 과 성향이 고려되어진다. 2019년 하반기에는 기존의 낡은 집이나 빈집 등을 추가 개·보수하여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확장 중에 있다.⁴⁶

[그림 5-5] 「부산청년 우리집」쉐어하우스 조성지 모습



〈건설회사 지원금을 토대로 새롭게 리모델링된 부산의 「부산청년 우리집」 주방의 내부 모습〉



〈부산의 「부산청년 우리집」 전경〉



자료: 부산시청 제공 http://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834107.html

⁴⁵ <https://www.busan.go.kr/young/house06> (검색일: 2016년 6월 24일)

⁴⁶ <http://news1.kr/articles/?3530087> (검색일: 2016년 6월 24일)

3) 유형별 정책 사례

부산시 공유관련 정책을 본 연구의 주요 유형화 기준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5-20] 부산광역시 공유촉진 사업의 유형화

유형	사업명	특성	
경제적	비즈니스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워크(창업공간지원) • 공유경제 스타트업 창업지원 프로그램 • 공유경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고용창출 • 지역경제활성화 • 창업 친화적 생태계조성목적 • 지역맞춤형 공유경제 산업육성 목적 • 자원활용 특성: 공공·민간자원의 민간 활용
사회적	사회적관계 추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주거 나눔 「부산청년우리집」 • 「철쭉마을 나눔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층간 유대관계 형성 • 공동체 회복 • 건강한 지역공동체육성 목적 • 자원활용 특성: 민간자원의 민간 활용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매기 키즈 도서관」 • 「토이앤맘」 • 「아이꿈터」 • 「가치키움」 • 「재미모아장난감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눔육아 • 육아공동체 실현 • 맞춤형 육아 서비스 제공 • 협력적 커뮤니티 목적 • 자원활용 특성: 공공·민간자원의 민간 활용
환경적	자원환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큐레이터 • 드림옷장 • 컬처공 • 빌리쉬어 • 요트북 • 유카 • 캔슬마켓 • 코코카트코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와 낭비감소 추구 • 부산광역시의 지리적 특성이 고려된 해양 관광에 관련된 물품의 공유를 통해 협력적 소비 추구 • 자원활용 특성: 공공·민간자원의 민간 활용

자료: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활성화 시행계획(2015)(2018)」 공유경제부산(<http://www.sharebusan.kr/bepa/template.php?midx=27>)의 정보를 토대로 연구자 재구성

(1) 경제적 - 비즈니스형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비즈니스형 공유경제와 관련된 정책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광역시는 2014년 3월부터 공유경제 기업 종사자들이 정보를 교환하거나 서로 협력해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는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유경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를 운영 중이다. 공유경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는 전문지식 부족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예비 창업가에게 전문가 상담제도를 지원해 주며 공유경제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이 상품화에 앞서 시험제품을 만들기 원하면 첨단 장비 이용을 제공해 준다. 공유경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는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과 같은 무형자원을 예비창업자들과 공유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는 공유경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 설립 운영을 통해 우수 공유기업 확보 및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 장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세계적인 사무실 공유기업인 위워크(WeWork)가 2019년 4월부터 부산광역시에서 운영 중이다. 위워크(WeWork)는 창업을 준비하는 기업을 비롯해 스타트업, 대기업,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공간을 제공하는 글로벌 플랫폼 공유업체이다. 전 세계에 26만 8,000여명의 회원을 두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크리에이터 생태계 성장을 이끌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위워크(WeWork) 진출은 지역 인재 채용으로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부산 기업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 제공과 해외기업 투자 유치 등 글로벌 공유경제 모델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위워크가 자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위한 초기 부산 스타트업의 허브 역할을 해 줄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부산광역시는 공유경제 스타트업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다. 공모를 통해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 아이디어를 선별하고, 이를 전문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투입함으로써 부산대표 공유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운영 중이다. 공유경제 스타트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수상한 4개팀 및 우수사업 아이디어 2개팀을 대상으로 각각 2천만원 내에서 예산이 지원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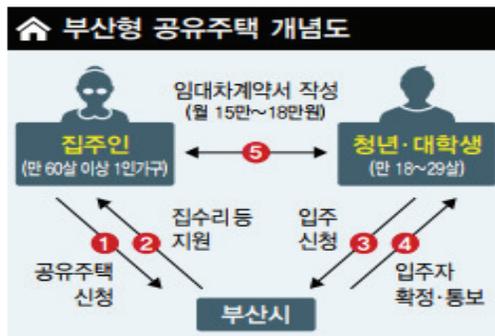
이처럼 부산광역시는 청년실업 해소 문제의 발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비즈니스형 공유경제를 활용하고 있다. 유형(공간)·무형(전문지식·교육·서비스)의 공공자원을 민간영역에서 활용·공유하여 부산광역시가 창업(스타트업) 친화적 생태계

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적인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비즈니스형 공유경제 정책이 추진 중이다.

(2) 사회적 - 사회적관계추구형

부산광역시내에서 추진 중인 「부산청년 우리집」을 사회적관계추구형 공유경제의 예로 설명할 수 있다. 「부산청년 우리집」은 어르신-청년 주거나눔 사업으로 유희주택을 보유한 노인과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학생을 매칭하는 세어하우스 프로그램이다. 빈 방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임대인)에게는 부수적인 임대수익 창출 기회가 제공되고 뿐만 아니라 단독 거주 고령자의 독거사, 고독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임차인)들에게는 주거비용 부담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 세대가 다른 두 집단에서 모두에서 환영받고 있다. 부산광역시 또한 변두리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 아니라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집이나 대학가 근처 빈방 등 젊은층이 선호하는 집을 공유주택 대상지로 찾아 제공하고 있어 「부산청년 우리집」의 인기는 높은 편이다.

[그림 5-6] 부산광역시형 공유주택 개념도



자료: 부산광역시청 <https://www.busan.go.kr/young/house06>

「부산청년 우리집」은 고령자-청년 세대 간의 상호 돌봄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지식 교류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평이다(이미숙 & 서귀숙 201747). 고령자(노인)은 가족 내 돌보의 역할 경험을 가지고 있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청년들을 정서적으로 보살필

수 있고 청년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지능력이 떨어져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습득이 어려워지는 고령자(노인)들을 위해 최신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거공동생활을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 관계 유지를 추구한다.

부산광역시에서 운영되는 「철쭉마을 나눔 밥상」 또한 사회적 관계추구형 공유경제의 또 다른 예로 설명될 수 있다. 「철쭉마을 나눔 밥상」은 홀로 사는 지역 주민이나 독고 노인이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서로간의 소통을 통하여 지역주민간의 네트워크 강화 및 건강한 지역공동체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처럼 「부산청년 우리집」이나 「철쭉마을 나눔 밥상」같이 부산광역시의 사회적 관계추구형 공유경제는 민간의 자원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자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중에 있으며 계층간의 유대관계 형성, 공동체 회복, 건강한 지역공동체 육성을 성취하려는 목적성을 갖는다.

(3) 사회적 -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부산광역시에서는 공유 경제 개념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협력적 커뮤니티를 구축하기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갈매기 키즈 도서관」을 운영 중이다. 부산광역시는 국가 위기로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부모들의 다양한 육아지원 욕구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갈매기 키즈 도서관(Seagull Kids Library)」을 출범시켰고, 나눔 육아를 실현하는 육아공동체의 거점 역할을 수행중이다.

「갈매기 키즈 도서관(Seagull Kids Library)」이란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 관내 육아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육아정보를 일원화하여 영·유아 및 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육아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공유 플랫폼을 말한다.⁴⁸ 「갈매기 키즈 도서관」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가 협약체결 된 28개 보육 관련 기관 중 한 곳에만 회원가입을 하면 나머지 27개 기관에서 보유한 장난감, 육아용품 등의 유형자원과 육아상담, 부모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 등의 무형자산을

47 이미숙·서귀숙 (2017). 비혈연 고령자-청년의 홈케어 공동생활 관계.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8(5): 61-71.

48 <http://www.bskl.kr/01/01.php> (검색일: 2019년 6월 26일)

홈페이지⁴⁹에서 검색해 비회원으로도 대여 및 이용 가능하다. 자원을 제공하는 주체는 민간(육아용품제공)과 공공(플랫폼제공)이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자원을 이용하는 주체는 민간영역이다. 부산광역시는 출산율 제고와 일 가정 양립을 떼어낼 수 없는 가치이자 민-관이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 제시하고 육아 돌봄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공유 플랫폼을 형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구축하여 심각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림 5-7] 「갈매기 키즈 도서관」 공유 플랫폼



자료: 갈매기키즈도서관 <http://www.bskl.kr/> (검색일: 2016년 6월 26일)

(4) 환경적 - 자원활용형

환경적 가치 측면에서의 자원활용형 공유경제는 수요자에게는 물건을 구매하는 것보다 공유된 물품을 사용함으로써 재정적 절약을 보장하고, 공급자에게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 자원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부수적인 수익을 제공한다. 이러한 공유경제 운영 시스템을 토대로 부산광역시에서는 유희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도시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공유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시책들을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유형자원 공유의 대표적인 사례로 「그린 큐레이터」와 「드림옷장」, 무형자원을 공유하는 사례로 「컬처콩」을 예로 들 수 있다.

⁴⁹ <http://bskl.kr/mobile/> (검색일: 2019년 6월 26일)

[그림 5-8] 자원활용형 공유개념도



자료: 부산광역시청 <https://www.busan.go.kr/young/house06> (검색일: 2016년 6월 26일)

「그린 큐레이터」⁵⁰는 문화사업에 공유경제 모델이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500명과 국외 100명의 아티스트 작품을 3개월 주기로 빌려주어 일반 시민이 다가서기 쉽지 않은 미술작품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는 사업의 형태로 운영 중이다. 「그린 큐레이터」는 자치구(군 구) 공유경제 촉진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아이디어로서 환경문화연합과 예술문화경영 지원센터를 통해 운영 관리되며 일반 시민의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는 있다는 평이다.

「그린 큐레이터」와 같은 자원활용형 공유경제는 소유와 과소비보다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예술작품을 대여하고 나누는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로 분류될 수 있으며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미술작품이라는 유형자원을 공유하는 협력적인 소비방식을 토대로 운영된다.

「드림옷장」⁵¹은 취업준비생 입사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사업으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줌으로써 18세~34세 부산광역시 거주 청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1인당 연 5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2018년부터 도입 시행된 「드림옷장」은 2019년 5월까지 4천 300여명 이용했으며 부산광역시는 구직활동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⁵⁰ <https://greencurator.co.kr/shop/> (검색일: 2019년 6월 26일)

⁵¹ <https://www.busan.go.kr/young/job02> (검색일: 2019년 6월 26일)

위해 이 사업을 시작했고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독려하는 목적으로 운영 중이다. 부산광역시 청년희망정책과는 2020년까지 6천명까지 「드림옷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의 유희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자원소비 감소를 추구하는 부산광역시의 유희자원 자원활용형 공유사업에는 「빌리쉐어」⁵², 「요트북」⁵³, 「유카」⁵⁴, 「켄슬마켓」⁵⁵, 「코코카트코리아」⁵⁶ 등이 있다.

무형자원을 공유하는 자원활용형의 대표적인 사례로 「컬처콩」을 들 수 있다. 「컬처콩」은 공연, 연극, 무용, 음악, 창작활동 등 문화예술 콘텐츠를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문화 예술단체와 예술가, 프리랜서, 기획사가 만든 작품을 플랫폼에 올리면 학교, 복지화관, 공공기관, 기업체 등이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는 공공기관의 유희공간을 공유경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유희공간을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민간에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공유촉진 효과를 기대한다.

이처럼 부산광역시의 자원활용형 공유경제는 민간의 영역(예: 유희자원 공유)과 공공의 영역(예: 공공기관 유희공간 공유) 모두에서 공유될 수 있는 자원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유희물품 및 유희 공간이 민간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의 형태로 운영 중이다.

【표 5-21】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유희공간 활용현황(2019년 6월 기준)

(단위: 개)

구분	체육시설	다목적공간	합계
유료	35	17	52
무료	112	40	152

자료: 공유경제부산 <http://www.sharebusan.kr/bepa/template.php?midx=27>

52 「빌리쉐어」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여행용품을 공유하는 목적으로 운영 중이다.

53 「요트북」은 전국 요트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써 예약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54 「유카」는 ktz역 기반 차량 공유서비스 플랫폼이다.

55 「켄슬마켓」은 환불불가 숙박권을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56 「코코카트코리아」는 배송차량 공유로 신선식품 취급소상공인의 상품을 희망하는 시간대에 배송하는 공유플랫폼이다.

4) 정책 지원 및 추진 체계

부산광역시의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은 비영리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여 공공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공공기관이 기반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지원의 추진체계는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사회적경제과와 공유경제촉진위원회,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공유경제시민허브, 공유경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표 5-22] 부산광역시 공유 관련 조직

구분	관련 추진 조직	역할
공공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 사회적경제과	공유경제 추진 위한 주무부서
공공	공유경제촉진위원회	부산시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자문 기능 수행
공공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시의 공유경제 사업 위탁운영
시민단체	공유경제 시민허브	부산 공유경제 활성화 위한 비영리 시민단체로 공유경제 교육 및 홍보 담당
시민단체	공유경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	공유경제관련 창업기업 육성 지원

자료: 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2015) 토대로 재구성

「공유경제 시민허브」는 2014년 부산형 공유경제 확산을 목표로 창립된 시민단체로써 공유경제에 대한 시민교육 및 홍보활동, 공유기업 창업 및 투자컨설팅, 공유경제와 도시재생을 연계한 다양한 사업발굴을 위해 노력 중이다.

「공유경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는 부산대표 우수 공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유경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는 비영리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공유경제 육성센터로서, 공모를 통해 사업아이디어를 선발하고 공유경제 기업 종사자들이 정보를 교환하거나 서로 협력해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는 소통의 공간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이 부족한 창업자들에게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유 시민학교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여 수강생들의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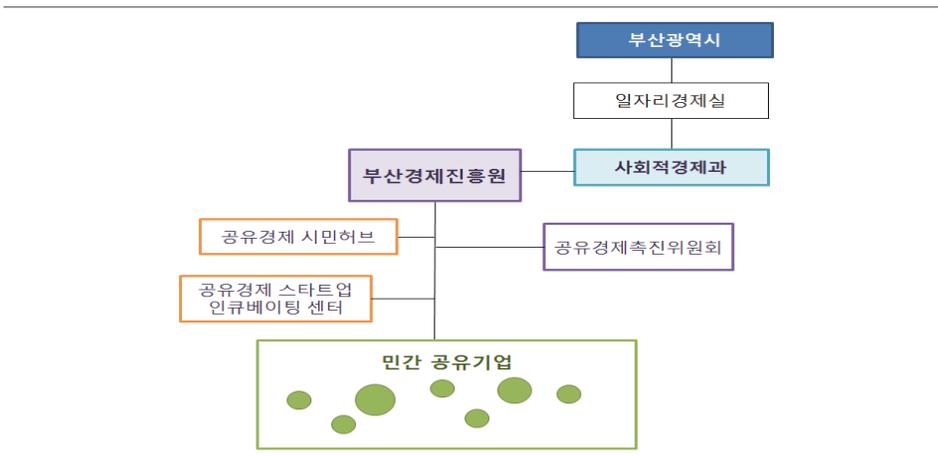
「부산경제진흥원」은 공유경제 창업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의 일부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공유경제 문화 확산과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세

미나를 개최하고 공유경제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마다 ‘공유경제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공유경제 전문가, 연구자, 일반시민 간의 네트워킹 활성화를 지원한다.

부산광역시의 공유경제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담당 주무부서는 「일자리경제실 사회적경제과」이다. 그렇다면보니 부산광역시의 공유경제 사업은 주로 청년일자리창출, 공유경제를 활용한 창업의 활성화 등과 같은 경제 및 일자리 영역에서의 공유사업 추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편이고, 「일자리경제실 사회적경제과」는 부산형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을 기획 조정하고, 공유경제 관련 조례 및 위원회를 운영한다. 또한 장기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선제적인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등 실무 그룹과 협업을 통하여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된 예산을 산하기관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4년 부산광역시 공유경제촉진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유경제촉진위원회」는 법률 학계 공유활동가 등 전문가 및 시민참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유경제 촉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5-9] 부산시 공유경제 정책 추진체계



3. 사례특성: 정책효과 및 문제점

1) 정책 효과 및 문제점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의 부산광역시의 공유경제 사업은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 자원을 제공해 주는 측면에서 수행중이며, 창업 활성화를 통한 서민소득 향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효과를 기대한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공유경제의 비즈니스형 모델은 주로 청년일자리창출, 공유경제를 활용한 창업의 활성화 정책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업비 지원, 창업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비 역시 부산광역시(공공부분)의 재정지원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보인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IT 기술 서비스 등 지식기반 공유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고 2019년 4월부터 부산 민·관 합동 코워킹 스페이스를 조성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공간을 제공하는 공유오피스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큰 건물을 임대해 소규모 창업 사업자에게 분할하여 임대하는 방식의 지원방법이다. 최근 부산광역시가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위워크」와 같은 외국계 공유 오피스 업체와 계약하여 500만원의 임대료 대신 지원해주는 재정지원 방식에 대해 부산시민들은 값비싼 임대료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재정지원방식에 상당한 한계점이 존재한 정책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⁵⁷ 국가가 외국계 기업과 계약하여 재정적 지원금을 지출할 경우 국내 로컬 공유오피스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산광역시에서 소유한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효율적인 지원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부산광역시는 예산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예산지원을 최소화하면서 공유경제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자원이 자연스럽게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토연구원(2015)⁵⁸이 분석한 제도적 쟁점과 같이 사무공간 공유는 현행법상 사무실 내에 여러 사업자 등록이 제약되기 때문에 공간 공유범위 확대에 따른 법·제적도적 대응 문제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의 부산광역시의 대표적인 공유경제 사업으로 「부산청년 우리

⁵⁷ <http://www.pitchone.co.kr/11698/> (검색일: 2019년 6월 29일)

⁵⁸ 김은란, 차미숙, 김상조, 박미선. (2015). 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

집」과 「갈매기 키즈 도서관」을 예로 들 수 있다. 「부산청년 우리집」은 사회적 관계추구 형으로써 비혈연 고령자와 청년의 주거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고령자가 소유한 집의 여분의 방을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고,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의 공동공간을 공유하는 거주방식으로 공공부문의 주거공유사업으로 다가올 초고령 사회와 청년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효과를 기대한다. 하지만 고령자와 청년은 그동안 살아온 환경이나 세대차이 등으로 인하여 생활습관 등이 다르고 고령자와 청년간의 상호 만족스러운 매칭의 결과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령자와 청년 각각의 입장에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자와 청년간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생활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패턴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임차인(청년)의 주거안정성과 임대인(고령자)의 재산권 피해를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적 안정장치 마련이 동시에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와 공유경제의 접합은 육아돌봄·육아용품 공유하는 방식의 플랫폼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갈매기 키즈 도서관」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경제가 활용되고 대표적인 예이다. 영유아 돌봄 경력을 갖춘 베이비티처들과 다양한 선호와 필요를 가진 부모들은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연결함으로써 지역사회 차원에서 보육·육아 공백을 메우는 방식으로 공유경제를 활용하고 있다. 온라인 육아 공유 플랫폼의 운영은 여성들의 육아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효과를 기대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육아 공유가 만들어내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사회적 영향력은 미약한 편이므로 지속적인 운영이 중요할 것이고, 비금전적 육아 공유 서비스 문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참여자의 만족도와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환경적 가치 측면에서의 부산광역시의 공유경제 사업은 소비와 낭비를 줄이는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 측면에 초점을 두고 운영 중이다. 특히 부산광역시는 「그린 큐레이터」 「컬처콩」과 같이 예술공연이나 예술작품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방식을 확대운영 중이며 영화나 영상자료를 공유하는 아카이브 공유센터 또한 조성 검토 중에 있다. 또한 부산광역시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해양과 수산에 관련된 고가의 특수장비나 요트와 같은 해양 관광물품 등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하지만 홍보와 낮은 인지도로 인해 자원을 공유하는 사람과 공유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욕구 간의 미스매칭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공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수요)와 공유하기를 원하는 물품(공급)간의 균형점을 유지할 수 장소(또는 물품)에 대한 고민이 필요 할 것이며, 공유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보, 자원 등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충분하게 갖춰졌는지에 대한 고민, 편리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도 동시에 필요할 것이다.

2) 쟁점 및 과제

(1) 공유 스타트업(창업) 기업 지원에 관련된 근거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산광역시의 공유경제 사업은 급성장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야기될 문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책 마련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부산광역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창업(스타트업) 지원에 집중하고 있지만 공유경제의 특성과 사업방식, 운영원리에 적합한 창업(스타트업) 지원에 관련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적 예산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공유단체 및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공유기업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를 제도적인 측면에서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응책마련이 시급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공창업(스타트업)지원에 관련된 「위워크」와 같은 코워킹 스페이스 사무공간 공유에 관련해서 사무실 내에 여러 사업자 등록이 제약되고 있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관련법제의 개선이나 새로운 법안 마련의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유공간에서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공간공급자와 수요자 중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한 책임의 소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간 유형별로 합법여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공간 유형별로 납세 및 안전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2)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법적 보호 장치 서둘러 마련 필요

둘째, 「부산청년 우리집」이나 「갈매기 키즈 도서관」과 같은 프로그램의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현 상황에서 공유경제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거래상의 위험이나 사회적 안전성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유희자원이 공유되는 과정에서 수요자는 서비스의 질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이 발생할 수 있고, 공급자 또한 수요자를 파악하거나 관찰하는 것이 어려워, 거래하는 상대방이 적절하게 행동하지 않는 등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현 상황에서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공유경제를 통한 거래의 신뢰도는 급격히 저하될지 모른다. 또한 거래상의 위험과 사회적 안정성에 관련된 문제발생은 공유경제의 공급자와 소비자의 연속적인 이탈로 이어져서 공유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김민정, 2017). 따라서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측면에서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유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고 공유유형 및 공유분야마다 현황 및 전망, 이슈 등이 모두 상이한 특수성을 고려해, 분야별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마련방향 및 정책 방향을 도출해야 될 것이다.

(3) 공유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기적인 수요조사 수행 필요

셋째, 무엇보다도 부산형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유자원을 공급하는 공급자의 확보와 수요자의 니즈(Needs)가 균형점을 유지할 수 있는 분야를 개척하여 확장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산광역시의 공유경제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고, 수요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부산광역시는 시민들이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을 폭넓게 인식할 수 있게 홍보에 힘쓰고 공유경제 서비스를 발굴하는 차원에서 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여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유경제 관련 서비스를 기획·추진해야 될 것이다.

제3절 대전광역시

1. 정책 추진 배경

대전시는 2014년 민선6기 출범과 동시에 “쓰지 않고 늘리는 자원 효율적 활용, 이웃과 나누어 쓰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간, 재능, 물건, 정보 등 누구나 소유하고 있는 것은 함께 나누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유네트워크 조성사업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미 2013년부터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사회적 자본 확충을 통해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 증진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지역사회의 특성이 자리잡고 있다(박재묵, 2018). 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공유경제의 개념을 활용한 공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협력적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협력적 공동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관계망 형성과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의 창출, 그리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정경석, 2016). 이에 대전광역시는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고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기본 이념으로 공유개념을 도입하면서 공유경제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대전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 공유네트워크 조성을 추진하게 되는데, 공공기관, 체육관, 도서관, 문화시설 등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개인 및 공동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대전시의 공유네트워크 사업은 신뢰와 소통, 참여와 협력, 나눔과 자립을 핵심적 가치로 삼고 시민 중심으로 사회관계망을 형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경석 외, 2014). 특히 적정한 수준에서 소유와 소비를 유지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유를 통해 사람들 간의 관계망을 형성함과 동시에 나눔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015, 최길수).

[표 5-23] 공유네트워크 정의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 그리고 소통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적 잉여 자본(토지, 물건, 정보 등의 유형의 자산)과 사회적 자본(규범, 가치, 지식, 재능 등 경험에 기반한 무형의 자산)을 서로 공유, 교환, 임대, 대여하는 협력 공동체로서의 사회관계망

출처: 정경석, 2016, p.37

[그림 5-10] 공유네트워크(Sharing Network)



출처: 대전광역시 공유대전공유네트워크 홈페이지(<http://daejeonshare.kr>)

또한 대전시는 보다 효율적인 공유경제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 2월,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공유 활성화를 통하여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문화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표 5-24]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조례 내용

제2조 정의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을 함께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자원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공유네트워크”란 공유를 위한 협력적 공동체인 사회관계망으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사회관계망을 말한다.
제4조 공유활성화 정책	공유사업의 발굴 및 실천지원
	공유단체, 공유기업 및 공유네트워크 육성·지원
	공유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과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그 밖에 공유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출처: 국가법령센터(www.law.go.kr/)(검색일: 2019년 6월 20일)

특히, 대전시는 2016년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공유경제 모델이 집약된 ‘공유마을’을 육성하였다. 공유마을은 주민들이 유희 공간·물품·지식 등을 마을 내에서 서로 공유하여 공유경제를 실현해나가는 사업이다. 대전시는 공유마을 조성을 통해 공유문화의 정착과 공유가치를 높이고 이와 함께 주민 주도의 공동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2. 정책 분석

1) 정책 주요 목적

현재 대전시 공유경제정책은 시민주도의 마을자치 실현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시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이웃 간의 신뢰회복과 공감대 형성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나 시민자치 역량 또한 강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대전시 정책의 주요 목적은 주민의 직접참여에 따른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및 공유 자원 활용 극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다. 이와 더불어 대전시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청년 창업과 선순환적 일자리 생태계 조성 함께 도모하고자 한다.

2) 세부 정책 내용

공유마을 사업은 2018년 민선 7기⁵⁹에 들어가면서 시민들의 공동체 활성화, 사회적 경제, 청년정책 등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마을단위 공동체 단위의 조직 활동이 보다 적극 추진되어 현재 대전의 핵심 공유경제 정책 사업이 되었다. 대전시는 ‘소통과 참여’, ‘포용과 성장’, ‘공정과 신뢰’를 3대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리자치’를 추구⁶⁰함에 따라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 방안으로 마을사업 등이 더욱 확산되었다. 특히 마을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으로 민·관 협치 시스템 구축을 하고 이를 통한 마을기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함께 추진했다. 공동체 활동 경험과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마을자치를 실현을 돕는다. 대전시 공유관련 정책은 크게 공동체정책과와 교통건설국, 그리고 사회적자본센터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대전시 공동체정책과⁶¹

대전시 공동체정책과는 공유경제관련 사업으로 시민공유공간 조성사업, 리빙랩 시범마을 조성, 빈집으로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세부 사업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5-25] 공동체 정책과 소관 공유경제 관련 사업 내역

추진기간	단위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사업비
2019~2022	시민공유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공유공간 확보 및 제공: 마을공동체 공유 거점공간 연차별 공모 및 심사 선정 • 공유공간 관리부서 지정 및 위탁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별 중간지원조직 구성 및 공간 관리 위탁운영, 시설·공유공간 소유주 등과 개방·공유, 사후관리 관련 협약 체결 등 	6.1억
	리빙랩 시범마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 전역에 리빙랩 시범마을 10개 지정 - 지역문제 해결형 마을 리빙랩 공모사업 확대(2019년) 	4.5억

⁵⁹ 민선7기에 관한 내용은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사업 실천계획(2019) 내용으로 작성

⁶⁰ 월간 이츠대전, 2018 7월호

⁶¹ 대전시 공동정책과 정책내용은 「대전광역시 2019 주요업무 계획」과 「2019 업무추진계획」,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함

추진기간	단위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사업비
		4개소, 2019년 3개소 추가, 2022년까지 10개소) • 시범마을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은 지원하는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 • 리빙랩 네트워크 구축 운영 및 혁신 유관기관 협력 강화 •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플랫폼 차원으로 육성 - 마을문제 해결 방법에 4차산업혁명 선도기술 접목 (IoT, AI 등)	
	빈집으로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마을 조성	•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조례제정 •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시행 • 빈집정비 - 빈집철거 부지를 꽃밭 등으로 활용하여 도시공간 안정성 확보, 내부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고 벽지·천장재·바닥재 등 설치, 개축·증축·대수선·용도변경 등 빈집을 정비 예술작업장, 청년창업, 커뮤니티공간,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지역 활성화 거점으로 재생	1.6억

출처: 대전시 정책기획관실(2019)과 대전시, 민선7시 시민과의 약속사업 실천계획(2019)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2) 대전시 교통건설국⁶²

대전시는 스마트 주차관리 및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주차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개방과 공유를 통한 기존 주차장 이용률 향상을 통해 유효 주차 공간을 확대 사업으로 4차 산업 기반 교통체계 구축으로 지능형 스마트 주차관리를 구현하는 것으로 주차시설 DB화, 실시간 주차정보 안내 시스템 사업 등이 있다.

[표 5-26] 주차공유 사업 내용

추진기간	단위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사업비
2018~2022	스마트 주차관리로 주차공유기반 조성	• 스마트 주차장 구축을 통한 주차공유 기반 마련 • 공영주차장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 도입 • 향후 장기적으로 민간사업자(T-map, 카카오네비, 모두의주차장 등)에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 주차요금 결제 등 신규 서비스 창출 도모	142억원

⁶²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사업 실천계획(2019)」과 대전시「2019년 주요업무계획」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추진기간	단위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사업비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주차공유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설주차장 개방시 시설비 지원 등 민간주차장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보공유 유도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및 시민 동참을 위한 홍보 	
2019	스마트주차장 확충	주차전용건물 건립(2개소)	35억원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1개소)	9억원
		IoT·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25개소)	15억원
		공영주차장내 무인 주차관리기 등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 구축 지원(5개소)	2억원
	주차공유추진	부설주차장 개방 시 주차시설 개선, CCTV 설치 및 보험료 등 지원(11개소)	1.6억원
		주차공유 참여 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추가 인센티브 발굴(조례개정)	-
주차문화 선진화	주차문제의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홍보 - TV, 라디오 방송 등 다양한 채널 이용 홍보, 시민준법 의식 제고 캠페인	-	
단속강화	상습민원, 안전저해지역 등 선택과 집중 주차 단속 실시 - 주요간선도로, 버스전용차로 등 보행자 및 공공교통 중심 강화	-	

출처: 대전시, 민선7시 시민과의 약속사업 실천계획(2019)과 대전시 정책기획관실(2019)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또한 대전시는 ‘타슈’의 이용률 확대 및 안전한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한다. 공영자전거 타슈 이용시 교통카드 환승을 위한 무인대여시스템을 개선과 결제방법 확장(신용카드 및 일반 교통카드를 포함)을 통하여 타슈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표 5-27] 자전거 공유 사업내용

추진기간	단위 사업명	주요 사업내용	사업비
2019 ~2021	스마트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인대여시스템개선 - 대여소 261개소, 거치대 3,433개 교통카드 환승을 위한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개선 - 무인대여시스템 개선 용역 및 시범운영(3개소) 타슈 스테이션 확대 및 자전거 증량 다수인이 이용 가능한 장소를 선정 	45억원

출처: 대전시 정책기획관실(2019)

(3)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⁶³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위탁하여 추진 중인 대전시의 공유관련 사업은 크게 ‘청춘다락’ 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다. 먼저, ‘청춘다락’ 사업은 2017년 개소한 공간으로 유휴공간을 마을활동가와 주민 그리고 청년을 잇는 플랫폼으로써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사업이다. 청춘다락은 중앙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청년들의 공간, 마을 활동가들의 허브공간,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역청년들이 모여 협업을 통해 사회혁신활동이나 마을재생활 등을 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다. 허브공간은 마을들끼리 상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회의실, 유아실, 공유주방 등을 제공한다. 열린 커뮤니티 공간은 시민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며 마을공동체·시민공동체들의 행사 공간으로 제공한다.

이러한 청년공간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원하는 청년들이 입주하여 청년 스스로 설 자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표 5-28] 청년다락 사업 세부내용

공간	내용
마을주민에게 활짝 열린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동작은미술관: 지역주민, 지역작가를 위한 전시공간 • 공유서가: 시민들이 공유한 책으로 구성된 서가 • cafe 풀꽃: 누구나 와서 머무를 수 있는 열린 공간
마을 공동체 허브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주방(밥꽃): 소셜다이닝과 여럿이 함께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주방 • 유아방(애기똥풀꽃): 영유아를 동반한 마을 활동가들을 위한 공간 • 교육장(사람꽃): 소규모 행사 및 아카데미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 • 소규모 회의실(이야기꽃): 시민, 마을, 청년의 소통공간
청년활동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보다: 청년단체 개별 사무실 • 모이다: 청년 개인 및 단체 코워킹 스페이스 • 청년공간: 비입주 청년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출처: 청춘다락 리플렛, 2018

⁶³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정책내용은 사회적자본지원센터(<https://www.sajacenter.kr/>)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마을공동체 사업 중 공유경제 관련 사업은 시민공유공간 사업이다. 시민공유공간 사업은 주민이 만들고 이웃이 함께 쓰는 공간으로 나눔과 소통의 공간이다. 센터는 공간 조성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기획하고 운영한다. 시민공유공간에서는 주민들이 모여 함께 물건을 공유하고 음식을 나눠먹으며, 회의를 할 수 있다.

한편 2018년 공동체 활성화 증진을 위한 주요사업으로 일반공모 3개분야(모이자, 해보자, 가꾸자), 기획공모 4개분야(마을리빙랩, 공유 활성화 마을 지원, 공유공간거점 지원,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있다.⁶⁴

[표 5-29] 대전시 2018년 공동체 활성화 주요 사업

사업	내용
공유공간지원	공유 플랫폼 활동지원사업으로 공유 공간거점 형성을 지원하고 거점공간 형성의 핵심이 되는 인프라 구축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공동체 및 활동을 지원
공유활성화마을 지원사업	동네별 공유플랫폼 활성화 사업으로 공유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학습, 워크숍, 세미나를 통해 공유공동체 모형 구축 및 공유네트워크 강화 사업
마을리빙랩	마을리빙랩 실행모델 교육과 아이디어 발굴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선정된 공동체에게 마을리빙랩 워크숍과 전문가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통해 마을리빙랩 모형 제시
지역화폐	마을 문제를 공유경제, 지역순환경제의 가치로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활동

출처: 사회적자본지원센터(<https://www.sajacenter.kr>) 공모사업 자료(검색일:2019년 6월 20일)

3) 유형별 정책 사례

대전시 공유경제 관련 사업을 본 연구의 분석틀에 맞게 유형화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5-30]과 같다.

⁶⁴ 사회적자본센터, 2018 대전광역시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내용 정리

[표 5-30] 대전광역시 공유경제 사업의 유형화

유형		사업명	특성
사회적	사회적관계 추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공간지원사업(상상협동조합, 미술공감 편편아트, 학의뜰입주자대표회의, 꿈샘작은도서관, 이웃만들기, 옥탑방사람들, 청사진연구소) 마을주민에게 활짝 열린 공간(중동작은미술관, 공유서가, cafe 플꽃) 공유활성화마을지원사업(석교마을엔(N)사람 사회적 협동조합, 산성마을신문, 청년고리) 마을공동체 허브공간(공유주방, 소규모 회의실 유아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 내 주민들 간 친목도모 및 교류 장소 제공으로 공동체 의식 증진 자원활용 특성: 민간자원의 민간 활용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리빙랩(동아클럽, 89sustod 신탄진, 마루마을어린이도서관, 비학산알바위축제기획단) 청년활동을 위한 코워킹스페이스 지역화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들의 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해결하려는 목적 마을문제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 및 해결을 위한 마을리빙랩 자원활용 특성: 공공 및 민간 자원의 민간활용
환경적	자원환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 공유를 통해 친환경적, 자원활용적 목적 추구 자원활용 특성: 공공자원의 민간활용

(1) 사회적 - 사회적관계추구형

청춘다락은 청년을 위한 공간이자 마을주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열린 소통의 공간(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한다. 공유서거나 공유주방, 마을잔치 등 입주청년들이 마을주민과 소통하며 사회적 관계를 추구해나간다. 공유부엌, 문화를 공유 등을 통해 입주청년들이 마을주민과 소통하면서 사회적관계를 추구한다. 이러한 사업들은 공동체 역량을 강화시키고 마을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5-31】 사회적관계추구형 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공유공간 지원사업	상상협동조합	공유부역
	미술공감 편편아트	대화동 활짝 문화사랑방
	학의뜰입주자대표회의	공유공간조성 사업(도서관 및 커뮤니티센터)
	꿈샘작은도서관	꿈이 샘솟는 마을도서관 만들기 프로젝트
	이웃만들기	지속 가능한 마을 공간의 첫 걸음
	옥탑방사람들	옥탑방에서 만들어 가는 마을 이야기
	청사진연구소	마을 문화조성, 마을공동체사업, 커뮤니티디자인
마을주민에게 활짝 열린 공간	중동작은미술관	지역주민, 지역작가를 위한 전시공간
	공유서가	시민들이 공유한 책으로 구성된 서가
	cafe 풀꽃	누구나 와서 머무를 수 있는 열린 공간
마을 공동체 허브공간	공유주방(밥꽃)	소셜다이닝과 여럿이 함께 밥을 할 수 있는 주방
	소규모 회의실(이야기꽃)	시민, 마을, 청년의 소통공간
	유아방(애기똥풀꽃)	영유아를 동반한 마을 활동가들을 위한 공간
공유활성화마을 지원사업	석교마을엔(N)사람 사회적협동조합	공유와 협력의 마을순환경제 네트워크 구성
	산성마을신문	우리마을 우리가 직접 가꾸다
	청년고리	다시, 청년 꿀벌이 찾는 비파크

출처: 사회적자본지원센터(<https://www.sajacenter.kr>) 공모사업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2) 사회적 -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청춘다락은 취업과 창업, 비영리 사업 등 청년들만을 위한 거점공간도 지원한다. 청년사업가들이 스스로 설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 소모임, 회의, 강의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협업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청춘다락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와 청년실업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민이 직접 마을을 가꾸고 동네를 만드는 마을리빙랩 사업과 공유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어둡고 낙후되었던 지역이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줄 수 있다.

[표 5-32]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마을 리빙랩	동아클럽(오정동)	오정동 공구거리 공유사업
	89년생 신탄진(신탄진)	사람과 마을이 행복한 동네 만들기
	마루마을어린이도서관(법동)	법동에서 모이자! 해보재!
	비학산일바위축제기획단(효동)	추억이 담긴 마을을 만들어요
청년활동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마다: 청년단체 개별 사무실 • 모이다: 청년 개인 및 단체 코워킹 스페이스 • 청년공간: 비입주 청년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지역화폐	마을 문제를 공유경제, 지역순환경제의 가치로 해결하고자 시도	

출처: 사회적자본지원센터(<https://www.sajacenter.kr>) 공모사업결과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3) 환경적 - 자원활용형

자원을 활용한 환경적 가치의 대표적인 공유경제 사례는 타슈가 있다. 타슈는 대전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자전거 정책이다. 타슈는 시민들이 직접 자전거를 대여하고 반납하는 방법으로 이용 방법이 쉽고 편하면서 가격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타슈는 한정된 자원을 필요한 사람들이 서로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녹색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해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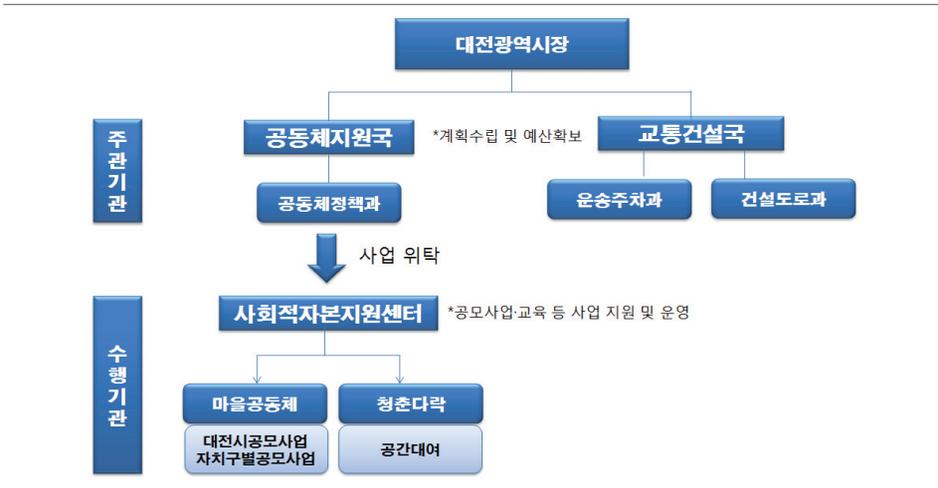
4) 정책 지원 및 추진 체계

대전시 공유경제의 특징은 공유경제 관련 업무 조직을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의 중간지원조직인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업무를 위탁했다는 점이다(성영조, 2016). 민·관의 역할을 분리하여 대전시 공동체정책과를 주무부서로 하고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중간지원조직으로써 업무를 위탁받아 다양한 공유관련 사업을 지원·운영하고 있다(이경우, 2017).

대전시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서별 계획수립과 예산확보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타슈와 같은 공공자전거 사업 및 주차공유활성화를 위한 스마트주차관리 등공유경제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대전시 공동체지원국의 공동체정책과는 마을공동체사업의 주무부서이며, 중간조직으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다양한 공유사업을 위

탁하여 추진하고 있다. 현재 대전시의 대부분의 공유경제사업은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지원되고 있다.

[그림 5-11] 대전 공유경제 추진체계



3. 사례특성: 정책효과 및 문제점

1) 정책효과

대전시는 타 지역과는 달리 ‘마을(지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공간, 지식, 정보 등을 공유한다. 특히, 주민 중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지역 내 공유자원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동시에 공유경제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또한 청년거점공간 지원사업은 지역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이곳에서 다양한 청년들이 모여 마을재생 및 사회혁신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은 다양한 마을을 잇는 허브공간과 공유 문화를 확산 시켜 시민 자치역량 강화 및 마을활동가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의 자원을 활용한 주도형 마을 기업 육성으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타슈’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적 이동수단으로 공유경제를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단절된 구간을 정비하고 결제방법 시스템 개선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2) 쟁점 및 과제

첫째, 대전시는 공유 사업에 있어 공유기본계획이 부재되어 있어 지속가능한 공유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유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공유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공유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을 공동체 생태계 구축에 있어서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추진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대전시 공동체 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데, 공유단체 선정에 있어서 기준이나 규모 등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다 성공적인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 세부 추진전략,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서울시 등이 공유자원에 대한 DB 구축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공유자원을 발굴·공유하고 있는 반면에, 대전시는 타 지역에 비해 지역의 공유자원 및 사업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 대전시는 2015년에 공동체 및 시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공유네트워크 플랫폼의 일환으로 ‘공유대전’과 ‘커뮤니티 맵핑’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공공기관 등의 유휴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지만, 홈페이지 정보가 2015년에 머물러 있어 현재 대전시의 공유자원 현황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다. 정보의 부재는 공유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언제든지 공유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자원에 대한 정보 DB구축 및 온라인 플랫폼 개편이 필요하다.

제4절 전주시

1. 정책 추진 배경

전주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장기발전 계획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공유기반 조성에 관련된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공유개념을 사회적 경제 조직체의 기초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인프라로 사용하고 있으며, 확대된 공유기반을 통하여 내발적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한다는 접근이다.

특히 전주시는 글로벌 업체 및 수도권 등 공유사업 관련 외부업체가 지역으로 투입되어 지역자원이 유출 남용되기 보다는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를 공유경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사회문제 해결형' 공유기업을 지역 자체적으로 공모 선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공유경제에 관련된 정책의 방향성을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측면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경제촉진조례 입법 또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하에서 다루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제 3조 (정의)에 따르면 공유기업을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제6조(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에서도 “공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전주시의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소관부서 역시 「사회적 경제지원과」에서 담당 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지원과」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체 활성화 공유기반 구축, 사회적경제 경영 안정화 공유기반 기능 확충, 공동체 중심 전주형 사회적 경제 공유기반 점진적 특성화 사업을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다.

【표 5-33】 전주시 공유경제촉진조례 입법 현황

자치단체	법규명	제정일	소관부서
전주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제3조	2016.05.13	사회적경제 지원과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제6조		

자치단체	법규명	제정일	소관부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제16조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조례 제19조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결과

2. 정책 분석

1) 정책 주요 목적

전주시의 공유경제 정책 비전은 「이웃과 함께하는 공유, 전주가 따뜻해지는 경제」를 추구하며 공유경제 정책의 주요 목적은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지역자원 활용 및 보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표방하고 있다. 전주시는 ‘공유’의 개념을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비용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여 경제적 이득을 챙기면서 공동체 회복을 달성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①공유기반 활성화 구축 ②공유기반 안정화 구축 ③공유기반 특성화 구축을 선정하였다.

공유기반 활성화 구축 단계는 공유단체·기업·학교 등 민관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 공유정책을 확산하기 전 단계로서 정책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자치법규를 통해서 제정하고, 전주시 공유경제 활성화 TF팀을 확대 운영하여 전주시의 공유경제 방향성을 정립하는 단계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전주시에서는 공유포털 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공유경제 촉진조례 입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주형 공유경제 시범사업을 공모 후 추진할 예정이다.

공유기반 안정화 구축 단계는 공모를 통한 공유경제 선도기업을 발굴 지원 및 육성하고 공유체험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한 단계로 보인다. 청소년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및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며 지역과 사회적 경제 관련 시민 동아리 지원을 통하여 공유체험 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유기반 특성화 구축 단계에서는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특정한 사회문제를 공유경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특성화 전략을 마련하여 다양한 실천주체를 육성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표 5-34】 전주시 공유경제 단계별 정책목표

단계별 정책목표	세부추진과제
공유기반 활성화 구축	공유경제 조례 제정
	공유경제 활성화 TF팀 운영 및 기본계획 수립
	공유경제 정책 방향성 정립 및 시험사업 추진
공유기반 안정화 구축	공유경제 실천 환경 조성
	공공부분 적절사업 활동 지원
공유기반 특성화 구축	지역사회 문제해결 위한 특성화 전략 마련
	민간부분 활동지원 확대

자료: 2015년·2018년 전주시 공유경제 활성화 시행계획 인용

2) 세부 정책 내용

현재 전주시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전주형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으로 반값 생활비 도시 실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3억원의 예산을 토대로 다섯 가지 세부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표 5-35】 전주시 세부 정책 내용

세부정책 목표	세부 시범사업 내용
공유기반 활성화 구축 (2018~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 인프라(홈페이지, 앱) 구축 • 시민체험 확대 • 민간 영역 지원을 통한 사업 발굴 • 공유전주 한마당 개최 • 공유경제 활성화 및 소통 확산

첫째, 전주시에서는 온라인 공유축진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 「한바탕 전주」 홈페이지⁶⁵를 구축하여 공공자원 예약 홈페이지를 운영 중에 있다. 이 플랫폼은 2018년 구축된 서비스로서 체육시설, 회의실, 강의실, 강당, 주차장 등의 공공자원 시설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2018년 8월 개시 이후 총 74건의 이용이 완료되어 아직까지는 공공자원 공유의 활용도가 저조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 더 다양한 유희공간의 확보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⁶⁵ <http://share.jeonju.go.kr/2018/inner.php?sMenu=H1000>

둘째, 전주시에서는 시민참여 공유체험 확산을 목표로 「공유데이」⁶⁶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공유데이는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되는 일회성행사로 공유자원발굴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역가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설명하는 성격의 사업으로 전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주시에서는 2015년부터 「전주시 공유경제 포럼」을 개최하여 전주시만의 공유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 중에 있다.

셋째, 전주시에서는 공공영역에서의 자원 확보뿐만 아니라 반값 생활비 도시를 만들기 위한 공간과 물건, 재능, 지식 등을 이웃과 나눠 쓰는 공유경제를 민간부분에서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시범사업을 선정해 추진 중이며 사업당 총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9년 현재 「서신골 문화복지 어울림」, 「아중리맘 공동체」, 「전북맘 스텔릭」과 같은 총 3개의 사업이 전개 중이며 그 규모를 확대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서신골 문화복지 어울림」 사업은 서신동 주민들과 수공예작가들 주최로 수공예품과 중고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오프라인 마켓을 열고, 재능기부 문화공연 체험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하여 공유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역축제의 형태로 운영중이다. 「아중리맘 공동체」는 주방용품을 기부 받아 대여해주는 주방용품 도서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북맘스텔릭」은 이유식 재료와 육아용품 등을 공유함으로써 반값 양육비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전개중이다.

넷째, 전주시에서는 해마다 ‘다함께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는 마당’이라는 뜻을 가진 「다울마당」 행사를 개최해 공유사업에 관련된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민간영역이 중심이 되어 공유영역을 발굴·실천할 수 있는 운영방안과 공공자원 개방 및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쓰고 있다.

다섯째, 전주시에서는 공유경제 활성화 및 소통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SNS 등을 통해 공유정보를 제공하고 확대된 네트워크의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구체적으로 공유사업 추진단체 및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전주 공유허브 구축」 사업을 계획 추진 중에 있으며, 「전주 공유허브」 플랫폼 구축을 통해 다양한 공유정보 및 참여방법을 시민들에게 통합적으로 안내 지원할 계획이다.⁶⁷

⁶⁶ 식료품을 공유해 함께 식사하는 소셜다이닝의 형태로 운영됨

3) 유형별 정책 사례

전주시의 공유경제 관련 정책을 본 연구의 유형화 기준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5-36] 전주시 공유경제촉진 시범사업의 유형화

유형		사업명	특성
경제적	비즈니스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페이스코웍(공유오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자원을 민간의 창업 및 협업활동 촉진의 목적으로 민간에서 활용
사회적	사회적관계 추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 공유사업 전주시민놀이터 창작지원센터 예술창작공간 서신골 문화복지 어울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의 재능과 경험을 나누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확대하는데 주목적 자원활용 특성: 민간 및 공공자원의 민간활용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식품 제공사업 장애인 보장구 기증운동 아중리맘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으로부터 기부받은 자원을 혜택 받을 수 없는 차상위 계층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민간영역에 활용 자원활용 특성: 민간자원의 민간활용
환경적	자원활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평공구도서관 행복나눔장난감 대여 우리동네 장난감은행 주차장무료개방 강당광장대여 농기계 대여사업 주민센터 옥상녹화사업 전복맘스홀릭 카카오바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이 옷과 나눔으로써 반값생활비 효과 창출 기대 자원활용 특성: 공공 및 민간자원의 민간활용

자료: 「공유시장경제를 통한 반값 생활비 도시조성을 위한 공유도시 전주 추진계획(2018)」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우선 전주시 공유경제 사업유형은 경제적 목적의 비즈니스형 사업유형보다는 사회적 유형과 환경적 유형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그중에서도 전주시의 사회적관계 추구형 공유사업은 공동체 공유사업, 전주시민놀이터, 창작지원센터, 예술창작공간의

67 현재는 공모를 통해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음

활동을 통해 다양한 재능과 경험을 나누는 ‘사람’의 공유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람의 재능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확산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사회문제해결형의 전주시의 대표적인 공유사업으로는 기부식품 제공사업, 장애인 보장구 기증운동을 시행 중이다. 공유 경제 개념을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며 협력적인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민간으로부터 기부받은 자원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차상위 계층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민간영역 활용하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전주시에서는 자원활용형의 공유사업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물품이나 공간 등의 공유에 대부분의 사업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행복나눔장난감 대여 및 전복맘스홀릭, 그리고 농기계 대여사업 등은 일시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반값생활비 효과를 창출하려는 특성을 보인다.

(1) 경제적 - 비즈니스형

현재 전주시에서는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 비즈니스 유형으로 스페이스코워킹을 예로 들 수 있다. 스페이스코워킹은 전통적인 부동산 임대 시장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공유경제 개념이 융합되어 발생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임대료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평이다. 전주시 스페이스코워킹은 민간의 영역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스타트업 및 창업기업들 사이에서 사용의 빈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2) 사회적 - 사회적관계추구형

• 전주시민놀이터 사업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사회적 관계형성을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전주시민놀이터 사업이다. 이 사업은 새로운 시민여가, 문화활동을 위한 24시간 개방형 공유예술거점 공간을 조성·제공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및 교류활동을 지원한다. 24시간 개방형 생활문화예술 연습공간 14개가 운영 중이며 월평균 1,823명의 전주 시민이 이용 중에 있다⁶⁸. 본 사업은 시민들과 지역예술가와의 연결을 지원하며 시

⁶⁸ 「공유시장경제를 통한 반값 생활비 도시 조성을 위한 공유도시 전주 추진계획 (2018)」, 전주시청 내부자료

민 생활 예술 역량강화와 시민들의 재능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이끌어 내는 「지역밀착형 생활문화예술공간」으로 역할 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간의 운영은 다양한 재능과 경험을 나누는 ‘사람’의 공유측면에서 사회적 관계를 확산시키려는 목적을 갖는다.

(3) 사회적 -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 기부식품 제공사업

전주시에서 추진 중인 공유경제 관련 사업 중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초점을 둔 대표적인 사업으로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기부받은 잉여식품을 활용하여 형편이 어려운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으며, 특히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장애인 보장구 기증운동

전주시에서 또한 차상위 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를 공유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으나 사용하지 않는 보장구를 민간으로부터 기증받아 필요한 가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전주시 생활복지과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전주시는 공유경제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의 문제해결에 공유경제 매커니즘을 활용하고 있다.

(4) 환경적 - 자원활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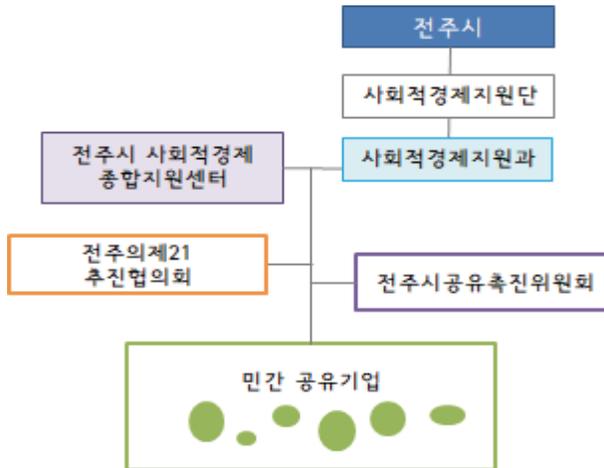
공유경제 관련해서 전주시에서 시행 중인 상당수의 사업은 잉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대부분 공구, 장난감, 농기구 등 생활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지 않고 시민들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시행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태평공구도서관, 행복나눔장난감 대여, 우리동네 장난감 은행, 농기계대여사업, 전북마스홀릭과 같은 시범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전주시는 ‘반값 생활비 도시 구축’을 공유경제의 대표 슬로건으로 내세운 만큼 공유경제 매커니즘을 가계 지출의 최소화를 추구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향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전주시는 유휴공간을 개방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공유’의 공간 활용에 관련된 사업도 진행중에 있으며 대표적으로 주차장 무료개방, 강당광장대여사업 이 있으며, 시청강당, 풍남문광장, 오거리광장 등 평일오후 및 공휴일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공시설을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4) 정책 지원 및 추진체계

전주시의 공유경제 정책 추진체계는 전주시 본청과 전주시 사회적경제 종합지원센터, 전주의제21 추진협의회, 전주시 공유촉진위원회 간 협력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전주시청의 사회적경제 지원과에서는 공유경제 관련된 모든 정책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담당한다. 공유경제지원센터 설립은 논의 중이기는 하나 현재 센터설립 전단계로 센터의 역할을 전주시 사회적경제 종합지원센터에서 대신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주시 공유촉진위원회에서는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기본계획 및 시책 수립 시행에 관한 심의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림 5-12] 전주시 공유경제 정책 추진체계



3. 사례특성: 정책효과 및 문제점

1) 정책 효과 및 문제점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공유오피스사례는 민간영역에서 가장 빠르게 수용되고 있는 공유경제 사례이면서 공유경제가 가지고 오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인 측면이 충돌하고 있는 사례이기도 한다. 전주시에서 공유오피스 시장은 급속도로 커지면서 사용자의 비용을 경감시켜주지만 동시에 입주사의 권리 보호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탁월한 접근성, 브랜드 이미지 효과, 다른 입주사와의 원활한 소통 등 다양한 이점 덕택에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공유오피스를 선택하지만 계약 체결과 이용 과정에서 분쟁 발생시 계약업체는 소비자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실정이다. 또한 공유오피스 계약과 이용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 시 입주사(계약업체) 대부분이 스타트업이어서 분쟁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에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입주사들이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 자격으로 계약한 것이기에 구제 방법이 없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한국소지바원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등을 사용(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은 개인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소지한 기업은 구제 대상이 아니다⁶⁹⁾라는 입장인여서 관련된 법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전주시의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사례인 「전주시민놀이터」는 수동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여진다. 전주시민놀이터를 위해 매년 1억 5,000여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평가이다.⁷⁰⁾ 실제 ‘전주시민놀이터’는 24시간 개방형 문화공간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의 퇴근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의 이용률은 전무한 상황이라서 “시민놀이터가 시민들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담보한 경험과 재능을 공유하는 공간으로서 그 목적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앞으로 시민의견을 반영한 책과 공연, 강의, 체험 등 다양한 테마의 기획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는

⁶⁹⁾ 서울경제 2018년 12월 9일 (<https://news.v.daum.net/v/gQf8ddAI2e? f=p>)(접속일: 2019년 9월 25일)

⁷⁰⁾ 담당공무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자원활용형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7월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동 수단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T에 신규 이동수단으로 전기자전거를 대여하는 '카카오바이크'공유사업을 런칭했고, 전주에서 300여대를 도입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전주시내 민간 공유전기자전거의 도로무단점유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 공유전기자전거가 도로를 무단으로 점령하면서 각종 사고 발생의 위험에 처해있고 전주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쟁점 및 과제

(1) 포용적 정책에 공유경제 매커니즘 활용한 시책보완 필요

전주시의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공유경제 사업은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기부 받은 잉여식품을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하고 차상위 계층 장애인에게 사용하지 않은 보장구를 공유하는 등의 사업운영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경제력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류 경제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이 소득을 얻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데 공유경제 개념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이 커뮤니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정책에 공유경제 매커니즘을 활용하는 시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공유자전거의 도로무단점유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공유자전거 이용의 장점은 사용 후 별도의 반납 지점이 없이 이용이 완료된 지점에 전기자전거를 주차한다는 점인데, 이 때 각종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주시에서는 카카오바이크라는 민간 공유업체를 통해 300여대의 공유자전거 서비스가 제공 중이며 공유자전거의 필요성과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에 적법한 행정조치가 부재되어 있어 안전상의 적법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공유자전거의 확산은 전주시민자전거보험의 지출액을 증가시켜 차기년도 보험요율을 인상시키고, 버스 등 공공운송사업의 매출에도 영향을 끼쳐 전주시가 공공운송사업자에게 보전해주는 적자보전금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수요와 공급 측 사용자 간의 불균형 심화

환경적 측면에서 자원활용형 공유경제는 유희자원을 사용자와 공급자가 공유하여 그 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현실에선 공유되어지는 물품 및 서비스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칭 현상이 발생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공유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전주시에서도 막대한 예산과 함께 설립 운영 중인 「전주시민놀이터」의 활용도는 매우 저조한 반면 육아공간이자 다양한 육아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의 확대·운영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오직 한 곳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조사를 토대로 관련된 사업과 시책을 선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5절 사례분석 종합 및 시사점

1. 사례별 특성 비교

1) 서울시: 사회적 - 지역사회문제해결형

우선 서울시의 경우 2012년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하면서 공유경제 개념을 도시 정책에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공유경제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선도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공유도시를 “시민사회, 기업, 공공부문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공유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도시”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민간부문의 공유활동 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하는 특성을 보인다. 무엇보다 지역사회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해 민간의 공유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다수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어, 본 연구의 분석틀에서 설정하고 있는 주요 유형으로는 지역사회문제해결형에 포함 가능하다. 지역의 다양한 문제해결을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공유활동 촉진을 통해 유도하고자 하며, 따라서 자원이용의 특성에 있어서는 민간자원의 민간활용이 대다수이다. 다만 환경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사업(예: 따릉이, 공공시설 개방)에 있어서는 공공자원의 민간활용적 특성을 보인다. 공유 정책 지원은 서울혁신기획관 하부 공유도시팀이 담당하고 있으며, 공유도시팀 - 자치구 공유사업팀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 부산시: 경제적 - 비즈니스형

부산시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부문의 공유촉진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바, 주요 목적은 경제적, 주요 유형으로는 비즈니스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공유 기업을 육성하고 공유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내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사회적·환경적 측면의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행정지원체계에 있어서는 일자리경제실 사회적경제과가 전담부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유경제 관련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은 공유경제촉진위원회가 수행한다. 또한 부산시의 사회적 경제과 - 공유경제촉진위원회 - 부산경제진흥원 - 공유경제스타트업 인큐베이팅센터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3) 대전시: 사회적 - 사회적관계추구형

대전시의 경우 공동체의 사회적 가치 증진,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유경제 정책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목적, 그리고 사회적관계추구형으로 분류 가능하다. 2013년부터 추진해온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사회적 자본 확충을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증진시키고자 한 지역의 특성이 공유경제 정책 내용의 발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전시의 대표적 공유경제 정책은 공유네트워크 구축과 마을 공동체 단위 공유활성화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자원활용 특성에 있어서는 민간자원의 민간활용이 대다수를 이룬다. 대전시 공유경제 정책 지원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공동체정책과 - 사회적자본지원센터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4) 전주시: 사회적·환경적 - 지역사회문제해결형 + 자원활용형

마지막으로 기초단위의 대표사례인 전주시는 비교적 최근에 공유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지자체이다. 전주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전략의 하나로 공유경제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확대된 공유기반을 통해 내발적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전주시 사례의 특성은 무엇보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공유정책을 발굴하고 있는데, 그 세부 사업에 있어서는 기부 받은 자원의 공유를 통해 취약계층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주요 목적은 사회적·환경적, 주요 유형은 지역사회문제해결 + 자원활용형으로 분류 가능하다. 전주시 공유경제 정책 지원은 사회적경제지원단 사회적경제지원과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지원과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표 5-37] 사례분석 종합

구분	부산	서울	대전	전주
주요 목적	경제적	사회적	대전	사회적·환경적
주요 유형	비즈니스형	지역사회문제해결형	사회적관계추구형	지역사회문제해결 + 자원활용형
주요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부문 공유 촉진 초점 → 공유기업 육성, 공유스타트업 창업활성화 사회적·환경적 측면의 사업도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도시 서울 표방 민간부문의 공유 촉진 초점을 두면서, 이를 위한 민간-공공의 소통·협업 강조 민간의 사회문제해결형 공유기업 발굴 및 지원 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 사회적 가치증진,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유경제 정책 도입 → 공유네트워크 구축 마을 공동체 단위 공유 활성화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인프라의 공유경제 정책 활용 사회 취약계층 포용적 정책: 지역사회문제해결형 + 자원활용형 사업 활성화
자원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자원의 민간활용 중심 공공자원의 민간활용(공자원활용형 사업: 공유자전거, 공공시설 공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자원의 민간활용 중심 공공자원의 민간활용(공자원활용형 사업: 공유자전거, 공공시설 공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자원의 민간활용 중심(공동체 내 자원활용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대다수) 공공자원의 민간활용(공유자전거 타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자원의 민간활용 활성화(자산활용형 물품공유) 다양한 물품공유 중심
공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공유, 정보공유, 공간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공유, 정보공유, 공간공유, 인제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공유, 공간공유, 인제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공유, 정보공유, 공간공유
지원특성(직접/간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지원: 공유경제스타트업 창업지원 사업 간접지원: 공유플랫폼 구축, 법·제도적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지원: 사회문제해결형 공유 단체·기업 지원 사업 간접지원: 공유플랫폼 구축, 법·제도적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지원: 공유활성화 마을 지원사업(청춘다락, 마을공동체사업) 간접지원: 법·제도적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지원: 공동체 공유사업, 민간 공유촉진 지원사업 간접지원: 공유플랫폼 구축, 법·제도적 기반조성

구분	부산	서울	대전	전주
주요 목적	경제적	사회적	대전	전주
주요 유형	비즈니스형	지역사회문제해결형	사회적관계추구형	지역사회문제해결 + 자원활용형
지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부서: 일자리경제실 사 회적 경제과 • 사회적 경제과 - 공유경제 촉진위원회 - 부산경제진흥 원 -공유경제스타트업 인 큐베이팅센터의 협력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부서: 서울혁신기획관 공유도시팀 • 공유도시팀 - 자치구 공유 사업 팀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 • 공유촉진위원회: 정책관련 협의 및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부서: 공동체지원국 공 동체정책과 • 공동체정책과 - 사회적자 본지원센터로 이어지는 지 원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부서: 사회적경제지원 단, 사회적경제 지원과 • 사회적경제 지원과 - 사회 적경제지원센터로 이어지는 지원체계 구축
쟁점 및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 스타트업 및 기업지원 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비 •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 지속적 수요조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사용'에 초점 → 공유 개념 재검토에 따른 정책 우선순위 결정 필요 • 참여자간 상호 신뢰성 확보 가 선결조건 •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실 질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부재에 따른 공유 정책의 지속가능성 문제 • 공유자원에 대한 DB 구축 필요 • 참여자간 상호 신뢰성 확보 가 선결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주도의 공유정책 추 진 → 정책 세부내용 발굴 에 있어 수요·공급간 미스 매치 발생

주: 각 사례 모두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측면의 공유정책을 추진 중이나, 각 지자체별 핵심 정책 초점을 주요 목적 및 유형 분류의 기준으로 활용

2. 사례 종합 특성 및 시사점

1) 지자체 여건에 따른 정책 목표의 설정 및 세부 전략 발굴

이론적 논의에서 검토한 것처럼 공유경제 관련 정책의 목적은 크게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고, 경제적 목적의 경우 비즈니스형으로, 사회적 측면의 경우 지역사회문제해결형과 사회적관계형성형으로, 그리고 환경적 측면의 경우 자원활용형 사업으로 구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각 사례들의 경우 비즈니스형, 지역사회문제해결형, 사회적관계형성형, 자원활용형 사업들을 고루 고려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각 사례의 정책 목표 및 정책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각 지자체별로 강조를 하고 있는 부문, 즉 정책의 주요 목적과 사업의 초점은 조금씩 상이하다.

서울시의 경우 시민사회, 기업, 공공부문의 소통과 협업을 강조하는 시정철학에 기초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이라는 사회혁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유관련 정책을 다각화하고 있다면, 부산시의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유정책 도입이라는 목적이 분명하다. 대전시의 경우 2010년 초반부터 추진해온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 자본의 증진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이 그대로 이어져, 공유정책을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 네트워크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주시의 경우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활력을 증진하고자 함과 동시에, 포용의 관점에서 자원공유를 통한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각 지자체가 비슷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의 세부정책들을 고루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목표와 초점이 상이한 것은 지역의 여건과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 지자체는 지역의 여건 및 해결해야할 이슈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유경제 관련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 목표와 세부 정책 내용을 발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공익적 성격의 공유활동 촉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지역문제 해결 초점

공유경제의 개념과 활용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교통이나 숙박과 같은 분야의 활용에서 그 기대효과가 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공유경제 개념을 활용하는 분야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단순히 자원이나 자산을 공유하는 개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동 소유의 관점에서 공유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이론적·개념적 측면에서의 논의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공유경제의 활용에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물론 각 부문별 공유경제 관련 활동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초창기부터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순히 법적·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이라는 ‘지원’의 측면뿐만 아니라 공익적 성격의 공유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포착된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와 전주시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공유로 도시문제 해법 제시 및 시민 생활문제 해결’을 공유도시의 핵심 추진전략으로 선정하고, 생활문제 해결형 공유단체 및 기업을 활성화하여 적극적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전주시의 사례는 유희자원을 지역 내 저소득계층에게 공유하고, 민간으로부터 기부받은 자원을 차상위 계층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활용함으로써 포용적 정책추진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즉 이들 사례는 공유경제가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민간고유의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이 창의적으로 공익적 성격의 공유정책 및 활동을 발굴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3) 유형별 자원활용 특성

유형별 자원활용의 특성을 종합하면, 대부분이 민간자원의 민간활용 촉진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 민간자원의 민간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정책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간접적 지원과 함께, 직접지원으로는 부산시의 경우처럼 직접 공유기업을 활성화 하거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직접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공공자원의 민간활용의 사례는 다양하지 않았으며, 자원활용형 사업에서는 공공이 보유하거나 마련한 자원(자전거, 생활용품, 공공공간, 기부물품의 공유 등)의 민간활용이 활성화되고 있었다. 반면 공공자원

의 공공활용은 전무하였다. 이는 향후 공공자원의 공공활용, 민간자원의 공공활용 정책이나 사업이 적극적으로 발굴되고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5-38] 유형별 자원활용 특성

구분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비즈니스형	지역사회문제해결형	사회적관계추구형	자원활용형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자원의 민간 활용 중심 • 공공자원의 민간 활용 부분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자원의 민간 활용 중심 • 공공자원의 민간 활용 부분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자원의 민간 활용 중심 • 공공자원의 민간 활용 부분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자원의 민간 활용 중심 • 민간자원의 민간 활용 부분적

4) 공유내용 특성

본 연구의 분석틀에서 공유내용은 크게 공간공유, 물품공유, 정보공유, 인재공유, 기타로 구분하였는데, 사례별 공유내용에 따른 특성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네 사례 모두 물품공유, 정보공유, 공간공유, 인재공유의 측면에서 관련된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플랫폼 구축을 통해 간접지원하고 있었는데, 내용 중에서는 물품공유와 공간공유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었다.

물품공유의 측면에서는 아이웃, 장난감, 책, 공구, 공공자전거 등의 공유를 고루 활용하고 있었으며, 정보공유의 측면에서는 공유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자체 내의 공유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공유하는 형태가 대다수였다. 다만 공유관련 정보에서 벗어나 폭 넓은 범위에서의 지자체 관련 정보 공유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나 부산시의 경우에는 공공데이터 개방 측면도 이루어지도 있었으나, 대전시나 전주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공간공유의 측면 역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사례지역들은 모두 지자체 내 공공기관의 편의시설이나 회의실 등을 공유하거나, 민간이나 공공시설의 주차장 공유를 통해 주차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활성화되어 있었다. 지역사회 단위에서의 공간공유는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대전시의 경우처럼 공동체 내 거점공간(카페, 도서관, 마을주방, 육아방)을 통해 공동체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례가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도 비슷한 형태의 공유마을을 촉진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빈집 관련 정보를 DB하고 이를 공유하려는 정책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기초 지자체 차원의 노력으로는 주목할만하다.

인재 및 재능공유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휴먼라이브러리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사람간 소통 및 교류를 통해 지혜를 공유하도록 촉진하고 있다. 인재·재능공유에 있어서는 아직 콘텐츠가 다양하지 못하며, 향후에는 다양한 계층간 혹은 세대간 경험·지식·재능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아이이어 발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5) 법적·행정적 지원체계 구축

네 지자체 모두 공유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로 공유(경제)촉진조례, 공유활성화지원조례 등의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 점이 공통적이다. 또한 정책을 전담하여 추진할 전담 행정체계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서울혁신기획관 하부 공유도시팀을, 부산시는 일자리경제실 사회적경제과를, 대전시는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를, 그리고 전주시의 경우에도 사회적경제지원단 사회적경제지원과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있다. 즉 이들 선도사례들은 각 지역 특성에 따라 소관부서는 다르지만, 행정지원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의 추진력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 내 존재하는 중간지원센터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특성도 공유한다.

6) 쟁점 및 과제

(1) 공동 소유가 아닌 공동사용에 초점: 공유의 개념 재인식에 기반한 새로운 정책발굴 긴요

서울시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공유 개념의 재인식 문제는 사실 타 지자체의 경우도 해당되는 공통적 이슈이다. 박원순 시장은 공동 ‘사용’에 초점을 두고 공유개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유개념의 인식은 서울시의 공유정책을 공동소유가 아닌 물품이나 공간, 서비스의 공동 사용에 초점을 둔다는 한계점이 지적되었다. 일각에서는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것을 만들고 투입한다는 점에서 공유의 원리 및 원칙과

위배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면 전주시에서 보여주는 자원활용형 공유정책은 필요 없는 생활용품을 기부받고, 이를 저소득층에게 공유하는 포용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서울시와는 대별된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유희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효율을 추구한다는 공유경제의 기본 원리를 재인식하고, 이러한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세부 정책 내용이 발굴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나아가 공공자원의 공공 활용이나 공공자원의 민간활용과 관련된 세부정책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고 있어, 민간 단체의 공유활동 촉진 지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유의 개념을 재인식하고, 어떤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하다.

(2) 공유에 대한 수요-공급간 불균형

부산시와 전주시의 사례에서 두드러진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이다. 부산시의 경우 예술공연이나 예술작품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에 관련된 특수장비 및 해양 관광물품을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홍보부족과 낮은 인지도로 인해 자원을 공유하는 사람과 공유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욕구 간 미스매치 현상이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주시의 경우에도 육아와 관련 공유활동에 대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재능, 문화, 경험의 공유를 위한 공간공유에 더 초점을 두고 있어 활용도가 낮다는 한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사례는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들(공급자)의 물품이나 활동과 공유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용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들 공급자-수요자 간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공유 관련 공급-수요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유 분야의 발굴 및 활성화, 그리고 공급의 활용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3) 공유활동에 대한 제도적 기반 미비

대전시의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경제 관련 정책의 추진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단체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계획이 부재하였고, 이는

사업의 타당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판을 가져왔다. 부산시의 경우에도 창업(스타트업)과 관련하여 사업방식 및 운영원리에 적합한 지원이나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가져왔다. 또한 재정적 예산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역시 해결해야할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스타트업 기업들이 입주하여 활용하는 「위워크」와 같은 코워킹 스페이스 사무공간 공유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사무실 내 여러 사업자 등록이 제약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제의 개선이나 새로운 법안 마련도 제기되고 있다.

(4) 지자체 주도 정책에서 탈피한 민-관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 필요

앞서 각 사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관련 정책의 내용이 민간자원의 민간활용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정책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행정 전담 조직을 명확히 하고, 자문기구 운영이나 중간지원조직과의 협력을 통해 민-관의 협력적 공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특성도 분명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공공-민간의 소통·협력을 통한 공유경제 활성화라는 분명한 정책 목표의 표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다. 나아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관련 정책이 수요-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유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각 지자체 내 공유관련 수요-공급에 대한 분명한 실태 파악의 부족과도 직접 연결된다.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지자체 주도의 공유경제 정책 추진에서 탈피하고, 민간의 수요와 욕구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대두시킨다.

제6장



지방자치단체 공유경제 활용 정책 모델 및 전략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공유경제 정책 모델 및 전략

제3절 법·제도적 기반구축

제1절 기본방향

1. ‘공유’ 개념 재인식에 기반한 공유도시(지역)로의 전환

앞서 서울시의 경우 공유의 개념을 공동사용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공동소유에 기반한 공유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이나 공간 그리고 서비스의 공유를 촉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협력적 소비와 유사하거나 하이브리드경제 개념에 가깝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공유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개념이 유희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효율을 추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공유정책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자원을 생산하거나 투입한다는 점에서 공유의 원리 및 원칙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따라서 공유가 활성화된 공유도시로의 진정한 발돋움을 위해서는 공유의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우선적이다.

Mclaren and Agyeman(2015)은 도시는 공유된 공간 내에서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 및 교환활동이라는 특징으로 구성되며, 따라서 모든 종류의 자원, 경험, 지식 등이 공유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도시 그 자체가 ‘공유 플랫폼’임을 강조하였다. 공유도시란 공유경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도시 또는 지역이라는 물리적·공간적 관점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개념이며, 공유경제의 경제적·기술적 특성뿐만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가치의 측면까지 포괄하여 접근하는 개념이다. 도시 및 지역 내에서 활용가능한 경제적 자원뿐만 아니라 도시의 기술, 기반시설, 인적·사회적 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또한 도시(지역)은 공유경제의 편익과 비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공유경제의 활용방식이나 쟁점 등도 가장 다양하게 생성될 수 있는 단위이다(김목한, 2015).

따라서 바람직한 공유란 무엇인지 공유의 개념을 재인식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공유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사회 내에서 공유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사례 지자체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민간단체의 공유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자체 내에서 공유할 수 있는 공적 재산을 지역 주민 모두가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유 범위의 확장 등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⁷¹

2.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공유정책 방향 설정

본 연구의 사례분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자체 단위에서 활용가능한 공유경제 관련 정책의 목표는 다양할 수 있다. 지역의 여건과 사회적 분위기, 해결해야 할 지역의 문제점, 지역에서 활용가능한 자원의 종류와 특성, 활용가능한 주체 등 다양한 지역 특성은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공유정책의 목적과 방향성 설정에 기초가 된다. 각 지자체는 지역 차원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공유경제의 범위를 설정하고, 활용가능한 공공민간 자원이 무엇인지, 활용가능한 공공민간 분야가 무엇인지 우선 검토한 후 공유경제 정책 방향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공유경제 관련 정책을 도입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 도입 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먼저 예측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를 통해 기존의 지역 내 작동하고 있던 시스템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고, 기존시스템과 새로운 공유정책이 융합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사례들이 활용하고 있는 유형별 공유정책을 참고하되, 지역의 정책 방향성을 토대로 새로운 정책내용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기존에 타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운영중인 사례를 벤치마킹한다고 해서 지역에서 그 정책이 효과적인 성과

71 광노완(2016: 161-192)은 공유도시 개념을 공유공간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도시 공유권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도시’로 정의하면서, 트인 공간에 대해 모두의 직접적인 향유권 및 공유공간에서 발생하는 지대 수익을 공동체 성원 모두가 균등하게 분배받을 권리를 도시공유권으로 개념화한다. 즉 단순히 공동 이용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도시라는 공간 내에서 공동 소유에 기반하여 다양한 공유 자원을 개발하고 평등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공유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를 창출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다각화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3. 공유경제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 인식

교통이나 숙박분야를 중심으로 급속히 발달한 공유경제는 개개인의 공유활동을 촉진하거나 민간분야에 의존하여 활성화되었던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공익성을 견지한 공유활동 촉진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며, 공공부문의 역할에 따라 공유경제의 활성화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는 곧 공유경제에 있어 공공부문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공유도시 또는 지역에서의 지방정부, 즉 지자체의 역할은 각 지역의 사회적·환경적·문화적 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는 크게 규제 담당자, 촉진자/조력자, 통합자/이행자, 협력자로 구분해서 논의된다. 우선 규제자(regulator)의 측면에서는 공유 개념과 부합하지 않는 법률이나 규정을 재논의 하거나, 활성화된 공유경제 부문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정책이나 규칙, 규정을 정의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공유경제의 촉진자(facilitator) 혹은 조력자(enabler)로서의 정부는 시민들의 협력을 유도하여 도시 서비스에서 사회혁신을 촉진시키는데 주요 초점을 둔다. 또한 포용적 도시 재생을 위한 공유 플랫폼을 장려하고 옹호하며, 시 차원에서 지역 공유 이니셔티브를 확장하고, 혁신프로그램, 해커톤 등을 개최함으로써 도시 전반에서 공유를 촉진시키는데 주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통합자(integrator) 또는 이행자(implementer)의 측면에서는 도시 및 지역 내에서 공유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도시서비스나 도시 자원(예: 시민공간, 물질적 재화 및 기술 등)의 공유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터 또는 플랫폼 등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 외에도 민간 부문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는 도시 차원에서의 도전 과제를 제기하거나 자원을 최적화하기 위한 공유 이니셔티브 등을 추진하는데 적극성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협력자(collaborator)의 관점에서는 도시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경제효과(예: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사회효과(예: 지역공동체 및 공동체의식, 소속감), 환경효과(예: 탄소저감,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관심을 갖고 공유 플랫폼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민간 지원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협력적 파트너십은 국가적 혹은 국제적 차원에서 다양한 주체들을 포괄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데, 시민, 공공기관, 지방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 및 학계나 연구계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음을 지칭한다.

각 지자체들은 이러한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지자체 공유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이들 다양한 역할의 가능성을 견지하고, 지자체 내에서 공유활동이 공익적이고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자체 본래의 기능 수행에 있어 어떠한 역할이 효율적일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표 6-1] 공유도시(지역)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역할	주요 활동
규제자 (Regula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 개념과 부합하지 않는 법률 및 규정 재논의 활성화된 공유경제 부문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정책, 규칙 및 규정 정의
촉진자/조력자 (Facilitators / Enabl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들의 협력을 유도하여 도시 서비스에서 사회혁신을 촉진 포용적 도시재생을 위한 공유 플랫폼을 장려하고 옹호 시 차원에서 지역 공유 이니셔티브의 확장 모색 혁신프로그램, 해커톤 등을 개최
통합자/이행자 (Integrators / Implemen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하지 않을 경우 추가비용이 따를 수 있는 도시서비스 및 자원(시민공간, 물질적 재화 및 기술 포함)의 공유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터 또는 플랫폼 구축 민간 부문에서 충분한 관심을 보이지 않은 시민 도전 과제를 제기하거나 자원을 최적화하는 공유 이니셔티브를 이행
협력자 (Collaborato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경제효과(예: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사회적 영향(예: 지역공동체 및 소속감), 환경적 영향(예: 탄소 저감)의 취지로 공유 플랫폼을 개발 및 지원하는 행위자들과 협력 파트너로는 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시민, 공공기관, 지방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 및 학계를 포함 가능

자료: WEF(2017)

4. 공유경제의 명암(明暗)을 고려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유희자원의 공유를 통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공유경제의 급격한 확산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의 국내 공유경제 정책 검토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 지자체의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은 2010년 중반 이후 급격하게 확대되었으며, 조례제정이나 공유경제 사업 추진 등 지자체 차원의 노력 역시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유경제 개념을 활용한 정책이 지역단위에서의 경제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간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는 논의가 이처럼 지자체의 폭발적 관심을 가져온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유경제 개념의 이면에는 다양한 문제점들도 지적되고 있다. 공유경제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거래상의 위험이나 사회적 안전성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유희자원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정확한 정보나 서비스의 질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문제도 제기된다. 거래상의 위험과 사회적 안전성에 관련된 문제의 발생은 공유경제 이용자의 연속적인 이탈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공유경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를 감시할 제도적 규제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유경제의 무분별한 활용은 참여자들 간 신뢰를 급속히 저감시키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전체에 대한 신뢰도를 감소시키는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소지도 있다.

따라서 공유경제관련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공유경제의 명과 암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검토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서 공유경제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꼼꼼하게 분석·검토하고, 부작용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해당 지자체에서 공유경제 정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그 효과가 성공적으로 창출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의 부작용을 최대한 저감시킬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활용하고자 하는 공유경제의 분야 및 유형, 현황 및 전망, 이슈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분야별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향 및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5. 참여 주체 간 협력 및 지역 사회 합의를 통한 제도 구축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조례 등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공유기업의 확산이나 공유활동에 있어 제도적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 공유기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존 사업 분야와의 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기준 마련과 인식 변화가 필요한데, 기존 경제적 관점에서 만들어진 법체계는 공유경제를 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이라는 뜻이다(반정화, 2017).

또한 본 연구의 사례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공유를 둘러싼 자원 제공자와 자원이용자, 즉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불균형 현상은 지자체 차원 공유경제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시킬 수 있다. 이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점진적인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이는 다양한 참여주체들이 참여하여 함께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사회 합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제2절 공유경제 정책 모델 및 전략

1. 정책 목표의 설정 및 방향성 정립 모델

공공영역의 공유경제 관련 정책은 민간이 주도하는 일회성 이벤트 형태나 시장이 주도하는 영리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개발되어서는 안되며, 지역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공익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목적과 방향성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책 프레임의 구성할 필요가 있는데, 공유경제 정책 프레임은 크게 기본요소, 정책요소, 혁신요소의 3가지로 구성될 수 있다고 강조된다(황영모 외,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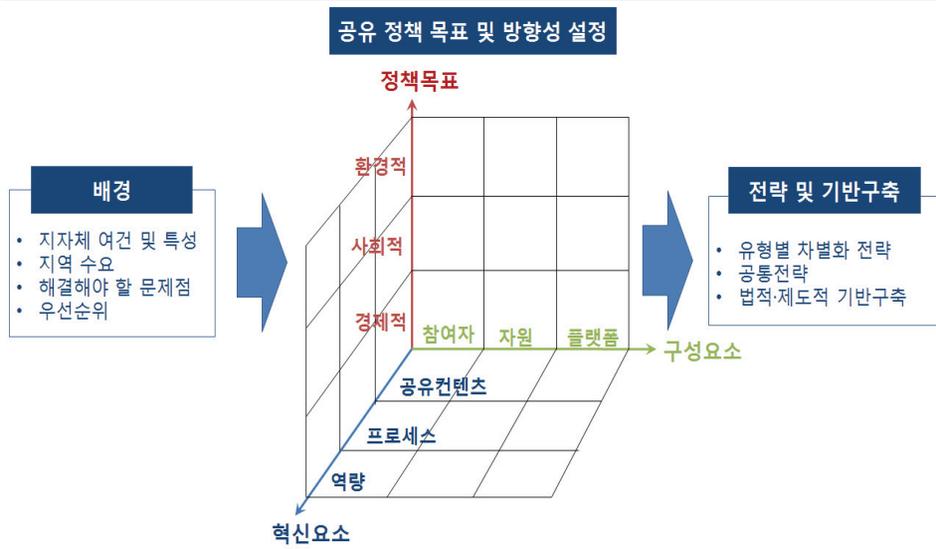
[표 6-2] 공유경제 정책 프레임 구성 요소

고려 요소	세부 내용
정책 목표(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효과(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사회적 효과(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적 관계 증진, 지역사회 문제해결) 환경적 효과(자원 재활용, 자원소비 감소)
공유경제 구성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 제공자, 공공, 민간 등을 포괄하는 참여자 활용가능한 자원, 활동 공유활동의 기반이 되는 플랫폼
혁신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하고자 하는 자원, 활동 등의 콘텐츠 공유활동을 촉진시키는 플랫폼 운영 방식의 다양화를 실현하는 프로세스 공유경제 관련 내용과 활동을 다양화하는 역량

우선 기본요소는 공유경제 관련 활동과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공급자-이용자)와 공유할 물건, 자원, 자산, 그리고 공유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으로서의 플랫폼을 고려할 수 있다. 이어 정책 요소로는 공유경제 정책을 통해 기대되는 정책 효과, 즉 비즈니스 활동을 통한 창출할 수 있는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유대감 강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포함하는 사회적 효과, 그리고 자원재활용을 통한 환경적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혁신요소로는 공유하고자 하는 자산이나 활동을 의미하는 콘텐츠, 공유활동을 촉진시키는 플랫폼 운영 방식의

다양화를 의미하는 프로세스, 그리고 공유경제 관련 내용과 활동을 다양화하는 역량을 고려할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요소의 결합에 따라 지자체 단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공유경제 관련 정책의 목표와 세부 전략이 구체화 될 수 있다.

[그림 6-1] 지자체 공유경제 정책 수립 모델



자료: 황영모 외(2015)를 참조로 수정 및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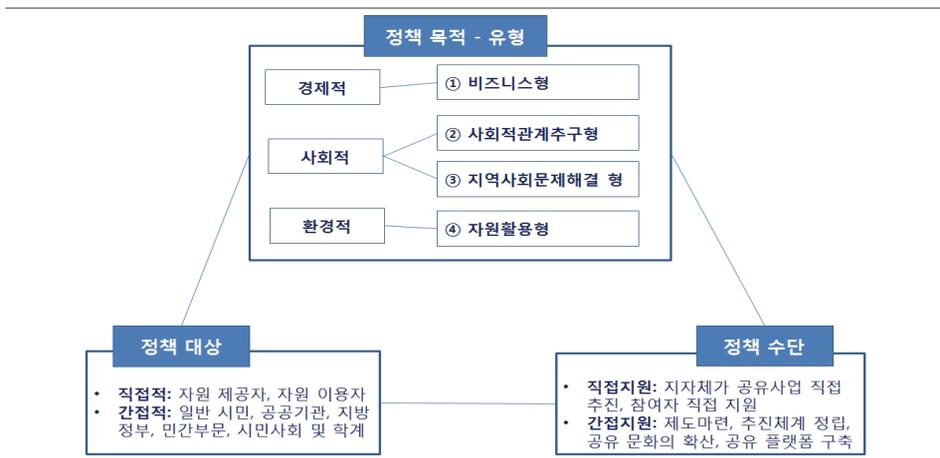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측면에서의 공유경제 정책 효과를 고려하고, 정책효과 창출을 위한 공유경제의 기본적인 구성요소, 즉 참여자, 활용가능한 자원, 플랫폼을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수립된 공유 정책의 목표와 구성요소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공유정책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혁신요소는 공유 개념의 재인식에 기반한 공유 콘텐츠의 발굴, 공유의 방식을 다양화하는 프로세스, 그리고 이를 통한 공유경제 전체의 역량강화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지자체 공유정책의 점진적인 효과성 및 적응성(adaptability)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정책 목표에 따른 유형화 및 세부 전략

1) 공유 정책 활용 목적에 따른 유형화

공유경제 관련 정책을 도입하려는 목적은 크게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경제적 목적은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목적에 초점을 두는 유형이며, 공유스타트업의 창업이나 공유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비즈니스형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사회적 목적은 사회적 가치 추구, 사회문제점 해결, 사회적 관계형성, 상호 신뢰 기반, 공동체 연대, 공유 인식 확산 등 사회적·공공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는 다시 사회적관계추구형과 지역사회문제해결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회적관계추구형은 지역 사회 내 개인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의식을 강화시키는 등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둔다. 지역사회문제해결형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유경제 개념을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목적은 친환경적 자원의 이용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자원활용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들 유형은 본 연구의 사례 지자체 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역의 여건이나 특성에 따라 서로 배타적 관계를 갖기 보다는 상보적으로 함께 결합될 수도 있다.

[그림 6-2] 정책목표에 따른 유형화, 정책 대상 및 정책수단의 고려



2) 정책 대상 및 정책 수단 우선 검토

지자체 차원의 공유 정책 목표가 수립되었다면 그 다음 고려할 부분은 정책의 대상과 정책의 수단이다. 정책의 대상은 공유활동에 참여하는 직접적 주체(이용자, 제공자)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할 수 있다. 포괄적인 범위에서 이해관계자는 일반 시민, 공공기관, 지방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 및 학계를 포함한다.

정책 수단은 기본적으로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대별될 수 있다. 직접지원은 지자체 자체가 공유사업을 추진하거나 공유 참여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행정 내의 공유사업(공공자원을 활용한 행정기관별 공유경제 사업)을 추진하거나, 공모방식을 통해 공유단체나 기업을 지정하는 등 민간의 공유경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간접지원으로는 공유활동을 촉진하는 기반의 조성, 즉 제도 마련, 추진체계 정립, 공유 문화의 확산, 공유 플랫폼 구축 등을 포함할 수 있다.

3) 유형별 세부 전략

(1) 경제적 목적 - 비즈니스형

우선 경제적 목적은 경제적 영리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형으로서, 공유활동을 통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증진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목적하에 추진되는 공유정책은 민간분야의 기업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정책 세부 전략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핵심 전략화 할 수 있다.

비즈니스형의 1단계에서는 공유기업의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시기에는 공유경제 스타트업 창업지원 프로그램, 창업지원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창업 금융지원 등의 전략이 추진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창업기반 활성화를 목적으로 채용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청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매칭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창업에 성공한 창업자들의 노하우나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창업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창업 확대 지원을 목표로 하는 시기로서, 공유기업 지정 및 육성, 공유경제 펀드 조성, 사회적거래소 설립 등을 통한 기반조성이 세부전략으로 고려될 수 있다. 비즈니스형 공유정책 추진시 고려사항으로는 기존 경제활동 주체들과의 충돌가능성 문제를 꼼꼼하

게 체크하고, 충돌발생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표 6-3] 비즈니스형 단계별 전략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 목표	공유기업 창업 분위기 조성	창업기반 활성화	창업확대지원
세부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경제 스타트업 창업지원 프로그램 창업지원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창업 금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청년, 노인 등 일자리 매칭 창업 노하우 공유 네트워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기업 지정 및 육성 공유경제 펀드 조성 사회적거래스 설립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경제활동 주체들과의 충돌가능성 문제 고려 필요 공유스타트업 등 기업지원의 근거규정,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비즈니스형 공유활동에 대한 안정성 문제 해결방안 모색 필요→예)안전보험 지원방안 등의 고려 가능 		

(2) 사회적 목적 - 지역사회문제해결형

지역사회문제해결형은 지자체 내에서 대두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유경제 개념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서울시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역의 이슈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데, 공유관련 정책을 통해 이들 변화하는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회문제해결형 1단계는 사회문제해결형 공유단체 및 기업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지역사회문제를 리스트업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또한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단체나 기업을 발굴하고, 우선순위 해결과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문제해결형 공유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타 부문으로의 확산을 유도한다. 2단계에서는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참여자를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 시기에는 지역사회문제를 특성별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혁신적 공유경제 활용방안을 공모하여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새롭고 혁신적인 프로세스의 발굴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는데, 디지털혁신을 활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혁신에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콘텐츠 발굴 및 문제해결 확산을 목표로 하는 시기이다. 이때에는 지역사회문제, 즉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에 대해 사회문제해결형 공유 단체·기업의 사업활동을 다각화하여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지역사회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는 사회적 분위기, 지역수요, 여건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융통성있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즉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모나 경진대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일 수 있다.

[표 6-4] 지역사회문제해결형 단계별 전략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 목표	사회문제 해결형 공유단체·기업 발굴	문제해결 프로세스 개발 및 참여자 확대	콘텐츠 발굴 및 문제해결 확산
세부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문제 리스트업 → 우선순위 선정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있는 단체, 기업 발굴 우선순위 과제 대상 시범사업 실시: 성과 공유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문제를 특성별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혁신적 공유경제 활용방안 공모 및 지원 문제해결형 리빙랩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혁신을 활용한 문제해결 프로세스 개발 및 다양화 기술혁신 지원 문제해결형 마을리빙랩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문제(콘텐츠) 지속적 발굴(분기별 or 년 2회) 사회문제해결형 공유단체·기업의 사업·활동 다각화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지역사회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는 공유단체, 기업의 활동 다각화가 관건 		

(3) 사회적 목적 - 사회적관계추구형

사회적관계추구형은 파편화된 주민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함께 의식을 강화시킴으로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시의 사례가 대표적인 사회

적관계추구형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적관계추구형 1단계는 마을 단위 공동체 공유 거점시설 플랫폼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공유거점시설을 기반으로 공유활동이 시작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세부적으로는 공유주방, 공동 회의실, 유아방 등의 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미술관, 공유서가, 공유카페 등 마을주민에게 활짝 열린 공간, 마을 주민간 정보공유 및 마을신문 등의 마을미디어 등을 추진할 수 있다. 2단계는 공동체 공유인식을 확산하고 공유 콘텐츠 확대를 목표로 하며, 이시기에는 마을 주민 간 정기적 모임,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신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공유에 대한 개념을 공유하고, 공동체 내 공유 콘텐츠를 개발하여 실행하는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3단계는 마을단위 공유공동체 모델을 구축하는 시기로서, 공동체 내 주요 주체의 육성을 통해 공동체 단위 자체 활동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마을화페, 마을민박, 마을공동육아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등 공동체 전체가 공유의 주체가 됨으로써 공유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시험적인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사회적관계추구형의 경우 참여자, 특히 공동체 구성원간 신뢰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뢰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업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공동체 내 다양한 공유활동을 공동체 전체적인 차원에서 직접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려면, 이를 주도할 수 있는 주체 발굴이 중요하다. 또 공동체 구성원간 합의에 기반한 모델의 발굴 및 사업의 실행이 이루어 질 때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5] 사회적관계추구형 단계별 전략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 목표	지역 공동체 공유 거점시설 플랫폼화	공동체 공유 인식 확산 및 콘텐츠 확대	공유공동체 모델화
세부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 공유공간 조성(공유주방, 공동 회의실, 유아방 등) 마을주민에게 활짝 열린 공간(미술관, 공유서가, 공유 카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주민 간 정기적 모임-소통 프로그램 운영 마을 공동체 공유 인식 확산 공동체 내 다양한 계층간, 세대간 소통 확대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 운영 주체 육성 공동체 단위 자체 활동 및 사업 추진 마을화페 마을민박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미디어(정보공유, 마을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 확산 • 주민 신뢰 기반 조성 • 공동체 내 공유 콘텐츠 개발 및 실행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구성원간 신뢰 확보가 필수 • 장기적으로 공동체 내 다양한 공유활동을 공동체가 직접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주체 발굴이 중요 • 공동체 구성원간 합의 도출 시스템 필요 		

(4) 환경적 목적 - 자원활용형

마지막으로 환경적 측면인데, 이는 자원의 재활용 및 자원의 소비 감소를 통해 환경적 가치를 추구하는 유형으로서, 유한한 자원의 공동활용에 초점을 두므로써,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가능한 다양한 자원을 재활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정책 세부 내용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두며, 전주시의 경우처럼 자원활용적 공유를 통해 지역의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자원활용형의 1단계는 공유자원의 조사 및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활용가능한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을 면밀히 조사하고, 공유자원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공공자원의 공유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공공기관 편의시설, 회의실, 공공데이터 등을 민간에게 개방하여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2단계는 자원공유의 이용자와 제공자를 확대함으로써 자원공유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활용가능한 자원별로 공유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은 물품, 공간, 재능 등으로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다. 물품의 경우 자전거, 자동차, 도서관, 장난감, 옷, 공구, 기계, 의료장비 등이, 공간의 경우 빈방, 오피스, 주차장, 공개공지 등이, 그리고 재능의 경우 품앗이은행, 문화예술 재능 공유, 휴먼라이브러리 등 노하우, 지식,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다. 마지막 3단계는 친환경적 공유자원의 발굴 및 이용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선도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공유사업이 공유사업을 위한 새로운 자원의 투입을 가져오는, 자원활용적이지 않

은 공유사업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3단계에서는 친환경적이고 자원활용적인 공유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용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또한 사례분석에서 나타난 것처럼, 공유활동은 주로 민간자원의 민간분야 활용에 치중되어 있어, 공공자원의 공공활용이나 공공자원의 민간활용도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공공자원의 공공활용은 공공기관 간 자원공유를 촉진하거나 공유활동을 개발하고, 공공자원의 민간활용은 활용가능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공유를 촉진하도록 초점을 맞춘다. 자원활용형의 경우 공유하고자 하는 자원(공급)과 공유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원(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원활용형의 경우 공유경제의 원리를 반영하여 공유를 위한 새로운 자원의 생산 및 투입을 지양하고, 친환경적 공유활동 확산에 초점을 두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6-6] 자원활용형 단계별 전략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 목표	공유자원 조사 및 플랫폼 구축	자원공유 이용자, 제공자 확대	친환경적 공유자원 발굴 및 이용 확대
세부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용가능한 공공·민간 자원 조사 • 공유자원 플랫폼 구축 • 공공자원 공유: 공공기관 편의시설, 회의실, 공공데이터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용가능한 자원별 공유프로그램 운영 • 물품: 자전거, 자동차 공유, 도서관, 장난감, 옷, 공구, 기계, 의료장비 등 물품 공유 • 공간: 빈방, 오피스, 주차장, 공개공지 등 공유 • 재능: 품앗이은행, 문화예술 재능 공유, 휴먼라이브러리 등 노하우, 지식, 경험 공유 • 빈집 DB 구축 및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친화적 공유활동 확산 • 공공자원의 공공활용 촉진: 공공기관 간 자원공유 촉진 및 공유활동 개발) • 공공자원의 민간활용 가능 콘텐츠 발굴 및 공유 촉진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할 수 있는 자원(공급)과 공유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원(수요)의 균형점 찾기를 위한 지속적 실태조사 필요 • 장기적으로 공유경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공유를 위한 새로운 자원의 생산 및 투입을 지양하고, 친환경적 공유활동 확산에 초점 		

4) 공통전략

(1) 디지털 기술 발전 트렌드에 대한 적극적 검토 및 활용

공유경제의 등장 배경으로 여러 사회·경제·환경적 요인들이 작용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가장 주요했던 동인(enabler)의 하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의 관건 중 하나는 유휴 자원을 공급하거나 수요하는 이용자들의 활발한 참여와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을 연계하는 정보기술이나 플랫폼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blockchain),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s)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도 등장하고 있다. 각 지자체 차원에서 공유경제 관련 정책을 도입함에 있어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국제적·국내적 동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활용하여 공유경제 정책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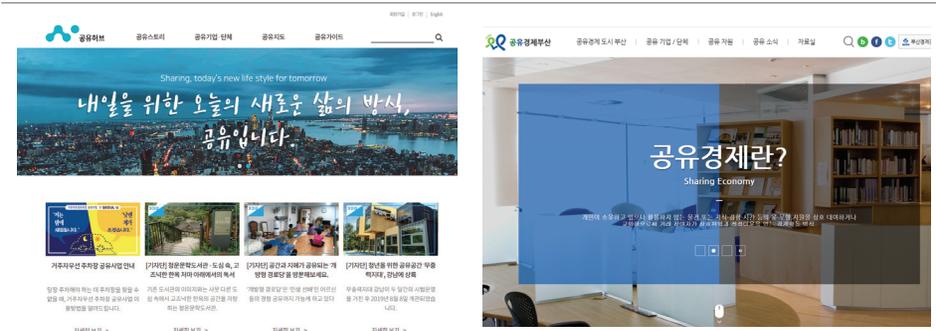
(2) 통합 플랫폼 구축

각 지자체 단위에서 공유경제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 통합플랫폼의 구축이다. 서울시와 부산시의 경우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이를 벤치마킹하여 지역에 맞는 형태로 개발하는 것도 방법이다.

통합플랫폼은 공유경제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참여자(기업, 단체, 개인)뿐만 아니라 공유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공유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접근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공유활동에 대한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하고, 서로 다른 부문에 대한 정보획득 뿐만 아니라 연계·협력도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이 통합플랫폼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나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공유플랫폼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혁신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 상의 통합플랫폼을 통해 구축된 관련분야별 혹은 서로 다른 분야간 네트워크를 오프라인 상에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연계전략을 수립하고, 오프라인 미팅 및 교류를 통해 온라인 상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6-3] 공유경제 통합플랫폼 운영 사례(서울시, 부산시)



자료: 공유서를 홈페이지 (<http://sharehub.kr/?jsessionid=3F348BDBBC2CCC6E7CB9F00B25F773C6>), 공유경제부산 홈페이지(<http://www.sharebusan.kr/bepa/template.php?midx=27>)

(3) 공유인식 확산

지자체에서 공유경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 확대가 필수적이다. 공유경제의 개념뿐만 아니라, 공유경제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효과, 공유경제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문 등에 대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인지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다양한 공유활동이 확산될 수 있다. 이는 곧 공유경제에 관련된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생활 속 공유경제의 의미를 인식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홍보 및 시민캠페인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홍보함으로써 공유경제 활용에 대한 현실성 있는 이해를 도울 수도 있을 것이다.

공유경제 관련 활동이나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관련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참여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각 지역 내 공유한마당, 공유박람회, 공유페스티벌 등의 이벤트를 개최하고, 직접 참여하여 체험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생활 속 공유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도 지자체 차원의 공유활성화를 위한 효과적 전략일 수 있다.

[표 6-7] 공유인식 확산 방안

방안	주요 내용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과정과 연계: 교육청과 협동으로 교과내용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사회교육·평생교육 과정과 연계: 공유경제 관련 강연, 특강, 포럼
홍보 및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팸플렛, 방송 및 언론 홍보 • 시민 캠페인: 관련 시민단체, 공유기업과 협력하여 캠페인 운영 •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참여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관련자 및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공유한마당, 공유박람회, 공유페스티벌, 생활 속 공유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제3절 법·제도적 기반구축

1. 조례 제정

공유경제 관련 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목적으로 공유경제 관련 정책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조례 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유경제 관련 조례의 명칭은 그 목적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경우 ‘공유촉진조례’, 부산시의 경우 ‘공유경제촉진조례’, 대전시는 ‘공유활성화지원조례’로 명명하고 있다. 이를 참조하여 각 지자체에서 목적으로 하는 공유정책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명칭을 발굴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례 제정의 과정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기반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조례의 내용은 공유경제 관련 정책의 목적 및 기본 원칙, 공유정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공유기업(단체)지정, 육성 지원 등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표 6-8] 조례의 주요 내용(안)

항목	주요 내용
제1조(목적)	공유경제의 의의 및 육성 목적
제2조(정의)	공유경제의 개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범위 등
제3조(책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시군 및 지방공기업의 역할 등)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타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주기, 수립 방법, 수립 주체 등
제6조(실태조사)	실태조사의 목적, 방법 등
제7조(공유경제 촉진사업)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대상
제8조(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	공유단체 및 기업의 지정 관련
제9조(보조금 등 지원)	보조금 지원 사항
제10조(공유촉진위원회)	공유경제 관련 기획심의 관련 위원회 설치
제11조(교육 및 홍보)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제12조(공유경제 플랫폼 구축운영)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 플랫폼 설치운영
제13조(지원센터 설치 등)	공유경제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2.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차원에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즉 조례의 제정과 함께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 기본계획의 수립이다. 대전시의 사례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경제 관련 정책의 추진은 주먹구구식의 사업진행을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모사업 추진시 공유단체 선정에 대한 기준이나 규모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계획이 없다면, 사업의 타당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즉 공유경제 관련 정책과 관련된 중장기적 비전과 목표, 세부 추진전략, 가이드라인 등을 포괄하여 기본계획이 정기적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공유경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공유단체(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하고,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표 6-9] 공유경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안)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정기적 실태조사

본 연구는 선도지자체 사례분석을 통해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주요 참여자(이용자, 공급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들 공급자-수요자 간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유관련 공급-수요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수요 충족을 통한 공유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공급의 효율성 증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각 지자체 내에서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일부 보완될 수 있다.

실태조사는 지역 주민의 공유경제 인식 현황, 지역의 공유자산 현황, 공유경제 참여자(단체, 기업) 현황, 공유경제 관련자들의 정책 수요조사 등을 포괄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표 6-10] 실태조사 주요 내용(안)

항목	주요 내용
지역주민 공유경제 인식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경제 인지, 자원소유 정도 공유경제 이용 및 기대 정도 공유경제 사용 및 제공 의향 등
지역 공유자산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형별 공유자산 현황 공유자산 이용 현황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단체 활동 현황 공유기업 운영 현황
정책 수요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주민 대상 정책 수요 조사 공유경제 직접주체(제공자, 이용자), 전문가, 관련자 등관련 정책 수요조사

4. 정책 지원체계 구축

1) 행정 지원체계 명확화

본 연구의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특징의 하나는 명확한 행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혁신기획관 하부 공유도시팀이 전담하고 있으며, 공유도시팀 - 자치구 공유사업팀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부산시의 경우에도 일자리경제실 사회적경제과가 전담부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전시 공유경제 정책 지원은 공동체지원국 공동체정책과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공동체정책과 - 사회적자본지원센터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주시의 경우에도 사회적경제지원단 사회적경제지원과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사회적경제지원과 -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각 지자체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함에 있어 명확한 행정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정책 전반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의 지정은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

해 업무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며, 이를 통해 정책 추진의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 공유경제 관련 정책의 도입 목적에 따라 지자체 행정 체계 내에서 소관 부서를 지정하거나(예: 경제적 목적-지역경제 관련 부서, 사회적관계형성 목적-공동체 관련 부서 등), 때에 따라서는 공유정책을 전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새로운 부서의 설립도 고려할 수 있다(예: 공유정책과).

2) (가칭)공유제도개선자문단 설립 및 운영

공유관련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문제는 지속적인 실태조사 등 정책대상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는 소통통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각 분야의 고유활동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이나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의 요구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대응으로는 공유경제 직접 관련자(이용자, 제공자)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결합하여 제기된 쟁점이나 제도개선 이슈 등을 함께 고민하여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가칭)공유제도개선자문단 설립이 고려될 수 있다. 특히 자문단이 단순히 전문가로 구성되어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 관련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3) 공유경제 중간지원조직 설립(지정) 및 운영

본 연구 사례분석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공유경제 관련한 활동 및 정책은 상당부분 민간영역의 자원과 인력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부문은 이들 민간부문의 활동을 지원하고 긍정적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민간부문의 자원과 활동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자체 공공부문의 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대두시킨다. (가칭)공유경제지원센터를 직접 설립하거나 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기 운영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하여 융합적·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민간과 공공부문의 네트워크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

에, 지자체에서 공유경제 관련 직접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의 위탁운영을 맡을 수도 있다. 또한 앞서 공유경제 분야를 막론하여 지자체 차원의 통합적인 공유플랫폼을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공유플랫폼의 운영 및 관리를 중간지원조직이 맡는 것도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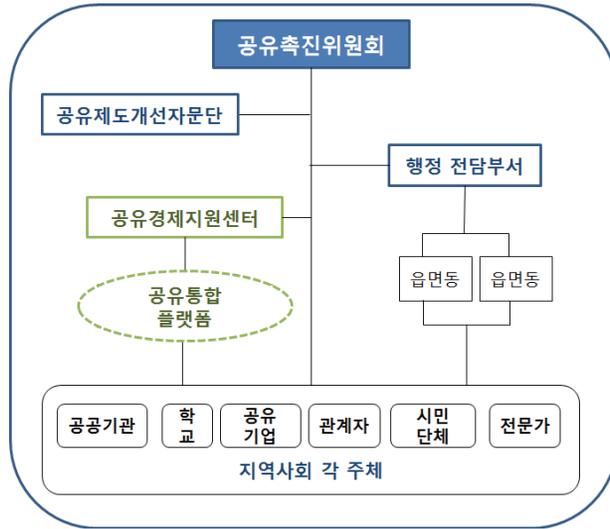
[표 6-11] 공유경제 중간지원센터의 주요 역할(안)

역할	주요 내용
정책제안	• 공유경제 정책(사업) 수립을 위한 정책 제안
조사·연구	• 공유경제 현황 및 실태 조사
공유경제단체 및 기업 인증	• 공유경제 단체 및 기업 인증제 운영
공모사업 운영	• 재정지원사업, 인큐베이팅 사업 등
공유통합플랫폼 운영	• 공유관련 통합플랫폼 운영 및 관리
교육 및 홍보	• 공유경제 관련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운영
상담 및 컨설팅	• 공유경제 단체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담 및 컨설팅 운영
네트워크 및 교류촉진	•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개최(행사, 포럼, 심포지엄 등) •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허브 역할 수행

4) 민관 협력적 지원체계 구축: (가칭)공유촉진위원회 설립 및 운영

민관 협력적 정책 지원체계는 공유경제와 관련된 정책의 주요 목표와 전략, 핵심과제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가칭)공유촉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축한다. 공유촉진위원회는 공유경제 관련된 각 주체들이 고루 참여하여 각각의 이해관계나 쟁점을 논의하여야 하며, 전문가, 행정 전담부서, 공유경제지원센터, 지역사회 각 주체, 즉 공공기관, 학교, 공유기업, 시민단체 등의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지향한다. 따라서 앞서 논의된 공유제도개선자문단 뿐만 아니라, 공유경제지원센터, 지역사회 각 주체들, 그리고 행정 전담부서가 함께 참여하여 협력함으로써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공유정책의 개발 및 세부전략마련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그림 6-4] 민-관 협력적 지원체계 (안)



참고문헌

- 강현숙. (2019). 「지속가능한 공유도시를 위한 지역정부의 역할」. 미래연구포커스.
- 곽노완. (2016). 「도시정의론과 공유도시」. 라움.
- 관계부처합동. (2019).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 김은란·차미숙·김상조·박미선. (2015). 「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김목한. (2015). 소유의 공유, 공유의 소유 - 공유경제의 명암에 대한 시론. 「도시인문학연구」. 7(2): 51-69.
- 김민정. (2015). 「공유경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김민정. (2017). 「공유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KDI Focus.
- 김시정. (2018). 「공유도시 시민인식 성과지표 도출 연구」. 서울디지털재단.
- 김점산·지우석·강상준. (2014).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미래와 성공조건」. 경기연구원.
- 김형균·오재환. (2013). 「도시재생 소프트웨어전략으로서 공유경제 적용방안」. 부산발전연구원.
- 나승권·김은미·최은혜. (2017).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추진현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박배균. (2015). 신자유주의 개발의 상상력과 포스트개발: 공유경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리학회지」. 4(2): 293-306.
- 반정화. (2014). 「서울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숙박공유 중심」. 서울연구원.
- 반정화. (2017). 「공유서울은 도시사회 문제 해결 수단, 공유기업·시민 주도형 네트워크 구축」. 서울연구원.
- 부산광역시. (2015).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활성화 시행계획」. 부산.
- 부산광역시. (2018).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활성화 시행계획」. 부산.
- 서울특별시. (2012). 「공유도시(Sharing City) 서울 1기 추진계획」. 서울.

- 서울특별시. (2015). 「공유도시(Sharing City) 서울 2기 추진계획」. 서울.
- 서울특별시. (2017). 「2017년도 공유서울 추진계획」. 서울.
- 서울혁신기획관. (2018). 「2018년 하반기 공유도시팀 업무계획」. 서울.
- 서울특별시. (2018). 「공유하는 즐거움: 공유서울」. 정책가이드.
- 성영조 외. (2016).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경기연구원.
- 유정호 외. (2016). 공공영역에서의 공유경제 정책집행에 관한 연구: 서울시 ‘한지봉 세대공감’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5(1): 115-203.
- 이경우. (2017). 「울산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울산발전연구원.
- 이미숙·서귀숙. (2017). 비혈연 고령자-청년의 홈셰어 공동생활. 「한국주거학회지」. 28(5): 61-71.
- 이상엽. (2014). 「부산형공유경제 구축방안」. 부산발전연구원.
- 이영범. (2016). 「공유와 공존, 그리고 공동체를 향하여」(http://www.imcd.co.kr/open_content/bbs.do?act=file&bcd=notice&msg_no=1731&file_no=3).
- 이장우 외. (2015). 「공유경제 현황 및 시사점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 이흥택·전지훈·박춘섭. (2016). 「공유경제 현황 및 활성화 전략」. 충남연구원.
- 장윤배·이주아·강성익. (2017). 공유도시 지표설정을 통한 공유도시 수준의 지역적 분포특성 분석. 「국토계획」. 52(3): 75-91.
- 정윤정·이승현·이종률. (2018). 「부산 민선7기 과학기술 아젠다의 정책적 함의」.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조용준. (2018). 「수원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최새로나·이수일. (2018). 「카셰어링 교통안전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개발연구원. (2015). 「공유경제 관련 제도개선방안 연구」. 기획재정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지역경제, 공유경제로 풀다」.
- 황영모 외. (2015). 「전라북도 공유경제 도입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 Acquier A., Daudigeos T. and Pinkse J. (2017). Promises and paradoxes of the sharing economy: An organizing framework, *Technological Forecasting & Social Change*. 125: 1-10.
- Agyeman, J., McLaren, D. and Schaefer-Borregoat, A. (2013). Sharing Cities. *Friends of the Earth. Briefing Paper*, September 2013. (www.foe.co.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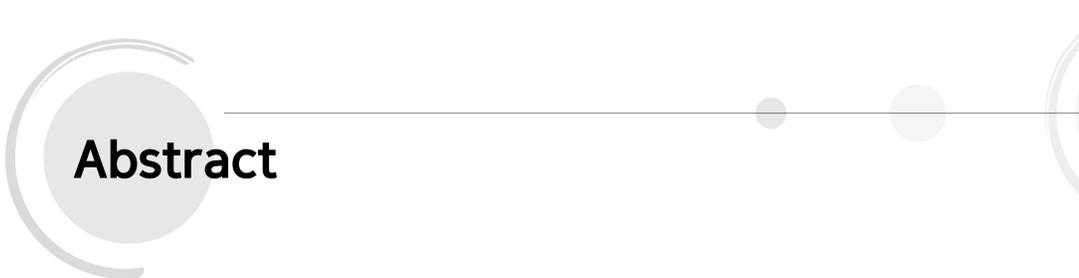
- sites/default/files/downloads/agyeman_sharing_cities.pdf).
- Belk, R. (2010). Sharing.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6: 715–734.
- Bernardi, Diamantini. (2018). Shaping the sharing city: An Exploratory study on Seoul and Milan.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203: 30–42.
- Bocker, L. & Meelen, T. (2016). Sharing for People, Planet or Profit? Analysing Motivations. *Environmental Innovation and Societal Transitions*. 15 September.
- Botsman, R. and Rogers, R. (2010). *What's Mine is Yours: The Rise of Collaborative Consumption*. HarperColins Publishers.
- Brachya and Colins. (2016). The sharing economy and sustainability. *Urban Sustainability Project*.
- Cooper R. et al. (2015).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Sharing Economy*.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Retrieved from http://www.localgovsharingecon.com/uploads/2/1/3/3/21333498/localgovsharingecon_report_full_oct2015.pdf).
- Federal Trade Commission. (2016). *The “Sharing” Economy: Issues Facing Platforms, Participants & Regulators*.
- Finck, M. and Ranchordas, S. (2016). Sharing and the City.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 Foster, S.R. and Iaione, C. (2016). The City as a Commons. *Yale Law & Policy Review*, 34(2).
- Giotitsas, C., Pazaitis, A. and Kostakis, V. (2015). A Peer-to Peer Approach to Energy Production. *Technology in Society*, 42: 28–38.
- Iaione, C. (2017). The right to the Co-City, *Italian Journal of Public Law*, 9(1).
- Iaione, C., Bauwens, M., Foster, S. et al. (2019). The Co-Cities Report: building a “Co-Cities Index” to mea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EU and UN Urban Agenda. (Retrieved from : <http://labgov.city/wp-content/uploads/sites/19/Co-cities-Open-Book-Report.pdf>).
- Lessig, L. (2008). *Marking Art and Commerce Thrive in the Hybrid Economy*, Penguin Press.
- Ma Huateng. (2018). 「공유경제」. (양성희 역). 파주: 열린책들. (원본발간일: 2016).
- McLaren, D. and Agyeman, J. (2015). *Sharing Cities a Case for Truly Smart and*

- Sustainable Cities*. Cambridge, MA: MIT Press.
- Munoz, Pablo and Cohen, Boyd D. (2017). Mapping Out the Sharing Economy: A Configurational Approach to Sharing Business Modeling.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Retrieved from : <https://ssrn.com/abstract=2959941>).
- Pais Ivana and Provasi Giancarlo. (2015). Sharing Economy: A Step towards the Re-Embeddedness of the Economy? . *Stato e mercato*. 105: 347-378.
- Petrini M., Freitas C.S. & Silveira L. M. (2017). A Proposal for a Typology of Sharing Economy. *Mackenzie Management Review*. 18(5).
- PwC. (2015). The Sharing Economy. (Retrieved from <https://www.pwc.com/us/en/industry/entertainment-media/publications/>).
- United States Census Bureau. (2017). Top10 Metro Areas with the Greatest Number of Kitchen Incubators. (Retrieved from <https://econsultsolutions.com/what-influences-the-spread-of-kitchen-incubators/>).
- Volker, B. & Flap, H. (2007). Sixteen Million Neighbors: A Multilevel Study of the Role of Neighbors in the Personal Networks of the Dutch. *Urban Affairs Review*. 43(2): 256.
- World Economic Forum(WEF). (2017). White Paper - Collaboration in Cities: From Sharing to 'Sharing Economy'.
- Zmud, J., Goodin, G., Moran, M., Kalra, N. & Thorn, E. (2017). Advancing Automated and Connected Vehicles. (Retrieved from <https://transportationops.org/sites/transops/files/Advancing%20Automated%20and%20Connected%20Vehicles....pdf>).

홈페이지

- United States Local Governments and the Sharing Economy 홈페이지 (<http://www.localgovsharingecon.com/>).
- Texas A&M Transportation Institute 홈페이지(<https://tti.tamu.edu/>).
- The City of Portland 홈페이지(<https://www.portlandoregon.gov/bds/65603>).
- 테스크레빗 홈페이지(<https://www.taskrabbit.com/r/5corf/try>).
- 사이언스익스체인지 홈페이지(<https://www.scienceexchange.com/>).

- Silver Sage and Wild Sage 홈페이지(<http://silversagevillage.com/>).
- 포틀랜드 주정부 「Fix-It Fairs」 홈페이지(<https://www.portlandoregon.gov/bps/41892>).
- 위즈돔 인트라넷 홈페이지(<https://www.wizdom-intranet.com/>).
- 미국 클라우드 키친 홈페이지(<https://www.cloudkitchens.com/>).
- 미국연방정부 DATA.GOV 홈페이지(<https://www.data.gov/>).
- 샌프란시스코 법령정보검색 홈페이지(<https://sfethics.org/laws/open-government>).
- 미국 Shared Renewable HQ 홈페이지(<http://www.sharedrenewables.org/>).
- 오클랜드 시청 홈페이지(<http://www2.oaklandnet.com/government/>).
- A Department of The City and County of San Francisco 홈페이지
(<https://sfenvironment.org/buildings-environments/urban-agriculture/urban-agriculture-permits>).
- 공유경제부산 홈페이지(<http://www.sharebusan.kr/>).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law.go.kr>).
- 부산광역시 갈매기키즈도서관 홈페이지(<http://www.bskl.kr/>).
- 부산광역시 그린큐레이터 홈페이지(<https://greencurator.co.kr/shop/>).
- 부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bepa.kr/>).



Abstract

Sharing Economy and Policy Strategies of Local Governments

The emergence of mobile technology has helped to create efficient marketplaces that allow us to share anything with the rest of the world. Internet, in combination with mobile technology, provides services that promote a certain lifestyle which has been referred to in a great variety of ways such as ‘shared economy.’ The sharing economy entails peer-to-peer exchanges for renting goods and services utilizing the Internet. In addition, it has created a lot of relationships and social networks that change the viewpoint of ownership and use, along with saving the cost of ownership. Although local governments are faced with a tsunami of sharing economy activities, no published research has yet examined its specific directions or strategies to revitalize the shared economy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and specific strategies for stimulating shared economy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he following specific questions were considered: how can shared economy be revitalized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 how can policies for the shared economy be stimulated at the local level? These were answered first through a review of the relevant literature and then through the analysis of in-depth case study.

In order to examine how shared economy can be revitalized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firstly, this study proposed an analytical framework based upon a typology of the main goals for shared economy policies. Basically, the goals for the application of shared economy policies can be considered into three aspects: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The social goal in addition can be divided into two different aspects: building social relationship and solving local social problems. Specifically, the core of the first economic type was defined based on transactions or sharing activities for economic reasons. The second type for building social relationship had been also

conceptualized as an important strategy to induce the active social participation and relationship building. The third type for solving local social problems was defined as the sharing activities in order to resolve social issues or problems such as elderly or baby caring services. The last environmental type was defined as collaborative consumption of resources for the sake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is type had been approached as reducing the cost of new product development and raw materials by using unused resources more efficiency. Based upon these analytical frameworks, this research selected four typical cases (City of Seoul, City of Busan, City of Daejeon, City of Jeonju) that have initiated local shared economy policies relatively early, and analyzed these four case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Based on the main findings, this research provides several suggestions to facilitate sharing economy polici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First of all, to promote successful shared economy, it is necessary to revisit the fundamental meaning of “sharing,” and to take steps to be transformed into “sharing cities.” Especially, this new understanding about sharing economy should focus on finding answers to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are the desirable sharing; what kinds of resources can be shared; and how can we best manage shared resources at the local or community level. Second, more practical directions and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on the reflection of different circumstances and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city. Third, the public sector should recognize their role in stimulating sharing activities especially for public interests. Specifically, local public agencies need to have a paradoxical role as regulator, facilitator, implementers and collaborators to maintain the sharing economy’s innovation and diffusions. Fourth, new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must be established on which local policies for sharing economy could be developed and facilitated. Fif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lear goals and facilitative strategies through collaborative partnerships among diverse local stakeholders including citizens, governments, and business groups as well. Finally, this research emphasizes that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that may include local ordinance, basic development plans, regular surveys,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 intermediary organization,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for sharing economy.



지방자치단체 공유경제
활용 방안

KRILA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KRILA



한국지방행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26464)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 (반곡동)
TEL | 033.769.9999 FAX | 070.4275.2317



9 788978 465474

9 3 3 5 0

ISBN 978-89-7865-474-6